
2022

장애인 분야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정책제안 발표회 자료

2022. 12. 27.(화)

목 차

- **[제안 1팀]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을 위한 3G-협업 프로그램 : 3G, 정부 (Government) - 게임 회사(Game company) - 대중(the General public) 참여 사업**
 - 정책제안 발표자료 3
 - 최종 정책제안서 19
 - 진행경과 대조표 34

- **[제안 2팀] 장애인 구강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D.O.B.T.P)**
 - 정책제안 발표자료 39
 - 최종 정책제안서 51
 - 진행경과 대조표 69

- **[제안 3팀] 시·청각 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정책**
 - 정책제안 발표자료 73
 - 최종 정책제안서 85
 - 진행경과 대조표 101

- **[제안 4팀] 시각 장애인의 자립적인 오프라인 의류 쇼핑 환경 조성 정책**
 - 정책제안 발표자료 105
 - 최종 정책제안서 115
 - 진행경과 대조표 131

• **[제안 5팀] 발달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인증제도**

정책제안 발표자료	135
최종 정책제안서	145
진행경과 대조표	155

• **[제안 6팀] 장애인 콜택시 통합 어플 개발 - Enable**

정책제안 발표자료	159
최종 정책제안서	169
진행경과 대조표	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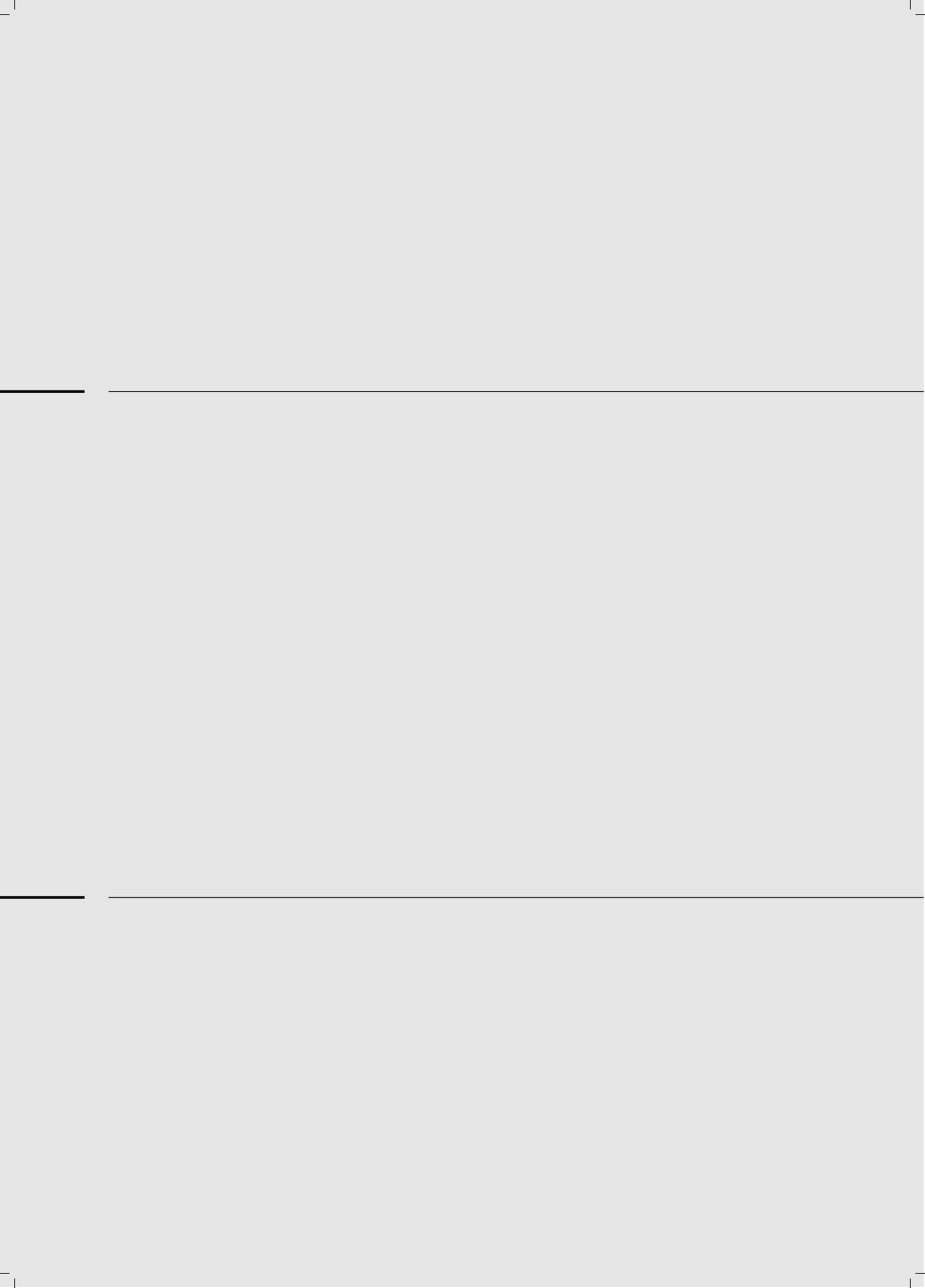
• **[제안 7팀] 시각/청각 장애인 통신장비 이용 보조기기 지원사업**

정책제안 발표자료	185
최종 정책제안서	190
진행경과 대조표	203

• **[제안 8팀]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정책제안 발표자료	207
최종 정책제안서	222
진행경과 대조표	232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을 위한 3G-협업 프로그램 :
3G, 정부(Government) - 게임 회사(Game company)
- 대중(the General Public) 참여사업





장애인의복 리폼 지원을 위한

3G-협업 프로그램 기획안

정부(Government), 게임 회사(Game company),
대중(The General public) 참여 사업

사조(김채연, 박지숙, 박채영, 최고은)



1. WHAT?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
정책 제안 배경

등판의 중간을 반으로 쪼개서 지퍼를 넣기
/ 쉽게 착용되도록 신축성 있는 소재 사용
→ 다양한 디자인이 요구됨

” 뇌병변 장애인 약 72%
신체 변형/운동기능 저하
스스로 옷을 입고 벗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보건복지부, 2017)

~~트렌치코트
기장이 긴상의~~

휠체어를 탄 사람은
허리가 뭉쳐 불편



기성복 불편

디자인 선택권 X
가격 문제
보편화 X



맞춤형 의복, BUT 선택권 부족

장애인을 위한 주요 옷 리폼 유형 자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서남보조공학기기센터
'의복리폼지원사업' 매뉴얼

장애인을 위한 주요 옷 리폼 유형

본인 체형보다
큰 옷을 고르거나...

리폼의 필요성



1. 단추 등 부자재 교체
손의 경직으로 셔츠나 바지 단추를 끼우기 어려운 경우 지퍼나 자석 등으로 바꿈



2. zip형 리폼
허리 부위부터 머리를 밀어넣어 입을 티셔츠나 후드티 등의 앞쪽을 잘라 지퍼를 장착



3. 옆트임
노령변 장애인 경직된 팔을 쉽게 넣을 수 있게 옷의 옆구리와 겨드랑이 쪽을 잘라 지퍼를 장착



4. 허리 밴딩
용변이 급할 때 바지를 빨리 내리거나 한 손으로도 내릴 수 있게 허리띠 부위에 고무밴드를 장착



2. WHY?

-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 ↳ 의복의 중요성과 기능
 - ↳ 현재 제도 보완의 필요성



**"패션은 즉각적인 언어다."
(Fashion is instant language)**

1. 의식주 중 하나

2. 신체 보호의 기능

3. 신체적 단점 보완

4. 소속감 및 상황에 맞는 옷차림

5. 개성 표현의 방식

6. 정서적 차원(긍정적 자아, 심리적 만족)

6-1. 장애인의 경우, 지체 장애로 동반되는

심리적 장애(낮은 자아개념, 신체이미지 왜곡)

문제를 보완하고, 긍정적 자아 형성,

독립적 생활과 사회참여 역할을 가능하게 함.

**의복의
중요성
& 기능**



기존 문제점

VS

3G-program

정부 차원의 노력 미약, 문제점 존재	제공 주체	정부 주도하에 기업, 대중이 통합하여 문제 해결
파급효과 부족, 홍보 부족	개인 및 사회	기업 콘텐츠를 활용해 홍보 정부가 개입하여 파급효과 up
장애인의 의복 선택 욕구 충족 X	대상자	의복 선택의 폭을 넓혀줌
리폼 가이드라인 부족하여 수선에 어려움을 겪음	수선집	리폼 가이드라인 제공받음



3. HOW?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내용
적용 방안 및 고려사항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및 효과성



~컬래버레이션~



~컬래버레이션~





~컬래버레이션~



개성
욕구



커스터
마이징



커스터마이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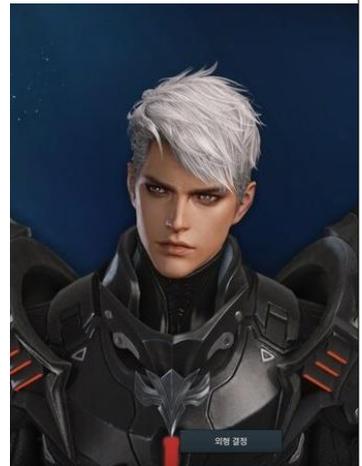
Customizing



메이플스토리 2



테일즈런너



로스트아크

내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가치라면 적극적으로 소비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

MZ

평소엔 합리적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아낌없이 소비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대량 생산이 아니라 주문생산 세대.
개성을 살려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욕구
그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



2019년 게임 제작사
연매출 1위: 넥슨
(2조 6,840억)



3G-협업 프로그램 모델

소비자

지역
수선집

중앙
정부

지방
자치단체

게임
제작사

대상자
(장애인)

3G-협업 프로그램 모델

소비자

지역
수선집

중앙
정부

지방
자치단체

게임
제작사

대상자
(장애인)

가치 소비
콘텐츠 제공

SNS 인증 이벤트

콜라보할 코디
아이템 제작

일정 비율의 수익

아이템 디자인 아이디어

예산
분배

리폼 가이드라인,
인증마크

리폼 바우처

리폼 서비스
바우처 사용

적용 방안 구체화

- 신청제 방식
-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
- 추가 연구 필요성

e.g.

	정도	Shape(형태)	Handle (통제 및 다룸)	개선사항
지체	중증	5	5	형태
	경증	3	3	수선
시각	전맹	1	5	구분, 이해
	약시	1	3	수선
지적	중증	1	4	훈련단축
	경증	1	2	간편화
신장	혈액	4	4	형태
	복막	2	1	수선

고려사항

1. 인클루시브 의상 디자인

2. 장애인 의복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 사회적 공헌과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코디 아이템에도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

3. 게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 →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인식

e.g. 야광끈이 부착된 디자인의 코디 아이템 출시

+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이동 지원을 위해 야광끈이 필요함을 스토리텔링

+ 움직임/속도와 관련된 능력치 아이템 함께 묶어서 출시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및 효과성

'게임' 콘텐츠 활용으로 인한 높은 접근성

71.3%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MZ 세대의 커스터마이징 욕구 반영

미닝아웃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방식

meaning + coming out

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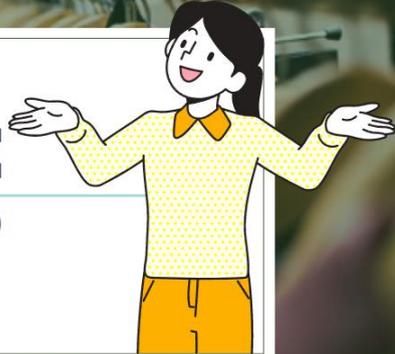
게임 이용자가
구매하는
아이템의 수익

+

정부
지원금

4. What Effect?

직접적 결과/긍정적 영향



직접적 결과

기성복에 대한
장애인의 불편함
해소

찾아가는
서비스

지역 경제
활성화



긍정적인 영향

정부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짐

기업

게임 회사의 이미지 개선 효과

개인

소비한 금액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

참고문헌

이다현.(2022).휠체어 사용 여성 지체장애인의 의복 실태 분석 및 바지 디자인 제언.
임명준, 안경미.(2017).뇌성마비 아동의 의복문제 해결을 위한 Co-creation 사례.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175-177.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 발간」.

권보경, 「“나보다 캐릭터 꾸미기가 먼저”...MZ세대는 ‘룩덕’?」, 『이데일리』, 2022년 1월 20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871634?sid=102>”(2022년 5월 10일 접속)
김미희, 「누구나 콘텐츠 만드는 ‘프로젝트 MOD’... 메타버스 신세계 열것」, 『파이낸셜뉴스』, 2021년
4월 4일, “<https://www.fnnews.com/news/202205091812498213>”(2022년 5월 10일 접속)
이세아, 「우리도 원피스 트렌치 코트 입는 봄, 언제 올까요」, 『여성신문』, 2021년 4월 4일, “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928>”, (2022년 5월 10일 접속)
이재덕, 「한국 게임사, 2019년 13조 벌었다...게임사 매출순위 탐 54」, 『녹색경제신문』, 2020년 4월
17일, “<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47576>”(2022년 5월 10일 접속)
이진욱, 「3500억짜리 고용?...넥슨, 허민 부른 진짜 이유」, 『머니투데이』, 2019년 12월 6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321385?sid=105>”(2022년 5월 10일 접속)
이태웅, 「게임업계, ESG 경영은 사회공헌 고민조차 없어」, 『뉴스퀘스트』, 2021년 4월 9일,
“<http://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09>”(2022년 5월 10일 접속)
임새라, 「[메카 밀.게.요] 20대 ‘룩덕’ 게이머는 왜 마비노기를 시작했을까?」, 『게임메카』, 2018년 12월
12일, “<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356&aid=0000030555>”(2022년 5월 10일 접속
)

참고문헌

전중휘, 「장애인은 청바지 입는데 10분...옷 찾아 삼만리, 한겨레21, 2020년 10월 30일,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38.html"(2022년 5월 10일 접속)

전중휘, 「단추 없애고 허리에 밴딩 '장애인 옷 리폼', 『한겨레21』, 2020년 10월 31일,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46.html"(2022년 5월 10일 접속)

전현수, 「메이플스토리 매출 전년비 69% ↑ ...넥슨 분기 사상 최대 매출', 『이코노믹리뷰』, 2019년 5월 10일,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822>"(2022년 5월 10일 접속)

정혜린, 「'확률형 아이템 논란' 이미지 털려고 연 메이플스토리 공모전...넥슨은 또 사과', 『한국일보』, 2021년 9월 6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27745?sid=105>"(2022년 5월 10일 접속)

최지이, 「가치를 사는 소비, 미닝아웃', 『국제신문』, 2022년 4월 20일,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200&key=20220420.99099005554>"(2022년 5월 10일 접속)

홍성식, 「레이스 염색하는 전통시장 남자', 『오마이뉴스』, 2022년 2월 17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024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2년 5월 10일 접속)

매일경제용어사전, "커스터마이징",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59&docId=20936&categoryId=43659>, 2022. 05. 10.

시사상식사전, "컬래버레이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931013&categoryId=43667>, 2022. 05. 10.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1). "큰 사이즈가 아닌 맞춤형 의복을 입고 싶어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0255&memberNo=21473067&vType=VERTICAL>, 2022. 05. 10

Q&A

감사합니다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을 위한 3G-협업 프로그램 : 3G, 정부(Government) - 게임 회사(Game company) - 대중(the General public) 참여 사업

제안 1팀

<제안 개요>

제안자들은 기성복에 불편함을 느껴 리폼하거나 큰 옷을 입어야 하는 장애인들의 의복 선택 어려움에 주목하였다. 현재 장애인의 의복 선택 폭이 매우 좁은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의복 선택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옷을 선택하고, 입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을 위한 정책을 제안한다.

3G-협업 프로그램 모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 제작사는 커스터마이징을 주력으로 하는 게임 제작사는 정부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매출의 일부를 장애인 의복 지원 사업에 이바지하는 코디 아이템을 제작한다. 유저들의 구매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정판으로 코디 아이템을 출시하고, 필요 시 코디 아이템과 능력치 아이템을 묶은 세트 상품도 출시. 본 프로그램의 홍보 및 매출 증가를 위해 SNS에서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의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 그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담은 코디 아이템을 제작한다면 본 프로그램의 취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게임 유저들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면 해당 상품을 통한 매출의 일부와 정부의 추가 예산으로 장애인 의복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마련한다. 셋째, 예산이 마련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수혜 대상이 될 장애인의 규모를 산정한다. 넷째, 정부는 앞에서 마련된 예산을 각 지자체의 수혜자 규모에 따라 적절히 분배한다. 다섯째, 예산을 제공 받은 각 지자체에서는 해

당 지역의 수선집들을 조사하며 장애인 의복 리폼이 가능한 업체와 수혜를 받을 장애인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들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복지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선정된 업체 중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업체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지정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수선 업체까지 방문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한다.

본 제안 정책을 통해 정부차원에서 시민들과 소통 활성화, 일반 대중 차원에서 사회문제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소비자 차원에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수선집 등 관련 자영업종 경제적 이익 창출, 게임회사차원에서는 ESG 경영 및 이미지 개선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의복은 1차적으로 추위, 더위로부터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등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과 동시에 “패션은 즉각적인 언어다(Fashion is instant language).” 라는 패션 브랜드 프라다의 미우치아 프라다가 남긴 말처럼 의복은 개인을 표현하는 즉각적인 수단으로 첫인상을 결정하는 요인이자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옷은 다리를 길어보이게 하거나, 키가 조금 더 커보이게 하는 등 신체적 단점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소속감을 나타내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면접, 결혼 등 중요한 자리에서는 상황에 맞는 옷차림이 요구되며 이런 점에서 정서적 차원에서도 의복은 긍정적 자아를 형성하고 심리적 만족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비장애인이 아닌 장애인에게도 해당된다.

특히 지체장애인은 신체적 장애로 인한 심리적 장애도 동반하게 되어 신체 이미지가 왜곡되거나 낮은 자아개념을 갖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문제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의복의 사용은 외적인 신체장애를 극복하게끔 하여 긍정적인 자아를 끌어내고,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다현, 2022)¹⁾.

하지만 중증장애인은 혼자 옷을 입는 것도 쉽지 않고,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도 마찬가지로, 트렌치코트 같은 옷을 입을 수 없다. 특히 자유롭게 팔이나 다리를 사용하기 힘든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더욱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현실이다. 뇌성마비 아동의 의복문제 해결을 위한 Co-creation 사례'라는 자료에 따르면, 장애아동을 위한 의복은 뒷길(등판)의 중간을 반으로 쪼개서 지퍼를 넣거나, 팔과 다리에 쉽게 착용되도록 신축성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등 다양한 디자인이 요구(임경준 외, 2017)²⁾된다. 이처럼 장애인은 기성복에 불편함을 느끼며, 장애인을 위한 의복은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디자인의 필요성이 매우 높다.

장애인 맞춤형 의복을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지만, 한정된 디자인,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장애인 의류는 디자인 선택권이 없는 것이나 다름 없다. 따라서 옷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옷으로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도 어렵다고 볼 수 있다.

1) 이다현.(2022).휠체어 사용 여성 지체장애인의 의복 실태 분석 및 바지 디자인 제언.

2) 임명준, 안경미.(2017).뇌성마비 아동의 의복문제 해결을 위한 Co-creation 사례.한국재활복지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175-177.

또한 장애인에게 기성복은 개성 표현과 기능의 측면에서 모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본인 체형보다 큰 옷을 고르거나, 발보조기 착용을 위해 바지 밑단 트임을 하고 지퍼를 다는 것, 단추 끼우기가 어려워 자석 등으로 단추를 대체하는 등 리폼을 해야 한다.

많은 장애인들이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싶어하며, 실제로 한겨레 21의 인터뷰에서 뇌성마비 장애인인 입씨는 옷을 잘 차려입지 않았을 때 무시당했던 사례³⁾도 존재할 만큼 때로는 옷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처럼 장애인의 옷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긍정적 정서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애인 의복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의복의 기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의복이 갖고 있는 중요성과 장애인들의 욕구에 비해 장애인 의복과 관련한 현재 제도가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서도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미약하다고 언급하였다.⁴⁾

현재 뇌성마비복지회 서남보조공학기기센터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리폼지원을 하고, 각 지역 복지관과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기업 유니클로에서도 장애인 리폼 의류 지원 사업을 진행했으나 일시적인 수준으로 그쳤다. 민간 차원에서 리폼이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파급효과가 부족하다. 또한 민간 차원에서 장애인 맞춤형 의복 개발이 이뤄지다보면 재원의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어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 노력 및 관심 가질 필요 있다. 따라서 각 주체들이 독립적으로 장애인 의복을 산발적으로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정부의 참여와 함께 이루어지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방안이 필요하며, 보다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이처럼 현재 장애인의 의복 선택 폭이 매우 좁은 현실 속에서 장애인의 의복 선택 권리 보장을 위해 장애인이 옷을 선택하고, 입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한다.

3) 전종휘, “장애인은 청바지 입는데 10분…옷 찾아 삼만리”, <한겨레21>, 2020. 10. 30.
(http://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438.html, 2022. 5. 10.)

4)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2021). “큰 사이즈가 아닌 맞춤형 의복을 입고 싶어요”.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0590255&memberNo=21473067&Type=VERTICAL>, 2022. 05. 10.

II. 정책연구 방법

1. 고려 사항

장애인 의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복 리폼 바우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을 위해 고려해야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민간에서 이루어지던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여 리폼 바우처를 지원하여 장애인 의복 문제에 대한 관심 재고 및 가이드라인 제시

둘째,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복지 제공 주체로 참여시켜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콘텐츠 제시

2. 정책 프로그램 기획 내용

고려 사항을 바탕으로 정부(Government), 게임 회사(Game company), 대중(the General public)이 함께하는 3G-협업 프로그램 기획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기업이 논의를 통해 장애인 의복 문제와 관련해 협업 내용을 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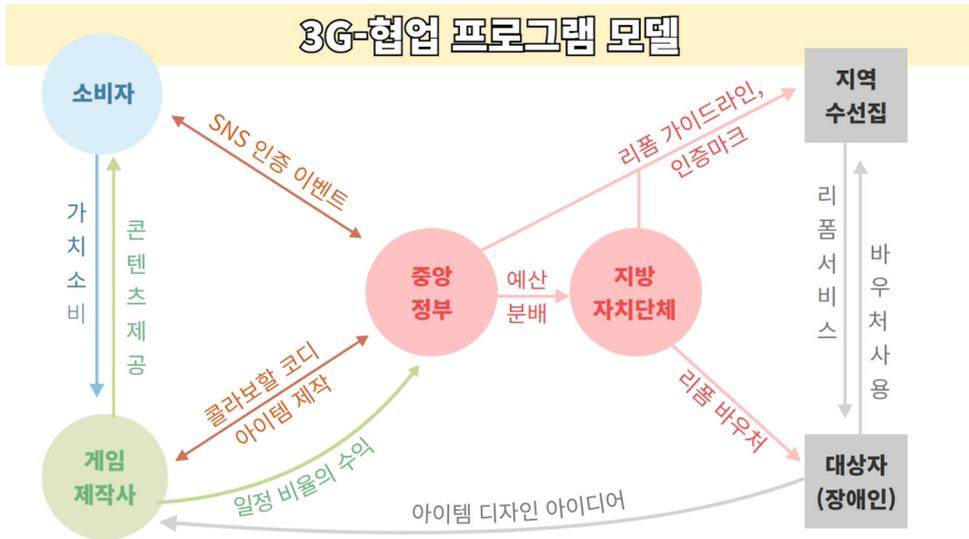
둘째, 기업은 플랫폼으로써 콘텐츠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셋째, 소비자인 일반 대중은 콘텐츠를 소비함으로써 복지 제공에 참여한다.

넷째, 정부는 기준을 세워 수혜를 받을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업을 통해 소비자가 소비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제공받은 후 예산을 확정하여 실제 리폼 바우처를 제공한다.

Ⅲ. 제안 정책 내용

1. 정책 내용



〈 그림 1. 3G 협업 프로그램 모델 〉

제안 정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와 게임 제작사간의 콜라베이션(collaboration, 사전적으로 공동작업·협력·협작이라는 뜻으로, 이종 기업 간의 협업.)⁵⁾을 진행해 자금을 마련하고 장애인들을 위한 의복 리폼 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이다.

1) 게임 시스템 현황 및 설명

MZ 세대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는 게임의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 생산자나 수공업자가 손님들이 청하는 것에 따라 제품을 만들어 주는 일종의 맞춤 제작 서비스. 게임에서의 커스터마이징은 흔히 게임 캐릭터의 코디 아이템을 유저가 원하는 대로 꾸미는 것을 말한다.)⁶⁾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게임 속 커스터마이징에 대해 Z세대는 대량생산이 아니라 주문생산 세대이기에 개성을 살려 남들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고,

5) 「콜라베이션」, 『시사상식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931013&categoryId=43667>

6) 「커스터마이징」, 『매일경제용어사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59&docId=20936&categoryId=43659>

그를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설명⁷⁾한 것 처럼 시스템과 결속되어 게임 제작사의 매출을 책임진다. 특히나 코디 아이템의 경우 다른 능력치 아이템과 달리 한정판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유저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한다.

2019년 기준 국내 게임사 실적 1위는 연 매출 2조 6,840억을 달성한 넥슨⁸⁾. 넥슨의 이러한 매출의 대부분은 커스터마이징이 주류인 마비노기⁹⁾, 메이플스토리, 던전애파이터에 집중되어 있으며¹⁰⁾¹¹⁾, 게임 산업에서 커스터마이징은 일종의 주력상품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과 게임 유저들의 욕구를 반영해 복지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의복' 지원 사업인 만큼 게임 속에서 자유롭게 커스터마이징을 하듯이 장애인 또한 입고 싶은 의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관성 존재한다.

2) 3G-협업 프로그램 모델 설명

본 프로그램은 포스트 복지국가의 시대에서 나타나는 복지다원주의 현상에도 상응한다. 게임 제작사들은 재정 마련 플랫폼을 제공하며, 개인이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재정을 지원. 지방정부는 수선 업체와 대상자들을 정하는 데 참여하게 됨으로써 재정과 공여에서 민간의 역할이 확대되고 정부의 개입은 축소되는 현대의 양상에 맞춘 프로그램이다. 3G-협업 프로그램 모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 제작사는 커스터마이징을 주력으로 하는 게임 제작사는 정부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해 매출의 일부를 장애인 의복 지원 사업에 이바지하는 코디 아이템을 제작한다.

유저들의 구매욕을 증진시키기 위해 한정판으로 코디 아이템을 출시하고, 필요 시 코디 아이템과 능력치 아이템을 묶은 세트 상품도 출시. 본 프로그램의 홍보 및 매출 증가를 위해 SNS에서 구매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의복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장애인의 목소리를 담아 그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담은 코디 아이템을 제작한다면 본

7) 권보경, “나보다 캐릭터 꾸미기가 먼저”...MZ세대는 ‘룩덕’?, <이데일리>, 2022. 1. 20.(<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4871634?sid=102>, 2022. 5. 10.).
8) 이재덕, “한국 게임사, 2019년 13조 벌었다...게임사 매출순위 탑 54”, <녹색경제신문>, 2020. 4. 17.(<http://www.greened.kr/news/articleView.html?idxno=247576>, 2022. 5. 10.).
9) 임새라, “[메카 밀.게.요] 20대 ‘룩덕’ 게이머는 왜 마비노기를 시작했을까?”, <게임메카>, 2018. 12. 12.(<https://sports.news.naver.com/news.nhn?oid=356&aid=0000030555>, 2022. 5. 10.).
10) 이진욱, “3500억짜리 고용?...넥슨, 허민 부른 진짜 이유”, <머니투데이>, 2019. 12. 6.(<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321385?sid=105>, 2022. 5. 10.).
11) 전현수, “메이플스토리 매출 전년비 69% ↑...넥슨 분기 사상 최대 매출”, <이코노미리뷰>, 2019. 5. 10.(<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822>, 2022. 5. 10.).

프로그램의 취지 홍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게임 유저들이 해당 상품을 구매하면 해당 상품을 통한 매출의 일부와 정부의 추가 예산으로 장애인 의복 지원 프로그램 예산을 마련한다.

셋째, 예산이 마련되면 각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수혜 대상이 될 장애인의 규모를 산정한다.

넷째, 정부는 앞에서 마련된 예산을 각 지자체의 수혜자 규모에 따라 적절히 분배한다.

다섯째, 예산을 제공 받은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선집들을 조사하며 장애인 의복 리폼이 가능한 업체와 수혜를 받을 장애인을 선정하고, 해당 업체들에서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복지 대상자에게 제공한다. 선정된 업체 중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업체를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지정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 수선 업체까지 방문하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적용 방안 구체화

신청제 방식을 통해 목표 예산을 정해놓거나 우선 예산이 정해지면, 사업 대상자의 규모를 확정된 후 신청을 받은 후 수혜자를 선정한다. 수혜자는 장애 유형마다 심각성에 따라 점수를 다르게 매겨서 선정한다. 장애인 의복 문제에서는 장애 유형과 정도가 고려되어야 한다. 자문 결과, 장애 유형에 따른 의복 문제의 심각성은 'Shape 불편(형태에 따른 디자인 개선의 필요성)'과 'Handle 어려움(옷을 다루는 것에 있어 디자인 개선 필요성)'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즉 형태와 통제의 두 가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은 불편함 정도에 따라 1점(경증)에서부터 5점(중증)으로 나누어 평가될 수 있다.

〈 표 1.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의복 환경 〉¹²⁾

구분	정도	Shape(형태)	Handle (통제 및 다룸)	개선사항
지체	중증	5	5	형태
	경증	3	3	수선
시각	전맹	1	5	구분, 이해
	약시	1	3	수선

12) 사단법인 품턱움재단 제공 (2022. 10. 26 자문 모임)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을 위한 3G-협업 프로그램
: 3G, 정부(Government) - 게임 회사(Game company) - 대중(the General public) 참여 사업

지적	중증	1	4	훈련단축
	경증	1	2	간편화
신장	혈액	4	4	형태
	복막	2	1	수선

필요에 따라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해 차등적인 리폼 바우처 금액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 존재하며 일부 장애인 의복은 수선집을 넘어 제작 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하기에 이런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리폼 바우처의 비용을 측정하고 보다 정확한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서는 장애인 의복에 대한 전문가의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장애인 의복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추가적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장애인 의복과 관련한 보다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어 긍정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고려사항

3G-협업 프로그램 모델에서 고려해야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의복 제작 시, 장애를 강조하지 않고 누구나 입고 싶은 옷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서 가이드라인 제작 시 이를 고려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의 경우, 치마가 휠체어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짧게 만들고 허리는 벨크로 활용, 소매 끝에 점자를 표기, 또는 스카프에 색상과 모양 등의 점자 정보를 담는 것, 이동 지원을 위한 야광끈을 부착 등의 디자인 사례를 고려한 의복 제작이 필요하다.

셋째, 복지적 가치와 더불어 사회적 공헌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한다. 유니세프 프로미스 링의 경우, 후원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반지 디자인도 ‘갖고 싶은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는 사례처럼 실제 장애인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코디 아이템을 디자인할 경우 장애를 강조하지 않고 소비자도 갖고 싶어지는 아이템을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게임을 활용한 스토리텔링이 필요성하다. 소비자가 어떤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장애인 맞춤형 의복이 만들어진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게임 내 스토리텔링을 활용하

여 전달한다. 예를 들어, 야광끈이 부착된 디자인의 아이템을 출시한 후 아이템 설명 란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은 이동 지원을 위해 야광끈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적어 스토리텔링을 진행한다. 코디 아이템과 능력치 아이템을 묶어서 출시할 경우, 더욱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야광끈처럼 이동 지원과 관련한 디자인을 담은 코디 아이템은 공격 속도를 빨라지게 하거나, 속도가 빨라지게 하는 등 움직임/속도와 관련된 능력치 아이템과 묶어서 출시하면 효과적 스토리텔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컬래버레이션 홍보 시에도 장애인 의복에 대한 설명을 담은 짧은 영상 등을 함께 배포하여 장애인 의복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4.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및 효과성

타 정책과 비교하였을 때 3G-협업 프로그램의 기존 방안과는 다른 차별점과 효과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게임’이라는 콘텐츠를 활용해 장애인에게 리폼 바우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높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71.3%가 게임을 이용¹³⁾한다는 통계 결과에서 볼 수 있듯 게임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이다. 정부가 게임 제작사 없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보다 게임 회사와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둘째, MZ 세대의 커스터마이징 욕구를 반영할 수 있다. 이 방법은 MZ 세대의 커스터마이징 욕구를 반영한 혁신적인 방안으로 많은 사용자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MZ 세대는 옷을 본인의 정체성 표현의 수단으로 보고 옷을 통해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게임 캐릭터를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꾸밈으로써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MZ 세대의 커스터마이징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셋째, 미닝 아웃 소비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다. 미닝아웃은 신념을 의미하는 ‘meaning’과 벽장에서 나온다는 뜻을 지닌 ‘coming out’의 합성어로, 소비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가치관을 드러내는 가치 소비를 뜻한다. 요즘 20·30세대는 가격만 소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가치를 소비의 중요한 기준으로 생각하기에 기업이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가도 소비를 유도하는 요소로 작용. 일명 미닝아웃 소비 트렌드에도 적합한 방

13) 한국콘텐츠진흥원(2021). 2021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1-235.

식이다. 게임 회사는 미닝아웃 소비 트렌드에 적합한 방식에 참여하여 회사 홍보 및 사회공헌 활동 가능하고, 소비자는 장애인 의복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닌 아이템 소비에 충분히 투자할 것이다. 기업에서 소비자가 장애인 의복 문제 해결에 참여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SNS 인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SNS 인증 열풍이 불어 더욱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5. 예산 및 자금 조달 방법

1) 자금 조달 방법

정부와 함께 협업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과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아이템의 수익을 매칭하여 자금 마련하도록 한다.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기 위해 구매하는 콜라보 아이템 수익의 10%에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여 예산을 확보하며 매칭 비율은 내부 재정 상황에 따라 게임 회사와 정부가 논의 후 적절한 비율을 합의해서 지원 가능하다.

2) 정책 특성과 예산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 사업은 게임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구매해야만 자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고정적이지 않다는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모든 장애인에게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체 장애나 뇌병변 장애와 같이 옷을 입을 때 어려움이 있어 의복 리폼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정 및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예산이 마련된 후 지원 가능한 범위를 지정, 신청을 받은 후 지정한 범위에 맞게 선정해야한다. 신청자가 지원 대상보다 많을 경우, 장애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심각성에 따라 점수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선발하도록 한다.

3) 리폼 바우처 형태

선정된 대상자들에게는 온라인 쿠폰을 지급하여 의복을 리폼할 수 있도록 한다. 만약 온라인 쿠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리폼 바우처를 직접 전달 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함

V. 기대효과

1) 직접적 결과

장애인은 기성복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기존에 장애인들은 의복 디자인을 선택할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으며, 기성복을 리폼해야만 했다. 장애인 의복 수선은 수선집에서도 자주 하지 않는 개조이기에 이 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즉 리폼을 해야 하는데, 원하는 리폼을 해줄 수 있는 수선집을 찾는 것에서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이 사업으로써 정부에서의 수선집 지정 및 가이드라인 제공으로 장애인은 의복 수선을 쉽게 맡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리폼 바우처를 통해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게임 유저가 지불한 돈의 일부와 정부 지원금을 바탕으로 마련된 리폼 바우처를 통해 장애인은 동네 수선집에서 원하는 디자인의 기성복을 자신의 몸에 맞는 편안한 스타일로 수선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고, 이전보다 개선된 의복을 착용하여 긍정적 정서를 형성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도 일명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직접 수선집에 옷을 맡기거나 찾는 과정 없이도 리폼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어 편리성을 갖는다.

경제적 효과로는 동네 수선집, 세탁소를 리폼 바우처 사용처로 지정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장에서 단추, 실, 지퍼 등을 판매하는 부속가게 대표의 인터뷰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많은 세탁소와 옷 수선집이 영업을 중단¹⁴⁾하였으며 이 부속가게도 매출액이 70% 감소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기업이 아닌 지역 수선집을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하면 조금이나마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게임과 같은 오락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와 협업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국 게임 시장 규모는 2020년 2,096억 5,800만 달러로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출액도 증가하는 추세로, 게임 산업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대표적인 게임 제작사 넥슨에서 메타버스 플랫폼 프로

14) 홍성식, “레이스 염색하는 전통시장 남자”, <오마이뉴스>, 2022. 2. 1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1024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2022. 5. 10.).

젝트를 진행하는 등 게임 제작사는 게임 산업과 더불어 메타버스와 같은 트렌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전망이 기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 중인 분야인 게임 산업을 활성화 시키면서 사회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장하는 게임 산업과 정부가 협업해서 3G-협업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회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정책 실행시의 긍정적인 변화 및 기대효과

3G-협업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업 참여자가 있는 만큼, 정부, 기업, 개인의 모든 사업 참여자가 저마다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는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으며, 일반 대중 차원에서는 게임이라는 콘텐츠는 시민들에게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게임회사와 정부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 시민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다. 소비자는 그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 구매 수익으로 장애인들의 의복 지원에 참여하여, 장애인에게 의복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고, 유저들은 3G 사업을 통해, 게임을 하며 아이템을 사고 캐릭터를 꾸미는 것에서 그쳤던 기존의 방법과 달리 자신이 지불한 돈의 일부가 장애인들의 리폼 바우처 마련에 활용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과정을 통해 게임 유저들은 자신이 사회를 위해 기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고찰하게 한다. 이런 과정에서 수선집은 장애인 의복을 리폼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게임 회사 차원에서는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하여 ESG 경영 실천 및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온라인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다¹⁵⁾¹⁶⁾. 하지만 이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게임 아이템을 통해 얻은 수익의 일부로 장애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써 회사의 이미지 개선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요즘 기업 경영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모두 고려한 ESG 경영이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게임 회사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Social 부분에서 ESG 경영을 실천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

15) 이태웅, “게임업계, ESG 경영은 커녕 사회공헌 고민조차 없어”, 〈뉴스퀘스트〉,

2021. 4. 9.(<http://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409>, 2022. 5. 10.).

16) 정혜린, “확률형 아이템 논란’ 이미지 털려고 연 메이플스토리 공모전...벡슨은 또 사과”, 〈한국일보〉, 2021. 9. 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27745?sid=105>, 2022. 5. 10.).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을 위한 3G-협업 프로그램
: 3G, 정부(Government) - 게임 회사(Game company) - 대중(the General public) 참여 사업

한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을 위한 3G-협업 프로그램
: 3G, 정부(Government) - 게임 회사(Game company) - 대중(the General public) 참여 사업

참고문헌

- 임명준, 안경미. (2017). 뇌성마비 아동의 의복문제 해결을 위한 Co-creation 사례, 한국재
활복지공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17(11), 175-177.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2021 게임이용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콘텐츠진흥원. 1-235.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2021 대한민국 게임백서 발간. 한국콘텐츠진흥원. 1-730.
- 이다현, 서승희. (2022). 휠체어 사용 여성 지체장애인의 의복 실태 분석 및 바지 디자인
제언.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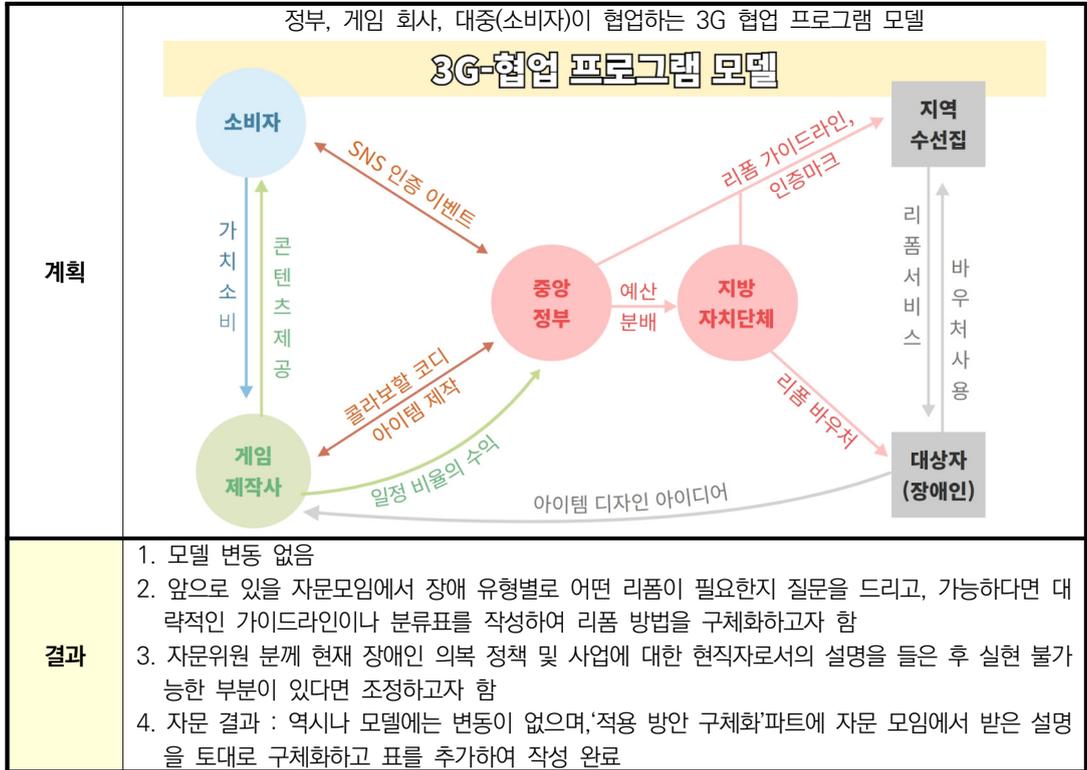
계획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을 위한 3G-협업 프로그램 : 3G, 정부(Government), 게임(Game company), 대중(the General public) 참여 사업
결과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을 위한 3G-협업 프로그램 : 3G, 정부(Government), 게임(Game company), 대중(the General public) 참여 사업

2. 연구방법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추가 문헌 및 사례 조사 2. 자문모임 피드백 반영 및 구체화 3. 현재 정책 및 방안과의 비교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에 작성한 기획안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을 자체 피드백 이후 조사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피드백 진행 중이며, 2번과 연계하여 자문 모임 이후 완료할 예정. 2. 실현가능성을 높이고자 논의 및 추가 조사, 특히 적용방안에서의 구체화 방안을 논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문모임에서 받은 피드백과 질문에 대한 답, 중간 피드백을 토대로 구체화할 계획 - 10월 자문모임 이후 진행할 예정 - 자문 결과 : '적용 방안 구체화'파트로 작성 완료 3. 자문위원 분께 현재 장애인 의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정책을 질문 드리고 자하며, 답을 들은 이후 필요하다면 해당 정책을 조사하여 더 구체적으로 비교하고자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월 자문모임 이후 진행 예정 - 자문 결과 : 질문 결과 이미 존재하는 유사한 정책은 없다는 답변을 받음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을 위한 3G-협업 프로그램
 : 3G, 정부(Government) - 게임 회사(Game company) - 대중(the General public) 참여 사업

3. 정책내용



4. 적용방안

계획	위에 첨부한 3G-협업 프로그램 모델에서 제시한 것처럼 리폼 바우처 제공 방식으로 적용
결과	<p>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적용방안을 구체화하고자 하며, 이에 대해 논의하여 세 가지 분야로 분류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의 구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공해야함. - 사업 대상자 선정 방법에서 선정 주체(정부 or 지자체), 방식(신청제 or 장애 유형에 따라 선정) 등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함. - 자문 위원 분께 질문드리고, 팀내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고자 함. - 자문결과 : '적용 방안 구체화' 파트로 작성 완료

장애인 의복 리폼 지원을 위한 3G-협업 프로그램
 : 3G, 정부(Government) - 게임 회사(Game company) - 대중(the General public) 참여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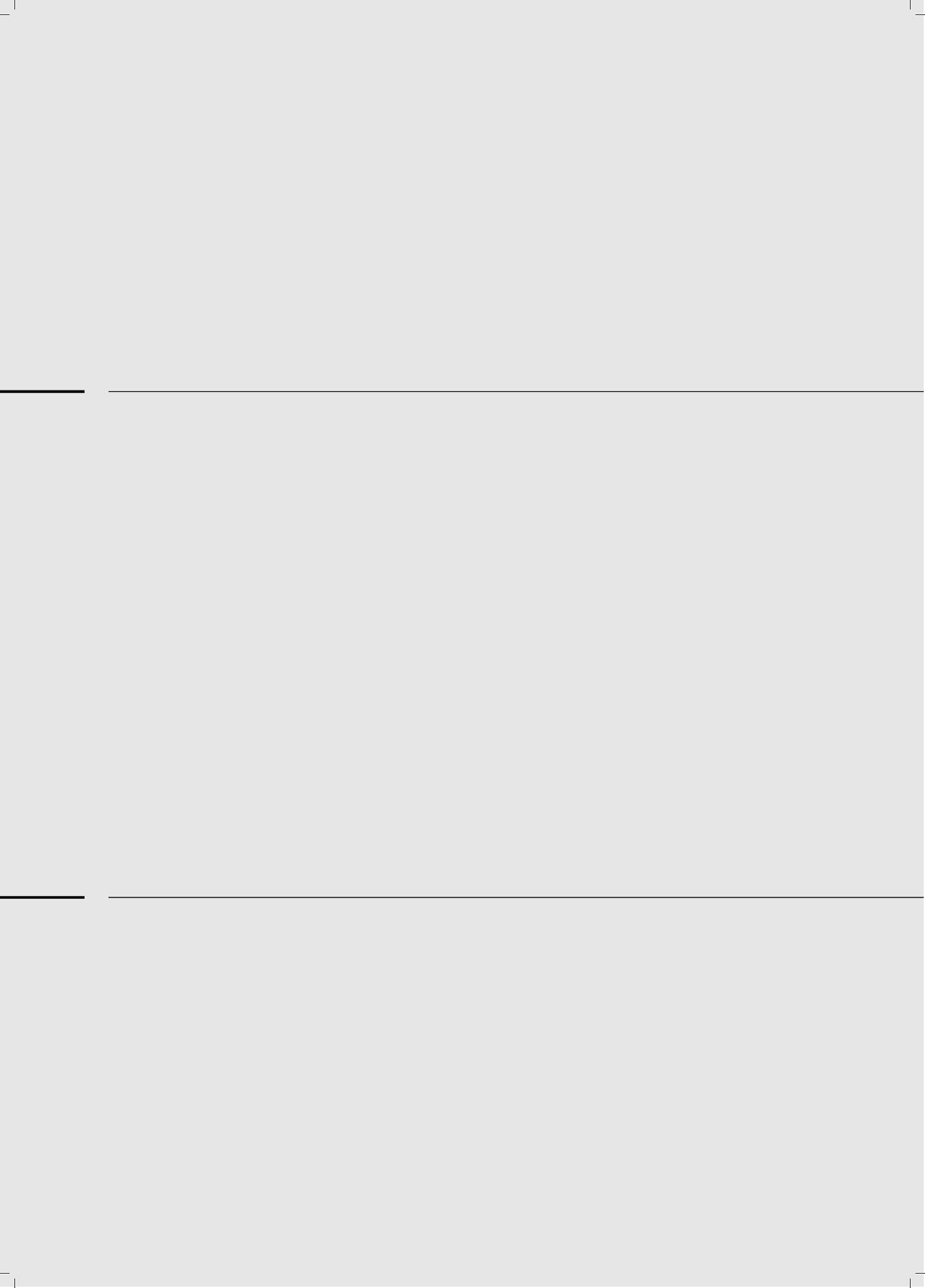
	<p>2. 서비스 공급 방식의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쿠폰,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방안을 함께 도입하여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함. - 자문모임 결과를 반영해 최종 보고서 작성 이전에 한번 더 논의하여 구체화하고자 함. - 자문결과 : '적용 방안 구체화'파트로 작성 완료 <p>3. 예산 및 자금 조달 방법 구체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복을 리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사업 규모, 제공할 1인당 바우처 개수, 정부와 게임 회사의 수익을 매칭하는 비율과 방안을 고려하여 예산 및 자금 조달 방법을 논의하였음 - 자문모임 과정에서 리폼 비용에 대해서도 질문드릴 예정 - 자문결과 : 리폼 바우처 개수와 금액을 위해서는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토대로 정리함
--	--

5. 기대효과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의복 문제 해결 2. 경제적 장점 (지역 경제 활성화, 게임 산업 성장) 3. 소비자의 가치 소비 유도,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 유도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존과 동일하며, 최종 보고서 작성 시 다시 정리할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과 동일하나, 자문 모임 결과를 토대로 게임 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함 - 비장애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는 당연한 규범과 행동 양식으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런 문화에서 배제되었던 장애대학생들이 대학생의 문화에서 배제되지 않고 같은 수준의 규범과 행동 양식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대학생의 자립 - 가정에서 만의 경제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고, 장애대학생이 스스로 일정 수준의 생활비를 충당하며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 장애인식개선 -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지만, 장애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방안을 통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다.

장애인 구강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
(D.O.B.T.P)

제안 2팀



D.O.B.T.P

장애인 구강은, 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

장애인 비대면 구강관리 시스템

도담도담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김가은, 이승은

CONTENTS

- 01 팀명 및 팀원소개
- 02 활동영역 및 관련주제
- 03 정책소개
- 04 정책 필요성, 기대방향
- 05 느낀점

01

팀명
및
팀원소개

팀명 및 팀원 소개

도담도담 뜻?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가 무탈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자는 의미



김가은-팀장



이승은-팀원

02

활동영역
및
관련주제

활동 영역 및 관련 주제

#활동영역

#비대면
#장애인



#관련주제

#구강관리
#진료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구강관리, 진료 어플리케이션 개발

03

정책
소개

D.O.B.T.P의 목적

1

신체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

2

정신적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

3

장애인 치과치료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 감소

D.O.B.T.P 소개

장애인 구강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

- 1단계 - 비대면 온라인 상담 서비스
- 2단계 - 오프라인 진행
- 3단계 - 일반적 치과치료 서비스
- 4단계 - 장애인과 보호자를 위한 구강관리 콘텐츠 제공

D.O.B.T.P 어플 소개



D.O.B.T.P 어플 소개



비대면으로 구강진료 예약자와
의료진이 화상으로
구강진료 진행하는 항목

D.O.B.T.P 어플 소개



비대면 진료 예약 접수 항목

- 환자의 인적 사항 확인
- 장애 정도 확인
- 환자의 불편 확인 등

진료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함

D.O.B.T.P 어플 소개



어플에 대한 궁금점,
비대면 진료 중 궁금한 것들을
자유롭고 접근성 좋게
카카오톡 질문하기를 통해
질문할 수 있도록 함

D.O.B.T.P 어플 소개



지속적인 구강관리를 위해
환자의 구강관리 교육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

04

프로그램 필요성

장애인 비대면 구강관리 프로그램 필요성

01

‘장애인 구강 건강 사각지대’

□ 장애 유형의 특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유형도 있지만, 나머지 유형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장애는 그 자체만으로도 물리적인 제약을 기본적으로 지니게 된다. 실제 장애인 우식 경험 영구치 치수(장애인 총치 경험 치아 수)는 2012년 실태조사에서 비장애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

Table 2. 장애유형별 치아우식증 유병률

특성	장애유형					계* (n=1307)
	지체장애 (n=189)	뇌병변장애 (n=130)	장신지체 (n=512)	시각장애 (n=246)	청각장애 (n=230)	
성별						
남자	96(82.1)	59(68.6)	247(82.1)	144(79.2)	93(75.0)	609(78.9)
여자	60(83.3)	28(63.6)	187(88.6)	74(72.6)	93(87.7)	442(82.6)*
연령(세)						
06 - 11	22(53.7)	18(39.1)	47(67.1)	29(53.7)	36(70.6)	152(58.0)*
12 - 14	29(82.9)	13(68.4)	91(82.7)	15(55.6)	73(76.8)	211(77.3)*
15 - 24	37(92.5)	22(78.6)	163(86.2)	67(87.0)	26(89.7)	315(86.8)
25 - 34	21(84.0)	19(95.0)	105(92.1)	15(71.4)	7(85.7)	166(88.8)
35 이상	47(97.9)	15(88.2)	28(96.6)	62(92.5)	45(93.6)	197(94.3)

실제 장애인 우식 경험 영구치 치수
(장애인 총치 경험 치아 수)는
2012년 실태조사에서 비장애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장애인 비대면 구강관리 프로그램 필요성

02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

-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장애인 260만 명 중 95% 이상이 구강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
- 한정된 가산 범위에도 불구하고, 가산 환자로 한정된 장애인 중 적기에 치료를 받는 비율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낮다.



한정된 가산 범위에도 불구하고, 가산 환자로 한정된 장애인 중 적기에 치료를 받는 비율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낮다

D.O.B.T.P의 기대방향

1

접근성이 매우 좋음, 굳이 이동하지 않고 집에서 진료가능

2

장애인 환자와 의료진 모두 시간적, 경제적 이득

3

장애인의 지속적인 구강관리 도모 가능

05

느낀점

왜 우리는 D.O.B.T.P에 집중했는가?

장애인과 의료진 모두가 타협할 수 있는 현실적 정책

의료진

- 짧은시간으로 진료
- 적은 인력 소비
- 데이터 수집
- 많은 환자 관리 가능

D.O.B.T.P로
장애인 병원
설립 없이
장애인
구강진료
가능!

장애인

- 짧은 시간 진료
- 이동 없이 진료 가능
- 공포감 감소
- 지속적 관리 가능

도담도담팀이 실제로 겪었던 장애인 치과의 고충

- 1**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 2** 장애인 치과가 너무 없어요
- 3** 지속적인 케어가 되지 않아요

프로그램을 하면서 느낀 점

장애인분들의 행복

우리가 낸 정책으로
장애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행복

정책에 대한 관심

단순히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연구하는 과정



과제 수행 보람

다양한 과제 수행 후
느낄 수 있는 보람

치위생학과

미래 치과위생사의
꿈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

장 애 인 구 강 은 , 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

감사합니다

도담도담팀
선문대학교 치위생학과
김가은, 이승은

장애인 구강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D.O.B.T.P)

제안 2팀

〈제안 개요〉

경제적인 제약 및 물리적 접근성 등 다양한 문제로 적기에 구강질환을 치료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다. 장애인 내원 환자 수에 비해 장애인 치과 병원 시설이 매우 적을뿐더러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치과 치료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다만, 장애인의 특성상 양질의 진료 시간, 전문 인력의 기술적 노력, 장애 유형에 대한 높은 이해 등의 조건도 함께 전제되어야만 하지만 치과 진료 인력 또한 이 현실을 감당하기엔 부담감이 크다. 비대면 진료가 장애인 구강건강에 있어 가장 장점은 '물리적인 접근성 한계'에 있다. 치과 의사의 판단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대면 진료 진행 시 오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본 제안 정책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만 제공되는 게 아닌, 대면 진료 및 맞춤 구강관리 교육도 이어지므로 일반 비대면 진료어플과는 차별화된 어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 1위인 '닥터나우'의 구성을 연구하여 앱 개발을 진행하였다. 어플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 서비스 오프라인 진행(대면 진료)플을 통한 온라인 지속케어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구강관리 콘텐츠 제공의 단계로 진료가 진행되도록 단계를 구성하였다.

본 정책을 통해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과 의료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설문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용은 추후 진료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으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도울 수 있다. 셋째,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 넷째, 장애인, 의료진 모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줄 수 있다. 다섯째,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및 전신 건강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여섯째,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대상자에게 구강검진 횟수가 증가한다.

I.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필요성

2018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2017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장애인 260만 명 중 95% 이상이 구강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¹⁾ 많은 수의 장애인들이 구강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장애인 구강 건강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장애는 그 자체만으로도 물리적인 제약을 기본적으로 지니게 되고, 실제 장애인 우식 경험 영구치 치수(장애인 총치 경험 치아 수)는 2012년 실태조사에서 비장애인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된 바 있다. (<표1> 참고)²⁾

장애 유형의 특성에 따라 구강 건강에 대한 지원을 받는 유형도 있지만, 나머지 유형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 가산 적용 대상자는 뇌병변, 정신, 자폐, 지적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다. 한정된 가산 범위에도 불구하고, 가산 환자로 한정된 장애인 중 적기에 치료를 받는 비율은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낮다.

의료체계 확립 시 각 장애특성에 맞는 치료가 제공되어야 한다. 미국, 호주와 같은 나라에서는 정신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이 별도의 지원체계 속에서 긴급한 순간에 병간호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정신, 지체, 발달 장애인이 나누어져 치료 및 지원을 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표1> 장애유형별 치아우식증 유병률

특 성	장애유형					단위: No(%) 계* (n=1307)
	지체장애 (n=189)	뇌병변장애 (n=130)	정신지체 (n=512)	시각장애 (n=246)	청각장애 (n=230)	
성별						
남자	96(82.1)	59(68.6)	247(82.1)	144(79.2)	93(75.0)	609(78.9)
여자	60(83.3)	28(63.6)	187(88.6)	74(72.6)	93(87.7)	442(82.6)*
연령(세)						
06 - 11	22(53.7)	18(39.1)	47(67.1)	29(53.7)	36(70.6)	152(58.0)*
12 - 14	29(82.9)	13(68.4)	91(82.7)	15(55.6)	73(76.8)	211(77.3)*
15 - 24	37(92.5)	22(78.6)	163(86.2)	67(87.0)	26(89.7)	315(86.8)
25 - 34	21(84.0)	19(95.0)	105(92.1)	15(71.4)	? 6(85.7)	166(88.8)
35 이상	47(97.9)	15(88.2)	28(96.6)	62(92.5)	45(93.6)	197(94.3)

장애인의 치아우식 경험 상태, 2006년, 4p

1)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치과의사신문, 2020. 10. 22
2) 장애인의 치아우식 경험 상태, 2006년, 4p



〈그림1〉 장애인 치과 치료의 어려움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치과의사신문, 2020. 10. 22

경제적인 제약 및 물리적 접근성 등 다양한 문제로 적기에 구강질환을 치료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많다. 장애인 내원 환자 수에 비해 장애인 치과 병원 시설이 매우 적을뿐더러 특정 유형의 장애인을 제외하고는 치과 치료를 받는 것에 한계가 있다. 다만, 장애인의 특성 상 양질의 진료 시간, 전문 인력의 기술적 노력, 장애 유형에 대한 높은 이해 등의 조건도 함께 전제되어야만 하지만 치과 진료 인력 또한 이 현실을 감당하기엔 부담감이 크다. 즉, 어느 한 쪽으로만 치우친 의료체계가 아닌 양쪽이 상생하며 이뤄질 수 있는 의료체계 확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비대면 진료는 장애인이 의료체계에 경제적, 물리적으로 더 쉽게 접근하게 해주는 좋은 대안이된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2021년 12월 22일,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원격 의료 산업 협의회가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대면 진료 인식조사'에서, 비대면 진료에 국민 66.1%가 긍정이었으며, 부정적이라 답한 의견은 33.9%에 그쳤다. 따라서 적절한 체계를 마련한다면, 쟁점 또한 해결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주제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약 6가지 이상의 어플이 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어떤 질환이라도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모든 질환과 상황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표2〉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현재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의료법 규정 제30조의 2(원격의료)로 최초 신설되었지만, 의료인 협진 개념으로만 허용된 상태이다. 그러나 비대면 진료는 국제적 추세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의료의 성장과 사회적 확산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2〉 국내 의료법 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의 유형

유형		원격지 의사	현지	합법 여부
1차 분류	2차 분류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의료법 제34조에 의해 시행가능
	의사-의사가 아닌 의료인 간 원격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현행 의료법 상 현지 의료인의 자격 관련 논란이 있음 (지역보건법, 농특법 등에 의해 일부는 시행가능)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현행 의료법 상 시행불가

[자료] 이혁우(2017)를 바탕으로 수정

2020-10 KISTEP ISSUE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현황, 김지연

비대면 진료가 장애인 구강건강에 있어 가장 장점은 ‘물리적인 접근성 한계’에 있다. 치과 의사의 판단으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비대면 진료 진행 시 오진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본 제안 정책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만 제공되는 게 아닌, 대면 진료 및 맞춤형 구강관리 교육도 이어지므로 일반 비대면 진료어플과는 차별화된 어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II. 정책연구 방법

1. 정책의 대상 및 범위

본 정책은 거리적 한계로 치과에 쉽게 방문하기 힘든 장애인과 신체가 불편하여 치과에 쉽게 방문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 '장애인 치과' 검색 시, 결과로 나오는 장애인 치과는 단 10개이다. (2022. 11. 21, 네이버) 국립 장애인 구강진료 센터는 2022년 하반기 기준, 14개에서 구강보건의 날 기획안 발표를 통해 17개로 확충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장애인의 수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이다. 타지에 있는 장애인들은 직접적인 방문에 어려움이 있어 현저히 낮은 치과진료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설령 집 앞에 치과가 있다고 해도, 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프로세스가 갖춰지지 않아 양질의 진료를 받는 게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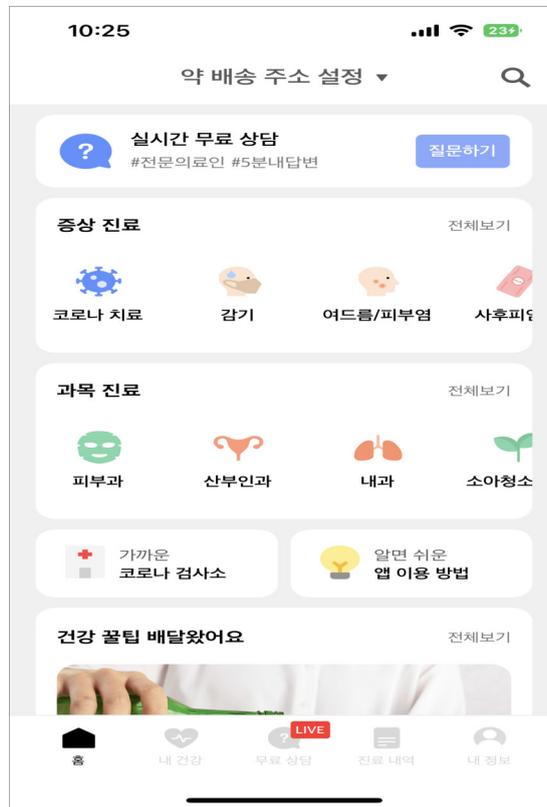
신체가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이동이 쉽지 않다. 특히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한다고 해도, 장애인 콜택시는 장애 1, 2등급인 경우에만 승차가 가능하도록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 따라서 D.O.B.T.P로 치과 치료 의지만 있다면, 온라인 어플로 진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폭넓은 범위에서의 장애인 그리고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행 가능하다.'

2. 국내외 타 사례 및 아이디어

현재 우리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로 운영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5가지이다. (2022. 11. 21. 애플 앱스토어 의료 인기 차트) 그 중 1위인 '닥터나우'의 구성을 연구하여 앱 개발을 진행하며, 카테고리를 아래 와 같이 분류해 살펴보고자 한다.

- ① 환자 증상 수집 항목
- ② 가까운 병원 정보 공유
- ③ 어플의 사용법
- ④ 건강 지식
- ⑤ 약 처방 항목

장애인 구강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
(D.O.B.T.P)



〈그림2〉 앱 '닥터 나우'의 홈 화면

앱 '닥터 나우'

Ⅲ. 제안 정책 내용

1. 정책 적용 방안

1단계) 어플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 상담 서비스

<그림3>과 같이 장애인을 위한 비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이때 설문지로 지체, 정신 장애와 장애의 심도를 나눠 치료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치과 진료의 정확성을 높인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는 정확한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장애인, 보호자도 부담 없이 어플을 통해 진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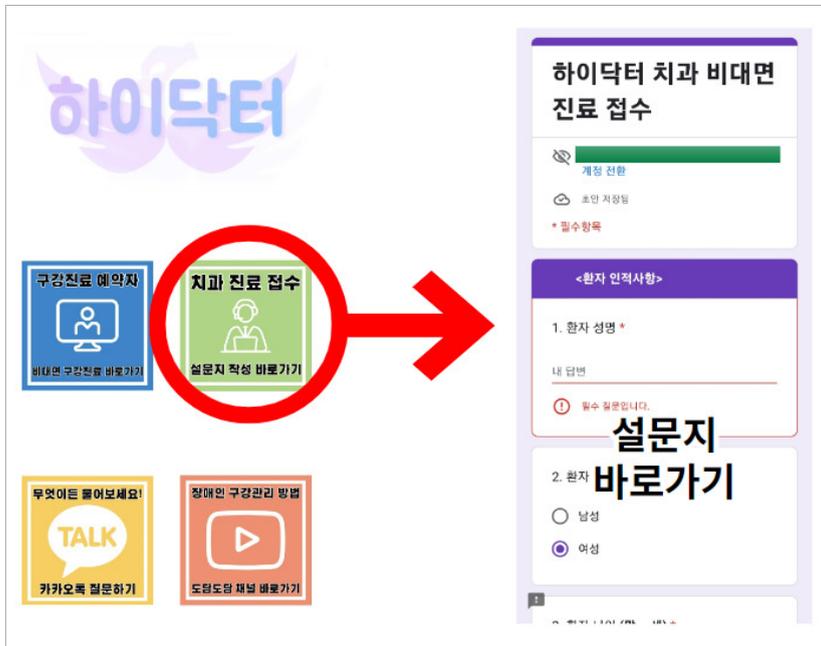


<그림3> '하이닥터' 앱 '비대면 구강진료 바로가기' 항목

어플 속 화면을 통해 환자의 구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간단한 예방 처치, 진료의 경우 1단계로 진행한다. 지속 관리도 1단계 진료가 끝난 후 4단계 교육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어 시간, 경제적 부담이 적다. 내원이 필요할 경우 2단계로 진행하며 2단계로 진행되어도 의사는 환자에 대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진료하여 정확하고 빠른 진료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환자도 시간적 소요 및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2단계) 오프라인 진행 (대면 진료)

<그림4>를 참고하면, 앱의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모은 것을 바탕으로 진료하여 환자에 대한 배경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진행할 수 있다.



<그림4> '하이닥터' 앱 '설문지 바로가기' 항목

1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구강 상태는 확인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방사선 사진과 정확한 구내 사진만 추가 촬영해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다. 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장애인 치과 진료와는 다르게 시간적, 경제적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

3단계) 앱을 통한 온라인 지속케어

구강은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데, 치과에 방문해 지속적 관리를 도모하는 방식보다 앱을 통한 진료로 지속적인 관리 유도가 용이, 동시에 방문 부담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1단계]와 같이 간단하게 입 안을 촬영하는 방식과 화상 진료로 지속 관리 진행한다. 정기적인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구강 관리 용품에 대한 설명하고, 구강관리 방법을 처방한다.

4단계)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구강관리 콘텐츠 제공



〈그림5〉 '하이닥터' 앱 '도담도담 채널 바로가기'

구강 관리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자신이 원하는 항목에 대해 구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의 나이, 장애의 정도, 장애의 분류에 따라 필요한 구강 관리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 제작한다. 한국 장애인 재단과 치과 의사, 치과위생사가 구강관리 콘텐츠를 제작해 보다 신뢰성 있고 전문적인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본 정책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법령의료법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감염병과 관련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38조 제2항에 따라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 무선,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인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둘째, 감염병 예방법 제40조의 3 제 1항은 원칙적으로'의료기관 내에서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한 규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3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이유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

용방안'을 공포함. 3에서 언급한 보건복지부의 공고 이후인 202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 예방법') 제 49조의 3이 일부 수정되어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구간에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법적 기반이 조달되었다.

근거 법령을 기반으로 본 정책은 각 지역의 장애인 치과 병원과 연계 시행 및 협력시 실효성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책 고려사항

본 정책 적용 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치과위생사가 구강관리 용품 처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

치과위생사가 운영하는 구강위생용품숍이 있고, 치과위생사가 구강관리용품을 처방, 제 공에 대한 위법성이 없다. 치과치료의 비대면 실현 여부로 '세계로 치과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 사례가 있다. 시중에 있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은 환자가 보낸 사진으로 충치 가능성을 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의 건립의 우선 시행이 목적이며, 건립 이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비대면 온라인 진단'으로 볼 수 있다.

V. 기대효과

정책 실행 시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과 의료진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문조사로 양질의 진료 서비스, 사후 서비스 등 장애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둘째, 설문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내용은 추후 진료를 위한 소중한 자산으로 쓰일 수 있으며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도울 수 있다. 지체 장애인들은 특히 치과가 폐쇄적이고 무섭다는 이미지가 크게 작용해 공포를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라인 진료를 하게 되면 공포를 줄일 수 있다.

셋째, 사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를 신속하고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

넷째, 장애인, 의료진 모두에게 시간적·경제적 여유를 줄 수 있다.

〈표3〉을 참고하면, 치과의료기관의 선택 동기가 '인접 거리'인 것이 35.5%를 차지한다.

따라서 '1단계-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시행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표3〉 장애인의 치과의료이용 특성에 관한 빈도분석

구분	사례수(명)	백분율(%)
이용하는 치과의료기관의 종류		
치과의원	241	34.7
치과병원	80	11.5
종합병원	95	13.7
보건소	12	1.73
약국	3	37.9
치과의료기관의 선택동기		
인접거리	245	35.3
혼자선택	138	19.9
친지권유	87	12.5
유명하므로	41	5.91
적당한 치료비	10	1.30
간편이 눈에 띄어서	14	0.14
저경기관	46	2.02
기타	113	22.6
치과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중세경미	88	38.9
비용문제	17	7.52
시간부족	6	2.65
치료의 어려움	83	36.7
불편해서	16	7.07
기타	16	7.07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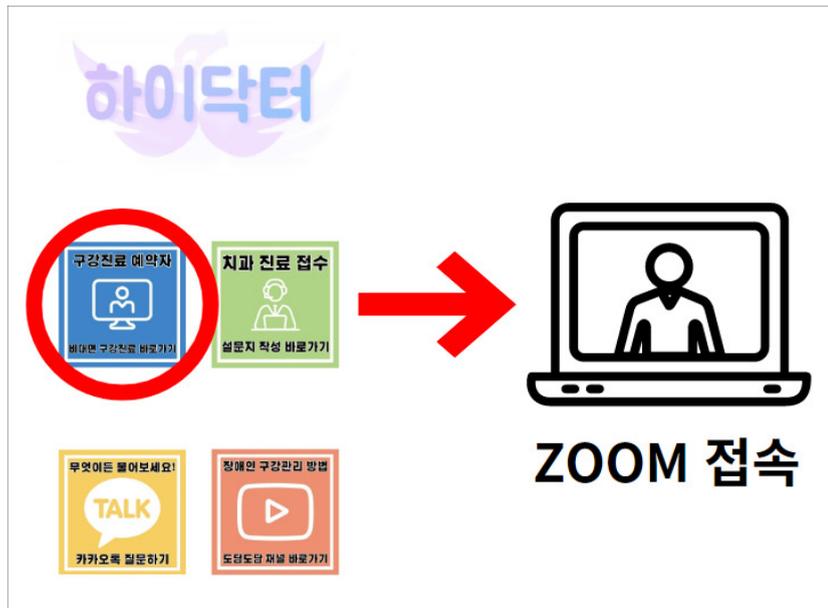
다섯째, 지속적인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장애인 구강건강 및 전신 건강 관리를 도모할 수 있다. 장애인은 치과 치료를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장애인 구강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
(D.O.B.T.P)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구강위생에 대한 인지하는 수준이 비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낮아 구강과 연관된 질병의 발병률을 증가시킨다.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 악화된 구강건강은 전신 건강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구강병을 방지할 경우, 각종 합병증 발생으로 삶의 질이 하락된다. 이런 일을 예방하고자 온라인 모니터링으로 지속적인 구강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

온라인 모니터링 진행 방식은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7>을 보면, 파란색'구강진료 예약자-비대면 구강진료 바로가기'버튼을 눌러 준다. 화상 회의를 할 수 있게 연결된다.사전에 온라인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대면 진료 시간을 줄일 수 있으며, 최소한의 필요한 방문 횟수를 제외하고의 대면 면담을 없앨 수 있다.



<그림6> 도담도담 팀 앱 '하이닥터' 화면

즉, 방문 이전에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료가 빠르고, 방문횟수 조절이 용이하며, 진료 전 정보를 미리 수집함으로써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여섯째,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대상자에게 구강검진 횟수가 증가한다. 실제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건 경제적 부담감, 관련 치과 부족, 진료 기관의 장애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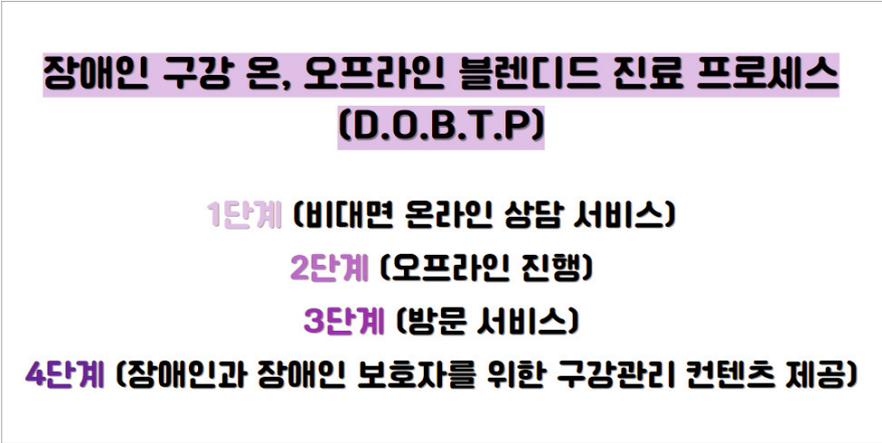


〈그림7〉 비대면 진료 프로세스 설명

가 부족함에서 비롯된다. 지체 장애인의 경우, 구강검진을 예약하고 진료에 있어서까지 물리적 접근성에 어려움을 겪는다.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실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많은 사람이 치과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이 프로세스가 도움이 되어 적용되길 바란다(〈그림7〉 참고).

비대면 진료 진행 시 오진 가능성에 대하여 어플 시행 시의 문제는 비대면 진료로 인한 오용 진단이다. 다만, 장애인 구강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 (D.O.B.T.P)의 경우, 〈그림8〉와 같이 구성되어 있다. 즉, 비대면 서비스만 제공이 아닌, 시간 절약 및 경제적 부담을 감소하기 위해 일부 비대면 전환 시스템이다. 따라서 비대면 상담 서비스 시 오진이 있다고 해도, 2단계에서 오진에 대한 계획 수정 후 수행으로 도입되어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일곱째, 장애 당사자를 비롯해 '보호자 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실현 시 구강 관리 질 향상도모할 수 있다. 전문 시설에는 보호자가 구강 관리법을 자세히 알기 쉽지 않다. 더군다나 장애인 치과의 경우 하루에 집중되는 환자의 수가 일반적으로 많다. 따라서 의료진의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 온라인으로 보호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구강 관리를 도모하면 보호자가 시행하는 구강 관리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8〉 장애인 구강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

〈표4〉를 보면³⁾, 장애인의 장애등급과 비례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칫솔질 능력이 결여되어있다. 장애인 환자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는 보호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보호자에게 구강 관리 지식 도입을 필요로 하며, 구강 건강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게 프로그램 구축 필요성을 고려하였다.

〈표4〉 장애인의 장애등급과 자가칫솔질 능력과의 관계

표 11. 장애인의 장애등급과 자가칫솔질 능력과의 관계

장애등급	칫 솔 질 능 력			계(100%)
	할 수 있다	어느정도 할 수 있다	전혀 하지 못한다	
1등급	39(26.7)	48(32.2)	62(41.6)	149(21.4)
2등급	120(40.3)	109(36.6)	69(23.1)	298(42.9)
3등급	81(47.1)	68(39.5)	23(13.4)	172(24.7)
잘모르겠다	28(36.8)	36(47.4)	12(14.5)	77(10.9)
계	268(38.6)	261(37.5)	166(23.7)	695(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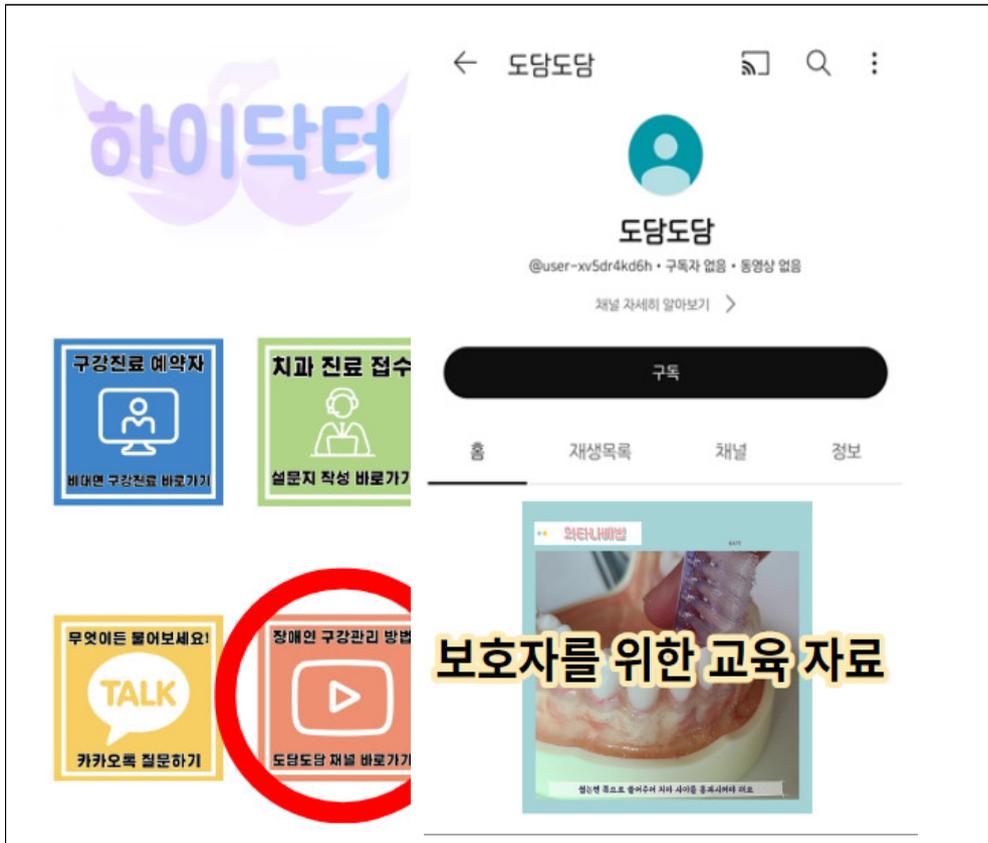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7

3) 김영숙 · 권호근, 1997: 21

장애인 구강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
(D.O.B.T.P)

장애인 환자의 보호자에게 교육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호자가 교육 시 도움이 되는 영상을 준비한다. 우선 아래 <그림 9>를 보면, 빨간색‘장애인 구강관리 방법-도담도담 채널 바로가기’버튼을 눌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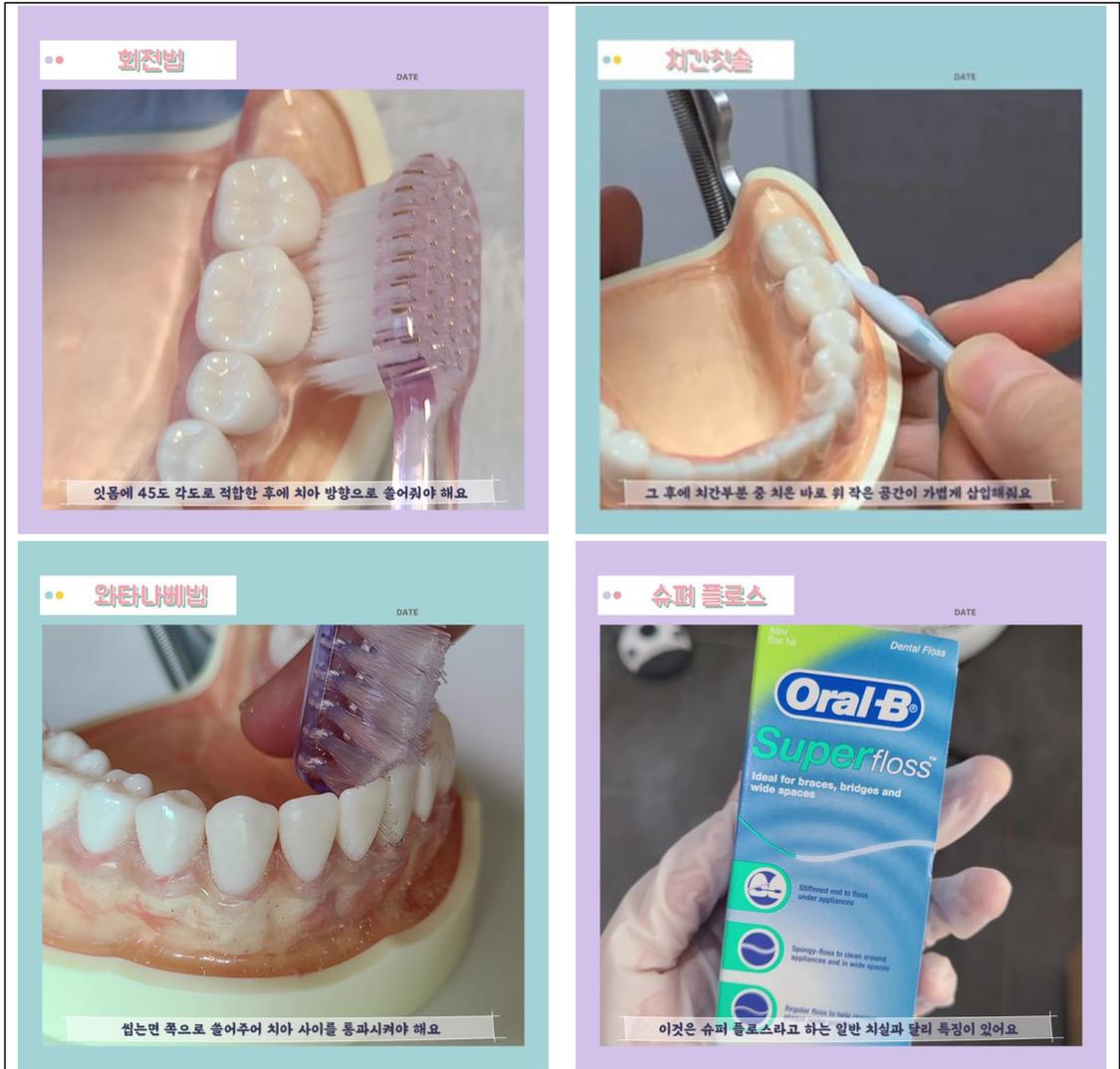
<그림9> 하이닥터 앱 첫 화면 · 도담도담 유튜브 채널

<그림9>와 같이 유튜브로 연결 된다. 이후 채널에서 <그림10>과 같은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인 칫솔질 법, 구강 관리 용품 사용법을 다룬 영상들을 주제로 한 영상들로 장애인과 보호자가 영상을 참고할 수 있게 돕는다.

본 정책에 따라 장애 정도와 특성을 분류해 구강 진료를 접근한다면, 시간 절약 및 환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킬 수 있다. 이후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 자료로 우리나라의 치과 의료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진료 시작 전 시간 단축 및 방문 횟수 절감을 이뤄낼 수 있다. 치과 접수 전‘설문지 바로가기’항목에서 사전 문진을 하도록 한다.

장애인 구강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
(D.O.B.T.P)

문진을 하는 데 있어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통해 본 정책은 체계적인 장애인 구강 진료 프로세스의 높은 도입 가능성 가고 있다.



〈그림10〉 장애인 환자 보호자 대상으로 한 영상 예시

실제 앱 시안 중 설문조사 항목을 응용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림11〉를 보았을 때, 크게 4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최대한 환자의 증상을 자세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치아의 어느 부분이 아픈지, 언제 어떤 느낌으로 통증이 시작되었는지, 치료

장애인 구강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
(D.O.B.T.P)

를 원하시는 의료진분이 있을 경우 기입 가능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의료진에게 바라는 태도를 기입함으로써 장애인 환자 본인이 치과에 내원 시 어느 정도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도록 하였다.

<환자 인적사항>	<환자의 건강 상태>	<기타 사항>
<p>1. 환자 성명 *</p> <p>내 답변 _____</p>	<p>1. 장애 내용 *</p> <p>1) 주요 장애 : ___ 장애 ___ 급 (필수)</p> <p>2) 동반 장애 : ___ 장애 (있을 시 작성)</p> <p>3) 기타 :</p> <p>내 답변 _____</p>	<p>1. 환자 현재 거주지 *</p> <p><input checked="" type="radio"/> 자택</p> <p><input type="radio"/> 자택-학교/복지시설(주간)</p> <p><input type="radio"/> 시설/요양기관(주간-야간)</p> <p><input type="radio"/> 기타</p>
<p>2. 환자 성별 *</p> <p><input type="radio"/> 남성</p> <p><input type="radio"/> 여성</p>	<p>2. 장애 시점 *</p> <p><input type="radio"/> 출생 시 (선천적 장애)</p> <p><input type="radio"/> 환자 나이 기준 ___세 때부터 (___년 전 부터)</p> <p><input type="radio"/> 잘 모름</p>	<p>2. 환자를 주로 돌보시는 분 *</p> <p><input type="radio"/> 부모님</p> <p><input type="radio"/> 형제, 자녀, 배우자, 가족 등</p> <p><input type="radio"/> 친척</p> <p><input type="radio"/> 활동지원자 또는 간병인</p> <p><input type="radio"/> 기타</p> <p><input type="radio"/>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음)</p>
<p>3. 환자 나이 (만 ___세) *</p> <p>내 답변 _____</p>	<p>2-1. '장애 시점'에서 환자 나이 기준을 앞걸음, ___세 때부터 진행되었는지 시기를 적어주세요.</p> <p>내 답변 _____</p>	<p>3. 구강 내 습관 유무 *</p>
<p>4. 보호자 성명 *</p> <p>내 답변 _____</p> <p>5. 비속어 사용 *</p>		

<그림11> 하이닥터 앱 중 치과 진료 접수 '설문지 바로가기' 항목

참고문헌

- 의협신문, 「비대면시대, 비대면 진료는 원칙이 아닌 예외」, 2021. 12. 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온라인으로 진료받고 약 배송까지 편하게, 비대면 진료 앱」, 2022. 5. 3
- 장애인의 치아우식 경험 상태, 2006년, 4p
- 2020-10 KISTEP ISSUE 비대면 시대, 비대면 의료 국내외 현황과 발전현황, 김지연
서울아산병원, 「의학용어-문진(history taking)」
- 2015년 장애인 구강보건 실태조사 연구, 2015년
- 김영숙·권호근, 대한구강보건학회지, 1997 : 21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계획	장애인 구강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 (D.O.B.T.P)
결과	장애인 구강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진료 프로세스를 홈페이지로 구성하려고 하였으나, 앱 개발로 변경.

2. 연구방법

계획	현재 시행 비대면 진료 시스템 조사, 장애인 치과진료를 위한 설문지 조사.
결과	비대면 진료 어플이 우리나라 어플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 실현 가능. 치과진료를 위한 설문지 조사는 서울대학교 장애인 병원 설문지와 자문위원 교수님의 조언으로 제작함.

3. 정책내용

계획	비대면 진료 + 추후 교육 프로그램 + 구강관리용품 처방
결과	비대면진료 어플을 제작해 진료, 교육, 구강용품 처방 모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함. 치과위생사의 구강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구강관리용품 처방 가능 확인.

4. 적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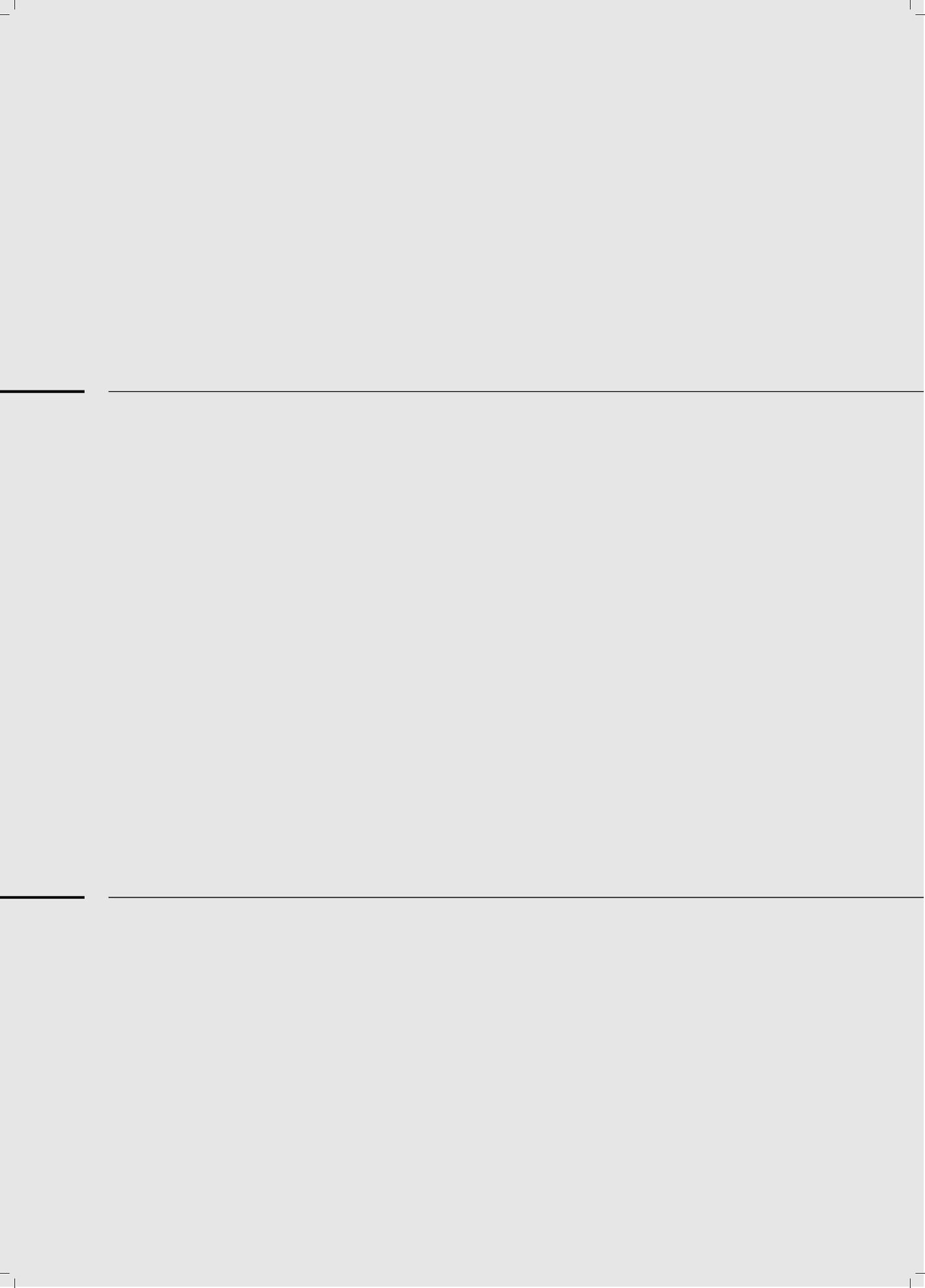
계획	모든 장애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
결과	“치과치료에 의지가 있는 장애인 분들”을 위주로 진료와 다양한 구강프로그램을 영상으로 지원.

5. 기대효과

계획	장애인 분들의 원활한 구강관리가 가능, 보호자분들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함.
결과	어플 속 장애인 구강관리 방법, 도담도담 채널 바로가기를 통해 구강교육 가능하게 함.

시·청각 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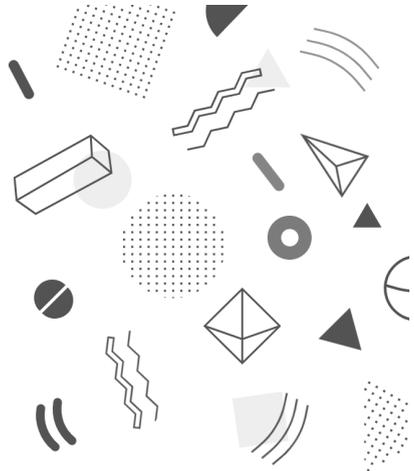
제안 3팀



2022년 장애인 분야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정책

같이이가치팀_한주연, 이지현



시청각장애인이란?

: '장애인 복지법' 제22조의 정의 : 시각과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

우리나라 시청각장애인 인구: 약 **9,249명** 추정

		시각	
		볼수 없음	조금 보임
청각	들을 수 없음	전맹 전농	약시 전농
	조금 들림	전맹 난청	약시 난청

▲ 시청각장애인의 상태 및 정도에 따른 구분

장애의 유형

한국의 15개 장애유형에 '시청각장애'는 없습니다.

신체적 장애

외부기능장애

- 지체장애
- 청각장애
- 시각장애
- 뇌병변장애
- 언어장애
- 안면장애

내부기관장애

- 신장장애
- 호흡기장애
- 심장장애
- 장루/요루장애
- 간장애
- 뇌전증장애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 치매성장애
- 정신장애



'시청각장애'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독립 법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 있지만, 여전히 2개의 *법안 국회에서 계류 중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시청각장애인 실태 [2020]

정규교육 시청각장애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함 >

건강검진 시청각장애인 10명 중 5명 이상이 2년 내 건강검진 받지 못함 >

일상생활 시청각장애인 10명 중 7명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함 >

▲김성희 외 (2020).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시청각장애인 실태 [2020]

**시청각장애인 관련
별도 규정, 정책, 제도 전무한 상황**
> **적절한 서비스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일상생활 시청각장애인 10명 중 7명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함 >



▲김성희 외 (2020).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시청각장애인의 유일한 인력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인력지원제도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유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것



출처: 사회서비스 바꾸쳐 홈페이지

시청각장애인의 유일한 인력지원제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청

그러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시청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 몇몇 분명한 한계 존재

'장애

:신체적 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것

출처: 사회서비스 바우처 홈페이지

문헌검토를 통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한계 확인

시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지원제도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그러나 몇몇 한계 존재



"현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은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다들 뿐**이며, 매우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내용으로 **시청각장애인에 관해 전혀 다루지 않음**.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는 양성과정을 수료하더라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태희, 이태훈 (2021). 시청각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적서비스 지원 방안. 한국장애인공단. 정책연구 2021-04. 1-194.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센터장님께 직접 여쭙보다

시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지원제도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그러나 몇몇 한계 존재



**"활동지원사가 수어를 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시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 때문에 서로 간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시청각장애인은 굉장한 답답함을 호소한다."**

<2022년 11월 09일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센터장님과 인터뷰 중>

제안 정책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GOAL

시청각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

25.4% (1순위)

의사소통
지원 방법

15.3% (2순위)

이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법

22.5% (3순위)

▲김성희 외 (2020).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

미국

약 55년 전인 1967년 헬렌켈러법(Helen Keller Act)에서 시청각장애를 처음 규정



Population
10,000명 당 1.8명

헬렌켈러국립센터 (Helen Keller National Center: HKNC)

목적: 고등학교를 졸업한 시청각장애 청소년과 성인의 자립생활과 직업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
연방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며 주요 책임자는 교육부 장관임

본부

New York에 소재

핵심서비스

:보조 기술 훈련, 의사소통 훈련, 독립생활 훈련, 방향성과 이동 훈련, 직업 훈련 등
지원서비스

:사례관리, 통역 서비스, 의료서비스, 정신건강 서비스, 청력검진 등



지역사무소

New England, Mid-Atlantic, East Central, Southeast, North Central, South Central, Great Plains, Rocky Mountain, Southwest, Northwest 에 소재

시청각장애인 프로그램 서비스 발굴 및 연결, 직접 방문 및 독립생활 돕기 등

미국

약 55년 전인 1967년 헬렌켈러법(Helen Keller Act)에서 시청각장애를 처음 규정



Population
10,000명 당 1.8명

미국의 시청각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SSP

1960년대부터 시작된 시청각장애인 전담 활동지원사

2020년 기준, 미국 29개 주에서 1,276명의 시청각장애인에게 ssp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됨(Denning et. al, 2021)

의사소통, 안내, 자립원조 3가지 영역 지원

남서부 주에 있는 성공적인 SSP 훈련 프로그램은 8시간의 수업을 제공하고, 이때 마지막 2시간 30분
가량의 훈련은 지역 내 상가에서 다양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SSP로 활동하는 것을 포함

전국 단위의 시청각장애인 자조 단체인 미국 시청각장애인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the DeafBlind, AADB)

: "SSP서비스, 시청각장애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서비스"

일본

'의사소통규정'을 두어 통역사업과 같은 의사소통 지원사업을 운영



Population

13,952명 추정



01_ 후생노동성의 시청각장애인 지원정책

전국맹농인협회 지원하며 협회의 구체적인 사업내용:
시청각장애인 통역자 양성 연수사업



02_ 동경도청 시청각장애인 지원정책

동경도청은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가 및 일상생활 지원 사업 실시
(예산 50%는 정부, 나머지 50%는 동경도청이 부담)



03_ 일본의 시청각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통역.개조원(通訳・介助員)

통역.개조원(通訳・介助員)은 시청각장애인 전담 활동지원사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관한 지원과 함께
시청각장애인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통역.개조원을 양성하는 역할
1991년 설립된 전국맹농인협회(全国盲ろう者協会): 지도자 양성 과정을 수탁하여 운영

제안 내용 1: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기존 활동지원사 교육과정에 50시간의 추가 과정을 제공해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를 양성합니다"

현재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표준 교육과정 40시간 (전문 교육과정 32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장애인 활동지원사	-장애교육 (8시간):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장애 이해, 자립생활과 인간중심계획의 이해, 인권과 확대 -활동보조인 교육 (15시간): 활동보조인 역할,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활동지원(신체적 장애), 활동지원 2 (정신적 장애), 활동보조 실제, 보조기구 이해
교육과정	-실전1 (9시간): 건강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사회활동 지원 -실전2 (8시간): 일상 및 의사소통 지원 -현장실습 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시청각장애인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표준 교육과정 40시간 (전문 교육과정 32시간) + 현장실습 (10시간)+ 추가 교육 (10시간) + 수어 교육 (30시간) + 추가 실습 (10시간)
전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교육 (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각장애의 이해와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의 자세 (2시간) -연령별 시청각장애인의 생활과 지원 (3시간) -다른 장애를 중적으로 가진 시청각장애인 생활과 지원 (3시간) -시청각장애인 이통교육 (2시간) ○ 추가 실습 (1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실습은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에서 진행 -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5시간) - 수어 통역사와 함께하는 청각장애인과 2:1 의사소통 실습 (5시간)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 교육 (30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어 교육은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에서 진행 - 기본 한국 수어 교육 (10시간) - 회화 중심 수어 교육 (직장, 교통, 학교, 병원, 경찰서, 은행, 공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20시간)

제안 내용 2: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17곳)에 수어 교육 실시

"수어 교육을 통해 시청각장애인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습니다"

(1) 실시대상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도 각 시도별 활동지원사 50명씩 선발함. 선정 순위는 아래와 같음.
1순위. 기존의 활동지원사 중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를 희망하는 사람
2순위.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를 희망하는 사람

(2) 실시주체



협회 한국농아인협회
KOREA ASSOCIATION OF THE DEAF

- 각 시도는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의 위탁운영을 통해 수어 교육 지원
- 한국농아인협회로 선정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 시도협회 17곳 존재
- ✔ 수어 교육이 주요 사업 중 하나

(3) 실시내용

전국 17개소 - 한국농아인협회 강사 2인씩 배치



-수어 교육에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을 교육자료집으로 만들어 교육 종결 전 보급,
활동지원사는 활동 중 어려움이 있을 때 자료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수어 교육을 이수했을 시 한국농아인협회장으로 수료증 발급.
-수료증은 발행날짜 기준으로 3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 시 추가 교육을 들어야 함
-1년당 1회씩 보수교육 의무적 시행



제안 내용 3: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단가 차별화

"전문성을 인정해 더 높은 단가를 측정하여 제공합니다"



기존 단가의 1.5배 측정하여 지급

장애인 활동지원사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15,570원



23,355원

현행 활동지원사 단가

23,355원



35,032원

공휴일, 근로자의 날, 22시 이후와 6시 이전

○ 단, 활동지원에 쓰이는 교통비, 생활비 등은 각 센터가 활동지원 예산안을 제출하여 활동지원사의 사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고 각자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상해보험 가입 등 별도의 보상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

관련 법령

장애인복지법

제2장 제22조: 시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 인력을 양성 및 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명시

제4장 제5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사 파견 명시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제11조: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배치 명시

제12조: 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통역사 양성 후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야함을 명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을 규정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명시

고려사항



시청각장애인의 4가지 유형(전맹 전농, 약시 난청, 전맹 난청, 약시 전농)에 대한 다양성 고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의 신청자격(나이)에 대한 고려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진입장벽에 대한 고려

기대효과 1: 한국에서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하나의 정책이 나비효과를 불러올 것을 예상합니다."



한국에서 시청각장애와 관련된 첫 번째 정책

아직 시청각장애와 관련된 법, 정책, 제도가 전무한 상황에서,
본 정책이 시행된다면, 시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및 관련 복지 증대의 초석 마련 가능**

기대효과 2: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사회참여 증가

"시청각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가 양성된다면,
수어를 할 수 있는 활동지원사와 시청각장애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가능 및 시청각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 증가

기대효과 3: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업무 어려움 해소

"시청각장애인과 더불어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도 이점이 있는 정책입니다."



수어 교육과 임금향상을 통한 전문성 증대
이를 통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에 대한 인식개선 및 업무 어려움 해소

지금 이 순간에도
복지의 사각지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시청각장애인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같이의가치팀 -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각 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정책

제안 3팀

〈제안 개요〉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에게 특화된 활동지원사의 필요성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을 핵심 정책 주제로 선정하였다.

본 정책의 대상 및 범위는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중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중복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시도별 50명씩 선발하며, 수어를 기본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본 정책 실행방안은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후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17곳)에서 수어 교육을 실시한다. 그 과정에서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단가를 차별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한다.

본 정책을 통해 첫째, 한국에서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둘째,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사회참여 지원, 셋째,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인식 및 업무 어려움 해소 넷째, 실습을 통한 시청각장애인에게 알맞은 지원을 제공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I.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시·청각장애인 현황

본 정책제안서에서 말하는 「시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2조에 따라 시각과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시청각장애는 한국의 15개 장애유형¹⁾에는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청각장애인은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중 하나만 등록하거나 두 장애를 중복 등록을 해야 함. 하지만 시청각장애는 시각 장애 및 청각 장애와는 완전히 다른 특성이 갖고 있고, 필요로 하는 지원이 다르다.

청각 장애는 시각과 청각 두 기관이 아예 기능을 못하는 ‘전맹 전농’, 시각이 조금 보이고 청각이 조금 들리는 ‘약시 난청’, 시각이 아예 안 보이고 청각은 조금 들리는 ‘전맹 난청’, 시각이 조금 보이고 청각은 아예 안 들리는 ‘약시 전농’ 4가지 유형 존재한다.

2021년 통계청에 따르면 등록 장애인 2,644,700명 중 시각장애인 102,299명, 청각·언어 장애인 201,934명이다. 시청각장애인은 따로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의하면 2020년 6월 기준 시각 및 청각 중복 장애인은 9,249명으로 추정되고, 이는 전체 등록장애인의 0.35%이다.

김철주(2021)에 의하면 “시청각장애인은 법과 제도와 전무한 상태에서 단일 장애보다 일상생활에 더 많은 제약을 경험하고 있는데, 시청각장애인 3명 중 1명이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고 10명 중 7명은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또한 50% 이상이 최근 2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청각장애인은 세상과 의사소통 단절이 초래되면서 장애인 중에서도 열악한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시청각장애인의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통합’과 배치되고 있다.”(p. 128). 이처럼 시청각장애인은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대비되는 상황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시청각장애인의 취약성은 널리 인정되어,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중복 장애 중 하나가 아니

1) 현재 한국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안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장루·요루장애, 간질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15가지가 있음.

라 단일 장애로 인정하여 지원하고 있다(곽지영, 2022, p.96). 미국은 무려 55년 전인 1967년 시청각 장애를 하나의 장애 유형으로 인정하고 ‘헬렌켈러법’을 만들어 전담 지원 제도를 확립하였고, 일본은 약 30년 전부터 시청각 장애에 대한 교육과 전문시설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권리보장과 사회참여를 위해 ‘한국판 헬렌켈러법’이 여러 번 발의됐지만 무산. 현재는 2개의 법안²⁾이 계류하고 있는 상태임. 타 장애 유형보다 사회적 제약과 활동적 제한이 매우 높은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 마련 시급한 상황이다.

2.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현황

문헌검토를 통해 확인된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시청각장애인의 유일한 인력지원제도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현재 시청각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인력지원 제도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2021년 한 해 예산만 1조 5,000억 원이 넘는 사업으로,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들 가족의 부담을 줄여 장애인의 삶의 질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많은 장애인에게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지만, 시청각장애인이 이용하기에는 몇몇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

현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 교육과정은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 다루는 뿐이며, 매우 기초적이고 포괄적인 교육 내용으로 시청각장애인에 관해 전혀 다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활동지원사는 양성과정을 수료하더라도 시청각장애인 지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안태희·이태훈, 2021).

추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한계는 다음과 같다.

실제 정책 발굴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 생애주기에 맞춰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는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의 센터장과 인터뷰를 했을 때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사와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굉장한 답답함을 호소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소통이 되지 않아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렵고, 활동지원사와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긴다는 것이 주요 문제점 중 하나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²⁾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시청각장애인에게 특화된 활동지원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2020년 발간된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시청각장애인의 핵심적 욕구도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및 확대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 해보면 의사소통 지원 방법으로 ‘점자, 수어 등 의사소통 수단이 가능한 활동지원사의 확대’(15.3%)가 제시되었고, 이동을 위해 필요한 지원 방법으로도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확대’(22.5%)가 제시되었으며,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도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및 확대’(25.4%)가 제시되었다(김성희, 2020, p. 405). 이에 따라 시청각장애인의 이동, 의사소통,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을 핵심 정책 주제로 선정하였다.

II. 정책연구 방법

1. 국외 사례 조사

1) 미국

미국은 약 55년 전인 1967년 헬렌켈러법(Helen Keller Act)에서 시청각장애를 처음 규정하였다. 이 법에서 시청각장애란 현재의 시각과 청각의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하는데 심각한 제한점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Deafblinfo.org, 2006: 서해정 외, 2017에서 재인용). 또한 현재의 상태에만 머무르지 않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예후를 보일 경우도 시청각 장애의 적격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어 시청각 장애의 진행성까지 고려하는 특징이 있음. 미국의 시청각장애인 인구는 10,000명 당 1.8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헬렌켈러법에 의해 설립된 국립헬렌켈러센터(Helen Keller National Center for Deaf-Blind Youths and Adults: HKNC)를 통해 미국 전역의 시청각장애인에게 의사소통 훈련, 독립생활 훈련, 방향성과 이동 훈련,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였다. 또한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직업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데, 의사소통 지원 인력으로 보조교사³⁾(Paraprofessionals), 통역사(Interpreters), 시청각 전문교사(Deafblind Specialist), 중재자⁴⁾(Intervener), 지원 서비스 제공자 (Support Service Provider, SSP) 등이 있다.

이 중 '지원서비스 제공자(SSP)'가 1960년대부터 시작된 시청각장애인 전담 활동지원사로 이들의 주 역할은 의사소통, 안내, 자립 원조이다. 2020년 기준, 미국 29개 주에서 1,276명의 시청각장애인에게 ssp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Denning et. al, 2021). SSP는 민간 기관 또는 주정부에서 일정 시간 교육을 한 후에 지원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훈련 프로그램은 의사소통, 안내, 자립원조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서해정 외, 2017). 예를 들어 남서부 주에 있는 성공적인 SSP 훈련 프로그램은 8시간의 수업을 제공하고 이때 마지막 2시간 30분가량의 훈련은 지역 내 상가에서 다양한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한 SSP로 활동하는 것을 포함한다.

김성희(2020)에 의하면 미국의“전국 단위의 시청각장애인 자조 단체인 미국 시청각장애인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the DeafBlind, AADB)는 지원서비스 제공자(SSP) 서비

3) 보조원 또는 조교로도 알려져 있으며, 수업의 일부 또는 전체에 걸쳐 학생을 지원해야 함

4) 시청각장애 아동에게 모든 일련의 접근성을 제공하는 지원인을 말함

스가 시청각장애인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서비스”로 뽑았다고 한다(p. 45). 이를 통해 미국에서도 활동지원사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2) 일본

박경란(2020)에 의하면, “일본의 시청각장애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으나 관습적으로 ‘맹농(盲聾, 모로)’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보이는 정도와 들리는 정도에 따라 전맹농, 약시농, 전맹난청, 약시난청으로 분류한다. 일본 시청각장애인 인구는 13,952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70대 이상의 연령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시각을 기반으로 한 맹농인 비율이 높음.”이라 하였다(p. 41).

일본의 후생노동성의 시청각장애인 지원정책은 다음과 같다.

의사소통 지원정책 대상에 시각 장애, 청각 장애와 별도로 시청각장애인 지원 방법을 모색 (의사소통 지원자 파견 및 양성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후생노동성의 대표적 시청각장애인 지원사업은 전국맹농인협회 지원하며 협회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시청각장애인 통역자 양성 연수사업이 있다 (厚生労働省, 2015).

동경도청은 시청각장애인 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가 및 일상생활 지원 사업 실시한다 (예산 50%는 정부, 나머지 50%는 동경도청이 부담) (박경란, 2020).

일본의 통역·개조원(通訳・介助員)은 시청각장애인 전담 활동지원사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관한 지원과 함께 시청각장애인이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역·개조원을 양성하는 역할을 하고, 1991년 설립된‘전국맹농인협회(全国盲ろう者協会)’에서 지도자 양성 과정을 수탁하여 운영한다.

이와 같이 미국과 일본은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를 꾸준히 양성·배치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본 정책 제안 내용은 한국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이며,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Ⅲ. 제안 정책 내용

1. 정책 적용 방안

1) 제안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중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중복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각 시도별 50명씩 선발하며, 수어를 기본 의사소통 방법으로 사용하는 자를 선정한다.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도 각 시도별 활동지원사 50명씩 선발함. 선정 순위는 아래와 같음.

1순위. 기존의 활동지원사 중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를 희망하는 사람

2순위.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를 희망하는 사람

2) 정책의 구체적 내용

첫째로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한다. 국가는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활동지원사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지원하도록 한다. 현 장애인 활동지원사 양성교육교재에는 시각 장애, 청각 장애에 관한 내용들만 있기 때문에 시청각 장애에 관한 별도 내용 추가 필요하다. 세부 내용에는 시청각 장애의 이해와 지원 방법, 장애의 원인과 특성, 활동 보조와 지원 방법, 보행 기술, 의사소통 방법 등을 포함한다.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사 교육과정⁵⁾은 표준 교육과정 40시간(전문교육과정 32시간)+현장실습(10시간)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장애교육 (8시간) : 사회복지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이해, 장애 이해, 자립생활과 인간중심 계획의 이해, 인권과 확대

활동보조인 교육 (15시간) : 활동보조인 역할, 직업윤리 및 자기관리, 활동지원1(신체적 장애), 활동지원 2 (정신적 장애), 활동보조 실제, 보조기구 이해

실천1 (9시간) : 건강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기록 및 관리, 사회활동 지원

5) 보건복지부 (2022.11.24. 확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70409&PAGE=9&topTitle=%ED%99%9C%EB%8F%99%EC%A7%80%EC%9B%90%EC%9D%B8%EB%A0%A5

실천2 (8시간) : 일상 및 의사소통 지원

현장실습 10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실습)

위와 같은 기존 내용에서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을 위해 '추가 교육, 수어 교육, 추가 실습' 고안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추가 교육 (10시간)

추가 교육 10시간은 현재 있는 표준 교육과정(전문교육과정)에 추가하여 진행

시청각장애의 이해와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의 자세 (2시간)

연령별 시청각장애인의 생활과 지원 (3시간)

다른 장애를 중복으로 가진 시청각장애인 생활과 지원 (3시간)

시청각장애인 이동교육 (2시간)

② 수어 교육 (30시간)

수어 교육은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에서 진행

기본 한국 수어 교육 (10시간)

회화 중심 수어 교육 (직장, 교통, 학교, 병원, 경찰서, 은행, 공항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20시간)

③ 추가 실습 (10시간)

추가 실습은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에서 진행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봉사활동 (5시간)

수어 통역사와 함께하는 청각장애인과의 2:1 의사소통 실습 (5시간)

둘째로, 한국농아인협회 시도협회(17곳)에서 수어 교육을 실시한다.

각 시도는 한국농아인협회⁶⁾의 시도협회와 위탁을 맺어 활동지원사에게 수어 교육 지원하도록 한다. 교육과정 이수 시간은 추가 교육(10시간), 수어 교육(30시간)과 추가 실습(10시간)으로 총 50시간 진행한다. 수어 교육에서 가르치는 핵심 내용을 교육자료집으로

6) 한국농아인협회는 시·도 17곳에 협회가 있고 협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가 수어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 기관으로 지정

만들어 교육 종결 전 보급, 활동지원사는 활동 중 어려움이 있을 때 자료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어 교육을 이수했을 시 한국농아인협회장으로 수료증을 발급하고 수료증은 발행날짜 기준으로 3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 시 추가 교육을 들어야 한다. 1년당 1회씩 보수교육 의무적 시행한다.

셋째로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단가를 차별화한다.

수어 교육을 이수한 활동지원사는 기존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표준교육: 40시간, 전문교육: 32시간)보다 50시간의 교육을 더 받기 때문에 단가⁷⁾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2022년 장애인활동지업 사업안내에 따르면 “2023년 활동지원사 단가는 15,570원이며 공휴일, 근로자의 날, 22시 이후와 6시 이전의 시간당 금액은 23,355원이다. 시청각장애인 활동보조사 시간당 금액은 기존 활동지원사 시간당 금액의 1.5배로 측정하여 각각 23,355원과 35,032원”(보건복지부, 2022)으로 한다. 단, 활동지원에 쓰이는 교통비, 생활비 등은 각 센터가 활동지원 예산안을 제출하여 활동지원사의 사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활동지원사와 활동지원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⁸⁾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준수하고 각자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⁹⁾.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되,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상해보험 가입 등 별도의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소속 활동지원인력에 대해 배상 책임보험 의무 가입¹⁰⁾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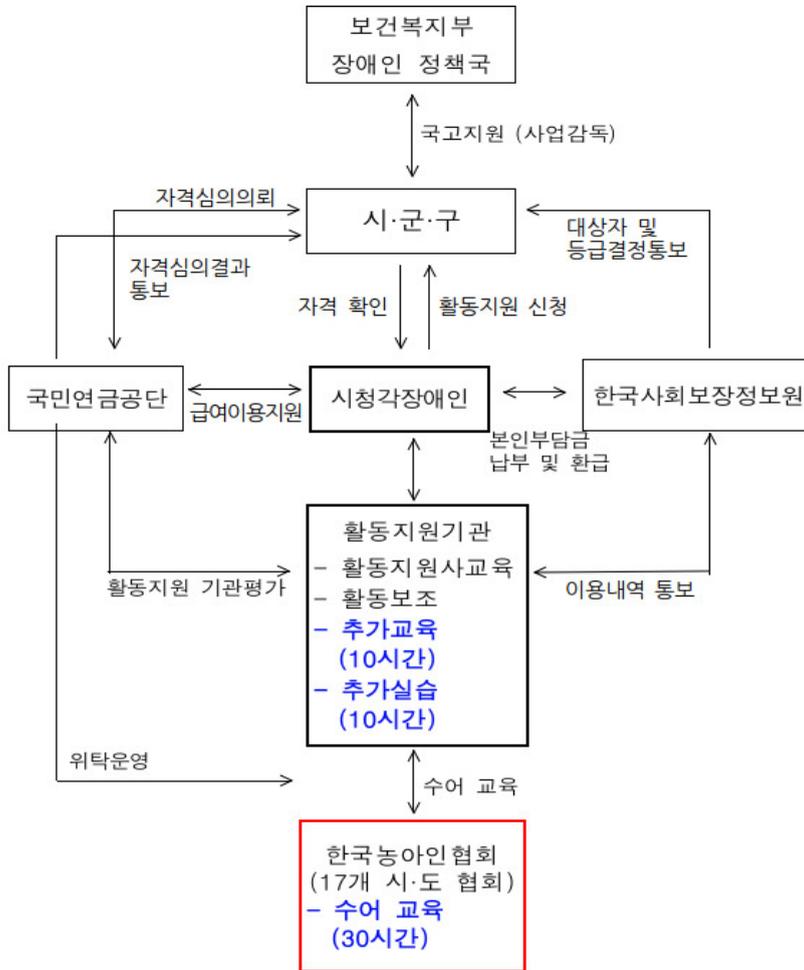
7) 시급은 단가의 25%

8)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4대사회보험 근거 법령 등

9) 4대 사회보험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활동지원 인력의 근로기준 준수,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 보호체계 마련

10) 상해보험 또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해서는 활동지원기관이 전액 부담

3) 시행 및 협력기관



※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안내(보건복지부, 2022)의 장애인 활동지원 체계와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 기관을 추가로 작성하였음

〈그림 1〉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시행 및 협력기관

기본적인 운영체계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따른다. '추가 교육'은 기존의 활동지원사 교육이 이뤄지는 활동지원기관에서 받도록 하며, '수어 교육', '추가 실습'은 시·군·구가 한

국농아인협회의 시도 협회에 위탁운영을 통해 교육받게 한다.

4)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법

본 정책은「장애인활동지원법」의 예산 조달 방법을 따라 조세로 운영. 추가로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에 필요한 인건비를 측정한다. 인건비 측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수어 교육 시간: 30시간× 수어 전문강사 시급: 150,000원¹¹⁾* × 17개의 시도 ×수어 전문 강사 수, 17개의 시도에 2명씩: 34명= 2,601,000,000원

② 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활동지원사 인건비

(기본경비) 일용잡금, 기관부담분 사회보험료,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운영비

(인건비) 급여,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기타 후생경비

※ ②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의 재원방식을 따름

5)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

적으로 시청각장애인이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아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시청각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현재 시청각장애인 수는 9,249명으로, 시청각장애 유형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 할 수 있다.

6) 관련 법령

본 정책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 복지법 제2장 제22조에서 시청각장애인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 및 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또한 제4장 제5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사 파견을 언급하는 등 본 정책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제11조 시청

11) 150,000원은 농아인협회 홈페이지에서 [수어교육] 중 한국수어(기초) 1강좌 (90분내) 수당을 참고한 금액임<http://icdeaf.com/bbs/page.php?hid=interpretation>

각중복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배치, 제12조 시청각중복장애인 전문 통역사 양성 후 시청각중복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한다고 명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각 법령이 본 정책의 필요한 법적 근거로서 활용 가능하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등을 규정하였다.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절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활동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7) 고려사항

시청각장애인의 4가지 유형(전맹 전농, 약시 난청, 전맹 난청, 약시 전농)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형마다 주된 의사소통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수어 교육만 받은 활동지원사는 모든 시청각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장애인 활동지원의 신청 대상은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지만, 대부분의 시청각장애인이 만 65세 이상 노인임. 정책상 만 65세 이상이어도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시청각장애인은 노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는 다른 활동지원사보다 50시간의 추가 교육(의사소통 교육 및 실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기초적인 수어 교육을 받는 것이며, 기존 활동지원사의 임금보다는 높다는 점, 전문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할 수 있는 홍보 방법 마련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V. 기대효과

본 정책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에서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시청각장애는 전 세계적으로도 취약성이 인정되어 외국 같은 경우는 수십 년 전부터 시청각장애와 관련된 법, 정책, 서비스 등이 꾸준히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 아직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 정책이 전무하여 장애인 중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 시청각장애에 대한 개념도 한국 사회에서는 매우 생소하여 이들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에 대한 인식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본 정책이 시행된다면, 한국에서 시청각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은 처음이 되며, 이에 따라 '시청각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의 어려움에 대한 인식이 늘어나 시청각장애인에 관한 관련 법, 정책, 서비스들이 확장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둘째,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사회참여 지원

'의사소통'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수단인 동시에 기본적인 욕구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활동지원사는 간단한 수어 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청각장애인과 의사소통이 매우 어려웠다. 하지만 본 정책이 시행된다면 기초 수어를 배운 활동지원사와 수어를 할 수 있는 시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며, 시청각장애인이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지금 어떠한 것을 가장 원하는지" 등 기본적인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며 나아가 활발한 사회참여를 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앞서 외국 사례에서 언급했던 미국의 SSP의 경우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된 시청각장애인이 후에 SSP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본 정책이 활성화된다면, 시청각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도움을 주는 것에서 나아가 시청각장애인의 경제활동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셋째,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인식 및 업무 어려움 해소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하나의 직업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자라는 인식이 사회에서 강하게 남아있다. 그러한 활동지원사에게 장애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이미지가 아닌 전문가로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기본 시급의 1.5배를 지급하여 기존의 단순 아르바이트 수준이었던 임금을 조금은 보완

할 수 있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였던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시청각장애인과의 지원 시 정확한 방법을 몰라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본 정책에서 제시하는 추가 교육, 수어 교육, 추가 실습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에게 알맞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성희, 이민경, 오욱찬, 이한나, 오미애, 오다은, 류진아, 주혜선, 이동석, 김용진, 정희경, 김종인 (2020). 시청각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20-121.
- 김철주(2021). 시청각장애인의 『헬렌켈러법』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사회법연구, (43), 125-167.
- 김현지, 김용진, 오윤지, 김태용, 이혜수 (2021). 2021 장애통계연보. 한국장애인개발원.
- 곽지영, 이은정, 김정득, 문현주, 윤태실. (2022). 제주지역 후천적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실태와 서비스 욕구에 대한 탐색연구 : 성인기에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중심으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구 중복·지체부자유아교육), 65(2), 95-117.
- 보건복지부, 한국장애인개발원(2022). 활동지원사양성 교육 교재. <http://www.mohw.go.kr>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시청각장애인(Deaf-Blind)의 욕구 및 실태조사 연구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2022). 11-1352000-000378-10. 105-168. <http://www.mohw.go.kr>
- 박경란, 이태훈, 고은, 홍성계 (2021). 시청각장애학생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보고서. 국립특수교육원.
- 박경란(2020). 일본 시청각장애인 현황과 지원 실태 분석.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11(2), 41-64.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
-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 안태희, 이태훈 (2021). 시청각장애인 고용을 위한 인적서비스 지원 방안. 한국장애인공단. 정책연구 2021-04. 1-194.
- 厚生労働省(2015). 障害者総合支援法における意思疎通支援等について.
- 국가정보법령센터. <https://www.law.go.kr/법령/장애인복지법> (22.11.05. 검색)
- 인천광역시시능아인협회 <http://icdeaf.com/bbs/page.php?hid=interpretation> (22.11.20. 검색)
- 장애인활동지원 <https://www.ableservice.or.kr:8443/> (22.11.15. 검색)
- 조원석, 김경미 (2018). 시청각장애인의 자립적 삶 지원 기반에 대한 연구 : 이동, 의사소

시·청각 장애인 전문활동지원사 양성 정책

통, 정보·통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39(39), 57-80.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계획	다(多)가치 주택
결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2. 연구방법

계획	교수님께 자문구하기, 유사 사업 방문 후 관계자 만남 및,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인식 구글폼 설문조사
결과	교수님께 자문구하기, 시청각장애인 전문 기관 (밀알복지재단 헬렌켈러센터) 방문 및 센터장과의 만남

3. 정책내용

계획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을 통해 시청각장애인의 자립 향상 도모
결과	기존 활동지원사에게 수어교육을 실시하여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 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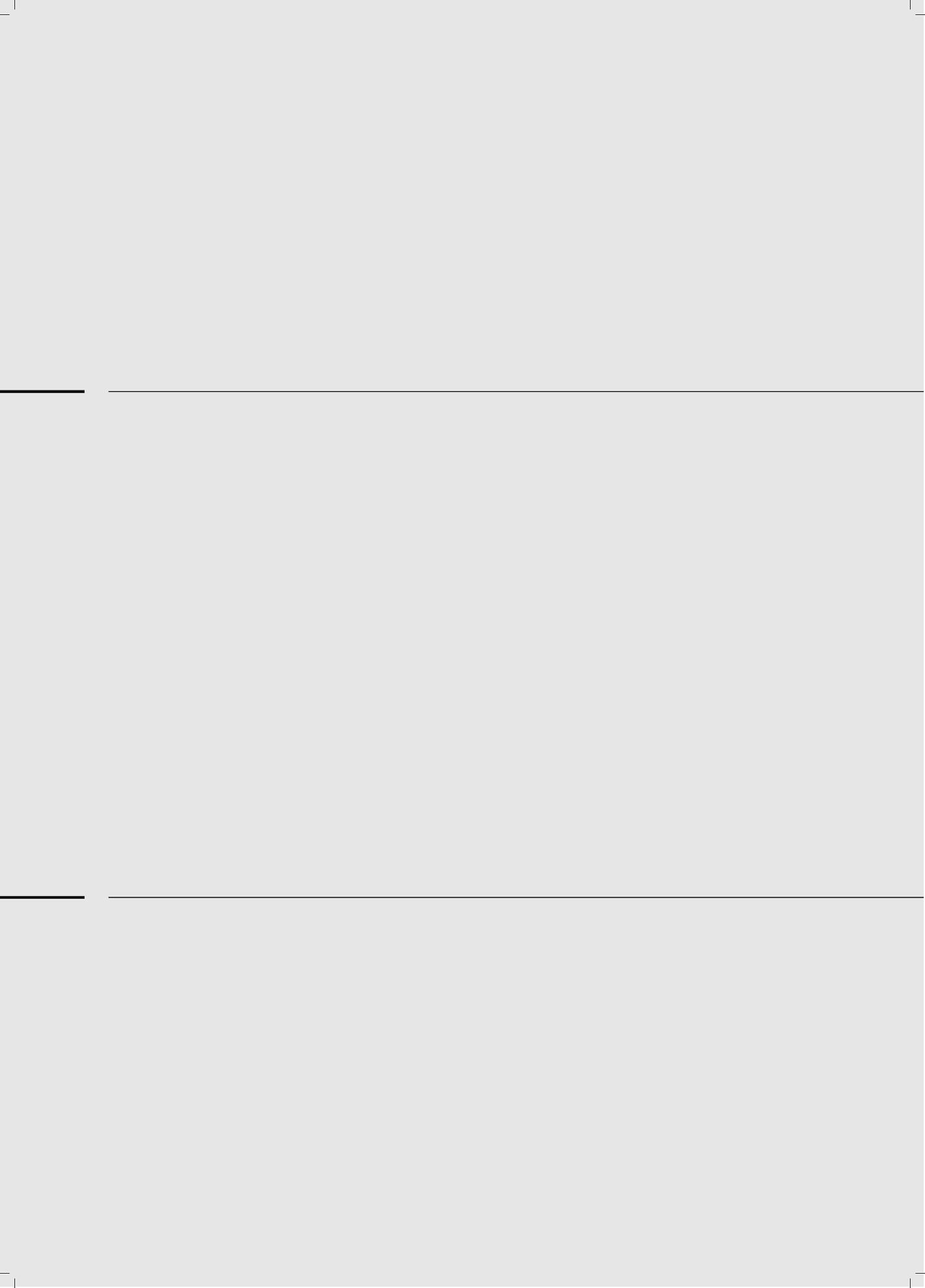
4. 적용방안

계획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원주택 설계 및 입주
결과	한국농아인협회와 함께 추가 교육(10시간), 추가 실습(10시간), 수어 교육(30시간) 추가 시행 시청각장애인 전문 활동지원사를 양성하여 기존 활동지원사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청각장애인의 불편함 해소 가능

5. 기대효과

계획	시청각장애인 지원주택을 통한 시청각장애인의 주거 문제 해결 및 자립
결과	1. 한국에서의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2. 시청각장애인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사회참여 지원 3.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인식 및 업무 어려움 해소

시각 장애인의 자립적인 오프라인 의류 쇼핑 환경 조성 정책



시각장애인 대상

자립적인 오프라인 의류 쇼핑환경 조성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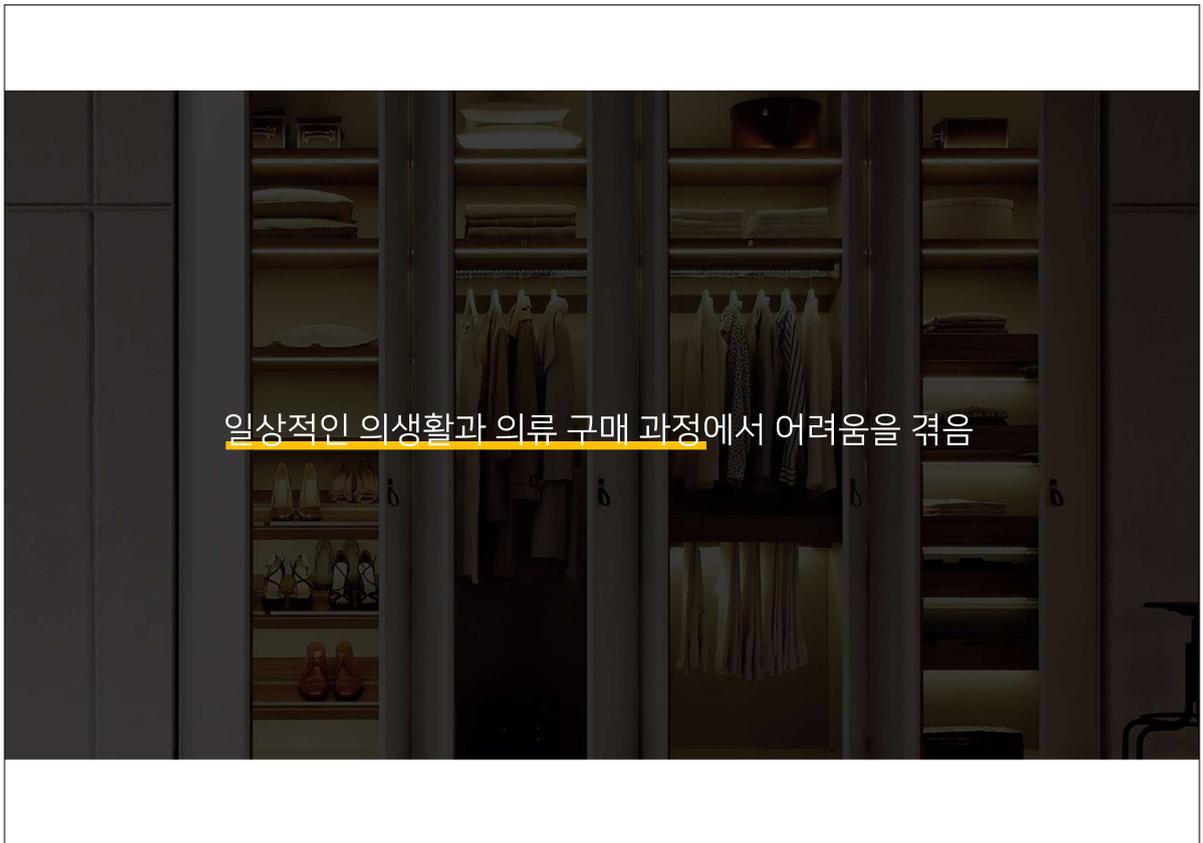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의생활 환경 구축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 방법 제시



SAW
김소정, 이우현

INDEX

1. 정책 제언 배경
2. 정책 개요
3. 정책 세부
4. 홍보 및 상용화 방안
5. 추진 체계



정책 제안 배경

온·오프라인 의류 쇼핑 환경 미흡

온라인 쇼핑 환경의 한계
독립적인 **오프라인** 의류 쇼핑 어려움
구매할 의류 구별에 대한 어려움

후천적 시각 장애인 비율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재활 패러다임에서
권리 기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정책의 미비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한정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자 주체**로 인식되게 하고,
시각장애인이 **독립적인 의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사례 분석 [시각 장애인 의류 쇼핑 접근성 제고 방안]

온라인 쇼핑 지원 사업



이베이 코리아 스마일페이
소리마켓 와들

의류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



패션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자

들리는 옷장 사업



코오롱 기업 & 스타트업 '슬룩'
옷에 센서 부착 후 정보 제공

의류 기업 대상 시각장애인의 자립적인 의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제공 유도

관련 법률 개정 / 인센티브 제공 / 강제성 부과

매장직원 교육



비콘 설치



NFC 태그 부착



시각장애인의 **자립적인 의류 쇼핑 메커니즘**

매장 입구



- 비콘으로 매장 배치 정보 전송
- 스마트폰으로 음성 안내 출력

매장 내부



- 의류 매장 직원의 맞춤형 고객 응대 서비스
- 옷걸이에 NFC 태그 부착
- 스마트폰으로 옷에 대한 음성 정보 출력

일상 생활



- 의류 구매 시, 옷에 NFC 태그 부착
- 일상 속 의생활 지원

의류 매장의 범위

- 제 1종 근린생활 시설에 포함되는 의류매장
- 판매시설에 포함되는 의류 매장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

제1종 근린생활 시설

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1,000㎡ 미만인 시설

판매시설

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

의류 기업의 범위

자연인, 법인, 공법인, 사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의류에 대한 제조업, 판매업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자

「장애인등편의법」에 근거

의류 및 옷걸이 **NFC 태그 스티커** 부착 서비스



세부 내용

- 진열된 의류 옷걸이에 NFC 태그 스티커 부착 의무화
- NFC 태그에 스마트폰 접촉 시, 해당 의류에 대한 기본 음성 정보 출력
- 의류 구매 시, NFC 스티커 부착 서비스 제공
- 매장용 태블릿 PC 인코딩 앱 활용

01

대상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의류 매장에 의무화

02

법적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근거
동법 제15조의 시행령 제정

03

의류 매장 배치 정보를 전달하는 **비콘** 설치



세부 내용

- 매장의 형태, 점원의 위치, 진열된 의류 배치 구역에 대한 음성 정보를 송신하는 비콘 설치
-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비콘에서 송신된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함

01

대상

제1종 근린생활 시설 및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의류 매장

- 제1종 근린생활 시설: 권장
- 판매시설: 의무

02

법적 근거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및 제8조,
동법 시행령 제3조

03

의류 매장 배치 정보를 전달하는 비콘 설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 개정

구분	편의 시설	내부 시설	위생 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
				점자 블록	유도/안내 설비	경보/피난 설비	
제1종 근린생활 시설							
판매시설					권장		

현 법률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구분	편의 시설	내부 시설	위생 시설	안내시설			기타 시설
				점자 블록	유도/안내 설비	경보/피난 설비	
제1종 근린생활 시설					권장		
판매시설					의무		

개정 후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시각 장애인 의류 쇼핑 지원 교육 의무화

세부 내용

- 장애인 소비자 맞춤형 응대 교육을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류 쇼핑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
- 자체 교육, 강사 초빙, 교육기관 위탁, 강사지원 사업의 4가지로 실시
-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교육 실시
- 신규채용자 교육에 시각 장애인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 포함

01

대상

의류 기업 내 모든 근로자
/ 개별 의류 매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고객 응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 교육 가능)

02

법적 근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제2항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 금지 조항)

03

자수 와펜을 활용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제공 유도

세부 내용

- NFC 태그를 브랜드 로고 및 기타 디자인이 들어간 자수 와펜 형식으로 제작
-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의류에 부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제공 유도
- 시각 장애인 대상 자수 와펜 무료 제공
- 비장애인 대상 자수 와펜 유료 제공

국내 사례



나이키 바이유

기대효과

- NFC 태그 서비스의 홍보 및 상용화 효과
- 비장애인의 시각 장애인의 NFC 태그를 활용한 의류 쇼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홍보 및 상용화 방안

세액 공제 인센티브



- 모든 의류 태그에 NFC 칩 내장 시, 설비투자 금액의 일정 % 세액 공제
- 시각장애인: 옷의 질감, 패턴, 색깔에 대한 정보 인코딩
- 비장애인: 세탁 방법, 환경 관련 정보 인코딩
- 순환 경제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기대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호 나에 근거

행정 복지센터 교육



- 지역별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정책 대상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의견 청취 가능
- 피드백 반영 및 정책 개선

추진 체계

성과 목표

정책 성과 평가 시,
성과 지표의 달성도 및
시각 장애인의 의생활의 질 개선 정도 등
결과 측면에서 평가

성과지표	유형	세부 목표
시각 장애인 의류 쇼핑 지원 매장 전문 인력 양성	비계량	전문 교육으로 의류 매장 직원의 시각 장애인 소비자 응대 역량 강화
매장 입구 비콘 수	계량	2023년 목표 설치율 제1종 근린생활 시설: 20%/ 판매시설: 50%
NFC 태그 부착 상용화 수준	계량	2023년 목표 상용화 수준 30%
시각 장애인 대상 NFC 태그 이용방법 교육 인력 양성	계량	시각 장애인 대상 교육 규모 확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성과 측정 및 피드백 체계 확립 요구도 조사 및 만족 조사를 기반으로 콘텐츠 개발 및 보완
시각 장애인 만족도 평가	계량	시각장애인 만족도 환류 체계 확립 2023년 목표 만족도 4.0/5.0 달성

추진 체계

평가 및 환류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정책국을 통해
매년 성과 목표 달성도 평가 및 모니터링
관련 이해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주기적 환류 및 성과 관리 체계화
정책 대상자의 피드백 적극 반영

성과 목표	2023년	2024년	2025년
매장 입구 비콘 수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 판매시설: 50%	제1종 근린생활시설: 30% 판매시설: 70%	제1종 근린생활시설: 50% 판매시설: 100%
NFC 태그 부착 서비스 상용화 수준	30%	50%	70%
시각 장애인 NFC 태그 사용 역량 수준	60%	70%	90%
시각 장애인 만족도 평가	4.0/5.0	4.5/5.0	4.8/5.0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선호에 따라 옷을 고르고 입을 수 있으며,
누구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

시각장애인의 독립적인 의생활 환경 구축을 위한 법률적, 기술적 방법 제시
장애인 권리에 대한 인식/사회적 패러다임 변화의 계기

시각장애인 대상 자립적인 오프라인 의류 쇼핑 환경 조성 정책 제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각 장애인의 자립적인 오프라인 의류 쇼핑 환경 조성 정책

제안 4팀

〈제안 개요〉

본 정책의 목적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자 주체로 인식되게 하고, 의류 시장의 새로운 확장 방향을 제시하여 시각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의류 소비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각장애인의 의류 쇼핑 접근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의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규율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정책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 소비자 응대 교육을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류 쇼핑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한다. 둘째, 의류 및 옷걸이 NFC 태그 스티커 부착 서비스 제공의 경우 진열된 의류 옷걸이에 해당 의류에 대한 음성정보가 저장된 NFC 스티커를 부착하고, 의류 구매 시 개별 의류에 해당 의류에 대한 정보가 담긴 NFC 태그 스티커 부착 서비스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셋째, NFC 칩이 내장된 자수 와펜을 통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넷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주도로 행정복지센터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여 지역별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중심으로 NFC칩 음성정보를 활용한 쇼핑 환경에 대해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을 통해 첫째, 시각장애인의 의생활 전반에서의 자율성 제고, 둘째, 시각 장애인의 자립적인 의생활 지원, 셋째, 시각 장애인의 의류 소비에 대한 권리 정립 및 의류 기업이 시각 장애인을 동등한 소비자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넷째, 비장애인의 시각장애인 의류 쇼핑에 대한 인식 개선 계기 마련, 다섯째, 근린 생활 시설로의 서비스 확장 가능성 제고라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선천적 원인의 시각장애인의 비율은 11.7%에 불과하며, 후천적 원인의 시각장애인이 87.2%를 차지한다는 (보건복지부, 2021¹⁾) 통계 결과 처럼 시각장애는 다수가 후천적으로 발생하여, 시각 장애인의 색에 대한 인지와 패션에 대한 욕구는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의류 쇼핑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각 장애인은 온오프라인에서 의류를 구매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온라인 환경 (쇼핑 어플 등)은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나, 의류의 질감이나 착용감 등 오프라인에서만 경험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온라인 쇼핑 환경엔 한계가 존재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의류 쇼핑 시, 시각 장애인들은 보조인을 동반하여 쇼핑하거나 필요한 의류를 대신 구매해주는 방식으로 의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조인이 없는 경우, 의류 쇼핑을 경험하기 쉽지 않으며,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짧은 시간 내에 시각 장애인의 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여 효과적인 소비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류 쇼핑 후에도, 구매한 의류를 식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의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5차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으로 시작해 장애 등급 폐지, 탈시설 등 기존의 재활 패러다임에서 권리 기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시각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및 정책이 미비하다.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 구축 정책의 대부분은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한정되어있다.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 및 정책은 미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 시각 장애인이 의류 시장에서 동등한 소비자로 존중받지 못하는 문제 상황 해결 및 의생활 영역에서의 시각 장애인의 자립 생활 지원 필요한 상황이다. 의생활 영역에서 시각 장애인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의 도덕성에만 의존하는 것보다 강제성을 띠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이 높으리라 판단된다.

본 정책의 목적은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소비자 주체로 인식되게 하고, 의류 시장의 새로운 확장 방향을 제시하여 시각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의류 소비 프로세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시각장애인의 의류 쇼핑 접근성을 제고하고 독립적인 의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규율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한국장애인개발원(2021), 「장애인삶패널조사」, 장애 발생 원인 및 시기.

II. 정책연구 방법

1. 국외 사례 조사

영국은 현재 양질의 시각 장애인 의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의류 매장에 데려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민간단체차원에서는 음성 출력 서비스를 지원하는 보조장치 및 점자 태그 등 장치 및 점자 태그 등의 온오프라인 판매가 활성화 되어 있어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조 장치를 구매할 수 있다.

특히 Royal National Institute of Blind People(RNIB)라는 민간단체에서는 시각 장애인 독립생활 가이드를 제공하고 세탁 가능한 음성 인식 라벨 판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의류품·생활용품·의약품 등 원하는 물품에 부착할 수 있는 태그 및 태그에 대한 음성 출력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디오 펜(RNIB penfriend audio labeller) 판매하고 있다.

2. 국내 사례 조사

시각장애인 온라인 쇼핑 지원 민간 의류 기업으로는 이베이코리아가 대표적이다. 이베이코리아는 스마일페이, 모바일 쇼핑 어플리케이션 소리마켓, 와들 등에서 텍스트리딩 및 사물인식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한 스크린리더 기능으로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쇼핑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시각장애인의 온라인 의류 시장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프로그램 오류로 서비스가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쇼핑 지원이 온라인에 한정되어 있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여전히 소비자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시각장애인 의류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6 ~ 2017년 일부 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와 코디네이터가 시각장애인과 의류매장에 동행해 취향 및 필요에 맞는 의류를 골라주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해당 사업은 참여자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의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지만 시간 및 인력의 문제로 지속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여 2017년 이후 실시 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코오롱 그룹과 스타트업 '솔룩'이 협업한 '들리는 옷장'사업의 경우 시각 장애인용 의류

정보 음성 출력 서비스, 슬록 스마트폰 앱, 무선 통신 태그를 활용하여 오프라인 매장에서 시각 장애인의 자립적인 의류 쇼핑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행사에 참여한 한빛 맹아원은 무선 통신 태그를 활용한 의류 매장의 운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의류 산업의 규모와 다양성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 차원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시각 장애인의 의류 산업에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Ⅲ. 제안 정책 내용

1. 정책 적용 방안

법률 개정, 인센티브 제공 및 강제성 부과 방법을 통해 의류 기업이 시각 장애인의 자립적인 의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한다. 각장애인 의류 쇼핑 지원 교육을 의무화하고 매장 입구에 매장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을 제공하는 비콘을 설치한다. 또한 의류 및 옷걸이에 NFC 태그 부착하거나 시각 장애인이 의류 구매 시, 구매한 의류에 NFC 태그를 부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각 장애인의 자립적인 의류 쇼핑을 위한 메커니즘 설계는 다음과 같다.

① 매장 진입 시, 입구에 설치된 비콘에서 매장 배치 전반에 관한 정보를 시각장애인의 스마트폰으로 전송, 음성 안내 출력

② 의류 매장 직원의 안내와 옷걸이에 부착된 NFC 태그를 통해 시각 장애인의 오프라인 의류 쇼핑 지원한다.

옷걸이에 부착된 NFC 태그를 통해 옷의 색깔, 패턴, 질감 등의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고, 의류 매장 직원은 비장애인과 다른 시각장애인의 특징을 이해하고, 시각장애인 맞춤형 고객 응대서비스 제공한다.

③ 의류 구매 시, 구매한 의류에 해당 의류에 대한 정보가 담긴 NFC 태그 스티커 부착

④ 부착된 NFC 태그를 바탕으로 일상 속 의생활 지원

2. 정책의 대상과 범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기준에 근거하여 의류 매장의 범위를 설정한다.

「장애인등편의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대상 시설)에 따라 규정된 시설 중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된 제1종 근린생활 시설, 판매시설에 포함되는 의류매장을 정책 대상으로 선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제1종 근린생활 시설이란 슈퍼마켓·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이상 1,000㎡ 미만인 시설을 의미하고 판매 시설은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

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의미한다.

의류 기업의 범위는 '자연인, 법인, 공법인, 사법인 여부를 불문하고 의류에 대한 제조업, 판매업 등의 사업을 행하는 자'로 설정하도록 한다.

3. 정책의 세부 내용

시각장애인 의류 쇼핑 지원 교육을 의무화한다. 장애인 소비자 응대 교육을 의무화하여 시각장애인의 의류 쇼핑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도록 한다. 민간 소비자와 다른 특성을 가진 시각장애인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시각장애인이 연상하기 쉽게 의류를 설명하고, 상황에 적절한 의류를 추천하는 맞춤형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한다.

오프라인 매장에서의 신속한 의류 쇼핑 및 상황에 맞는 코디 추천을 원하는 정책 대상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의류 쇼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NFC 태그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 사례 '시각장애인 의류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에서 차용하여 인력의 한계가 있던 해당 사업의 내용을 민간 교육으로 이전시켜 유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해당 교육은 고용노동부 5대 법정 의무 중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 대상은 의류기업 내 모든 근로자 및 개별 의류 매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고객 응대 근로자이며 내용은 교육은 자체 교육, 강사초빙, 교육기관 위탁, 강사지원사업의 4가지로 실시하도록 한다. 해당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의무 교육을 실시하며, 신규채용자 교육에 시각장애인 고객 응대 서비스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기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마찬가지로 50인 미만일 경우 간이 교육(간이 교육 자료 게시·배포 등)도 가능하도록 한다.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를 가진 소비자에 대한 응대 방식 가이드라인 마련 및 교육을 권고한다,

본 교육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에 근거해 시행령을 제정하도록 한다.

제15조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 정책의 시행기관은 고용노동부 및 보건복지부로서 모든 의류기업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의류기업에서 자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

매장 입구에 매장 배치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비콘 설치의 경우 매장의 형태, 점원의 위치, 진열된 의류 배치 구역에 대한 음성 정보를 송신하는 비콘을 설치하도록 하여 시각 장애인이 스마트폰으로 비콘에서 송신된 정보를 음성으로 전달받을 수 있게 한다.

적용 범위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의류 매장으로 제1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의류 매장은 비콘 설치 권장하며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의류 매장은 비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한다. 해당 내용은「장애인등편의법」제7조, 제8조, 동령 제3조에 근거하도록 한다.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3. 공동주택
4. 통신시설
5.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제4조를 개정하여 제1종 근린시설과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의류 매장에의 비콘 설치를 각각 권장, 의무화하도록 하며 <표 1>에 따라 현행법상 ‘권장’에 해당하는 유도·안내 설비를 시행령 개정을 통해 <표2>와 같이 제1종 근린시설과 판매시설에 유도·안내 설비 설치를 각각 권장, 의무화해 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표1. 현 법률에 따른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 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객실, 침실	관람설,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대표소, 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제 1 종 근린 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판매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의무						권장

〈표2. 개정 후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편의 시설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그 밖의 시설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욕실	샤워실, 탈의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 설비	객실 침실	관람실, 열람석	접수대, 작업대	대표소판매기, 음료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 시설
제 1 종 근린 시설	의무	권장	의무	의무	권장	권장	권장	권장			권장						
판매 시설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권장	권장			의무	의무					권장

동법 제24조(이행강제금) 및 시행령 제12조 2(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의류기업 및 개별 의류매장과 협력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의류 및 옷걸이 NFC 태그 스티커 부착 서비스 제공의 경우 진열된 의류 옷걸이에 해당 의류에 대한 음성정보가 저장된 NFC 스티커를 부착하고, 의류 구매 시 개별 의류에 해당 의류에 대한 정보가 담긴 NFC 태그 스티커 부착 서비스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매장용 태블릿 PC, 매장 직원의 스마트폰 인코딩 앱을 활용하여 NFC 태그 스티커에 해당 의류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한다. 의류 기업의 개별 온라인 쇼핑몰 URL을 활용하여 해당 의류에 대한 색깔, 패턴, 질감에 대한 정보를 음성으로 우선 출력하도록 하며 부착된 NFC 태그에 스마트폰 접촉 시,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없이도 해당 의류에 대한 음성 정보 출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시행 대상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모든 의류 매장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차용하여 동법 제15조의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한다.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수화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시행령 제8조(정당한 편의의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1. 음성변환용 코드
2. 청각, 촉각 등의 감각을 통하여 습득할 수 있도록 인쇄물 정보를 변환시켜주는 전자적 표시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의를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모든 의류 태그에 NFC 내장 시, 설비투자 금액의 일정 % 세액 공제 인센티브 부여하도록 하며 생산하는 모든 의류에 NFC 태그를 부착하여 비장애인인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의류에 대한 정보 제공 시, 투자 금액의 일정 %에 대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한다. 비장애인인 의류 구매 시, NFC 태그에 옷에 대한 정보 및 환경에 미친 영향 등에 관한 정보를 인코딩하도록 한다. 특히 시각장애인이 의류를 구매할 경우 NFC 태그에 옷의 색깔, 패턴, 질감에

대한 기본 정보가 우선 출력되도록 인코딩하도록 한다. 세액 공제 비율은 기업의 규모 (중소기업, 중견기업)에 따라 조정하도록 한다.

본 정책은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 및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일례로 2020년 EU는 신순환경제실행계획 (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의 일환으로 EU 내 디지털 상품 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도입 계획 발표, 의류 및 가구에 대한 디지털 상품 여권 도입 예정이다. 디지털 상품 여권이란 해당 제품의 원산지, 구성, 수명 정보 등 제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품에 디지털화하여 제품의 재활용·재사용률을 높임으로써 순환 경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자원 활용을 목표로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처럼 유행에 따라 제품 라인이 빠르게 변화하여 제품 생산 후 소비 ~ 폐기까지의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고, 폐기량이 많으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의류 기업의 특성 고려하도록 한다. 이에 대한 사례로 글로벌 의류 브랜드 판가이아(Pangaia)와 노발리스(Novalis)의 디지털 상품 여권 등이 있으며 해당 의류 기업들은 소재 원천과 환경에 미친 영향 등을 옷 태그에 QR 코드로 담아 소비자에게 제품 정보를 전달하도록 한다.

본 정책을 통해 시각장애인의 자립적인 의류 쇼핑 지원, 옷 자체의 재활용률 향상, 순환 경제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자원 활용 기대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조세특례제한법」제 24조 제1호 나에 따른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해당 정책에 대한 주관부서는 보건복지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의 공공기관과 민간 의류 기업 및 의류 매장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해당 정책의 홍보 및 상용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NFC 칩이 내장된 자수 와펜을 통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기업을 대상으로 NFC칩을 브랜드 로고 및 기타 디자인이 들어간 자수 와펜 형식으로 제작하여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의류에 부착할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제공을 유도한다.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NFC 자수 와펜을 통한 의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 및 의류 정보 음성 출력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비장애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NFC 자수 와펜을 통한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한다. 와펜 판매로 올린 수익의 일부를 해당 사업비용으로 재투자하도록 유도한다.

해당 대표 사례로는 나이키 바이 유 (Nike by you)가 있다. 나이키의 커스터마이징 서비스로 의류 제품 디테일을 고객이 직접 결정하도록 하며 <그림1>에 따른 소비자는 그래픽 아트, 자수 와펜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의류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도록 한다.

오프라인 매장 별로 상이한 자수와펜을 판매하여, 소비자들의 구매를 유도하도록 한다.



<그림1. 나이키 자수 와펜>

상위 내용을 통해 NFC 태그 서비스의 홍보 및 상용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지인을 대상으로 NFC 의류 정보 음성 출력 서비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홍보가 가능하며 비장애인의 시각 장애인의 NFC 태그를 활용한 의류 쇼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시각 장애인의 자립적인 오프라인 의류 쇼핑 환경 조성 정책

또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주도로 행정복지센터 교육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진행하여 지역별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NFC칩 음성정보를 활용한 쇼핑 환경에 대해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도록 한다.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다수의 정책은 시각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으며, 많은 시각장애인이 복지사를 통해 정책 및 사업을 안내를 받도록 한다. 지속적으로 사용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환류하며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정책을 개선하도록 한다.

본 내용을 통해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효율적인 정책을 홍보하고 정책 대상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의견 청취를 통한 정책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본 정책의 성과 평가 시, 성과지표의 달성도 및 시각장애인 의생활의 질 개선 정도 등 결과 측면에서 평가하도록 한다. <표3>에 따라 세부 정책 별로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평가한다.

<표3. 성과 지표 및 세부 목표>

성과지표	유형	세부 목표
시각장애인의 의류 쇼핑을 지원하는 매장 전문 인력 양성	비계량	· 전문 교육 및 심화교육으로 의류 매장 직원의 시각 장애인 소비자 응대 역량 강화
매장 입구에 설치된 비콘 수	계량	· 2023년 목표 설치율 - 제1종 근린시설: 20% 달성 - 판매시설: 50% 달성
NFC 태그 부착 서비스 상용화 수준	계량	· 2023년 목표 상용화 수준 30% 달성
시각 장애인 대상 NFC 태그 이용 방법 교육 인력 양성	계량	·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성과측정 및 피드백 체계 확립 · 시각장애인 대상 교육 규모 (횟수·분야·인원·대상) 확대 · 요구도 조사 및 만족 평가를 기반으로 시각 장애인 의류 쇼핑 지원 서비스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완
시각 장애인 NFC 태그 사용 역량 수준	계량	· 2023년 목표 역량 수준 60% 달성
시각장애인 만족도 평가	계량	· 시각장애인 의류 쇼핑 지원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환류 체계 확립 · 2023년 목표 만족도 4.0/5.0 달성

시각 장애인의 자립적인 오프라인 의류 쇼핑 환경 조성 정책

〈표4〉에 따라 보건복지부 내 장애인 정책국을 통해 매년 성과 목표 달성도 평가 및 모니터링하도록 하며 시각장애인 복지관 및 관련 정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 환류 및 성과 관리 체계화, 정책 대상자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표4. 연도별 성과 목표 달성도〉

성과목표	23년	24년	25년
매장 입구에 설치된 비콘 수	제1종 근린시설: 20% 판매시설: 50%	제1종 근린시설: 30% 판매시설: 70%	제1종 근린시설: 50% 판매시설: 100%
NFC 태그 부착 서비스 상용화 수준	30%	50%	70%
시각 장애인 NFC 태그 사용 역량 수준	60%	7%	90%
시각장애인 만족도 평가	4.0	4.5	4.8

V. 기대효과

본 정책을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의생활 전반에서의 자율성 제고

시각 장애인의 자립적인 의류 쇼핑 환경을 구축하여 매장 안내 비콘, NFC 태그 및 음성 출력 서비스, 의무 교육을 이수한 매장 직원의 시각 장애인 의류 쇼핑 지원을 바탕으로 시각 장애인의 독립적인 의류 쇼핑 환경을 구축한다.

둘째, 시각 장애인의 자립적인 의생활 지원

의류에 부착된 NFC 태그를 바탕으로 구매한 의류 구별 및 스타일링을 용이하게 하여 의생활에서의 자율성 향상을 기대한다.

셋째, 시각 장애인의 의류 소비에 대한 권리 정립 및 의류 기업이 시각 장애인을 동등한 소비자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넷째, 비장애인의 시각장애인 의류 쇼핑에 대한 인식 개선 계기를 마련한다.

다섯째, 근린 생활 시설로의 서비스 확장 가능성

의약품, 생활용품, 식료품으로 확장하여 근린시설 이용 전반에 NFC 태그 부착이 상용화 될 경우,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전반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문헌

- 김상아·구유리·김민수, 「시각장애인의 오프라인 쇼핑경험향상을 위한 서비스시나리오 제안 연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융합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커뮤니케이션디자인협회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회, 2021, pp. 67-82
- 양민지, 「시각장애인의 독립적 의생활을 위한 모바일앱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16
- 이정기, 「공유가치창출(CSV) 전략의 유형화 : 사례분석」, 경북대학교, 2014
- INNOPOLIS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고령자 및 장애인 보조 장치 시장」, 글로벌 시장동향 보고서, 2021.06.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첨1], [별첨2]
-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나이키, <https://www.nike.com/kr/>
- 박재홍 외 3, 시각장애인을 위한 패션을 읽어주는 AI, FASHION READER, 경희대 캡스톤 경진대회, 2020
- 송창홍, '세계 시장 규모 73조원, 장애인 전용 의류 관심 증가', 어패럴뉴스, 2021.06.01. (http://m.apparelnews.co.kr/news/news_view/?idx=190563 (접속일: 2022.10.13.))
- 유준선, '배리어프리 사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사회', 미디어 경청, 2022.05.31. (<https://www.goeonair.com/mobile/article.html?no=26684> (접속일: 2022.10.13.))
- 이동현, '패션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제적 가치창출', Fashion Post, 2020.04.13. https://fpost.co.kr/board/bbs/board.php?bo_table=fsp26&wr_id=23(https://fpost.co.kr/board/bbs/board.php?bo_table=fsp26&wr_id=23 (접속일: 2022.10.13.))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삶패널조사」, 장애 발생 원인 및 시기. 2021.
- SK 행복나눔재단, '시각 장애인에게 소리로 의류 정보 알려주는 '들리는 옷장', 17일 성황리 종료', Newswire, 2021.04.21. (<https://www.newswire.co.kr/newsRead.php?no=921994> (접속일: 2022.10.13.))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계획	NFC 기술을 활용한 시각장애인 쇼핑 환경 조성 정책
결과	시각 장애인의 자립적인 오프라인 의류 쇼핑 환경 조성 정책

2. 연구방법

계획	문헌조사, 인터뷰
결과	관련 법령 분석, 문헌조사, 인터뷰

3. 정책내용

계획	<p>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을 통해 의류 매장에 장애인 안내용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매장 입구에서 매장 배치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각 진열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출력 서비스 시행 지침 제공</p> <p>의무 조성 환경 외에, 개별 의류에 NFC칩을 부착하는 서비스는 의류 기업에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유인 정책 활용</p> <p>NFC칩 태그에 담긴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텍스트 리딩 기능 어플리케이션은 정부 차원의 통일된 플랫폼 개발</p>
결과	<p>의류매장 고객응대근로자에게 시각 장애인 의류 쇼핑 지원 교육 의무화</p> <p>장애인등편의법의 개정을 통해 의류 매장에 대한 음성 정보를 송신하는 비콘 설치 의무화</p> <p>·진열된 의류의 옷걸이, 시각장애인이 구매한 의류에 NFC 태그를 부착해주는 서비스 제공 의무화</p> <p>의무 조성 환경 외에 모든 의류에 NFC 태그 내장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추가 제시</p> <p>NFC 태그가 내장된 자수 와펜, 행정복지관을 통한 홍보 및 상용화 방안 제시</p> <p>행정복지관을 통해 시각 장애인을 대상으로 NFC 태그를 활용한 의류 쇼핑 서비스 이용 교육</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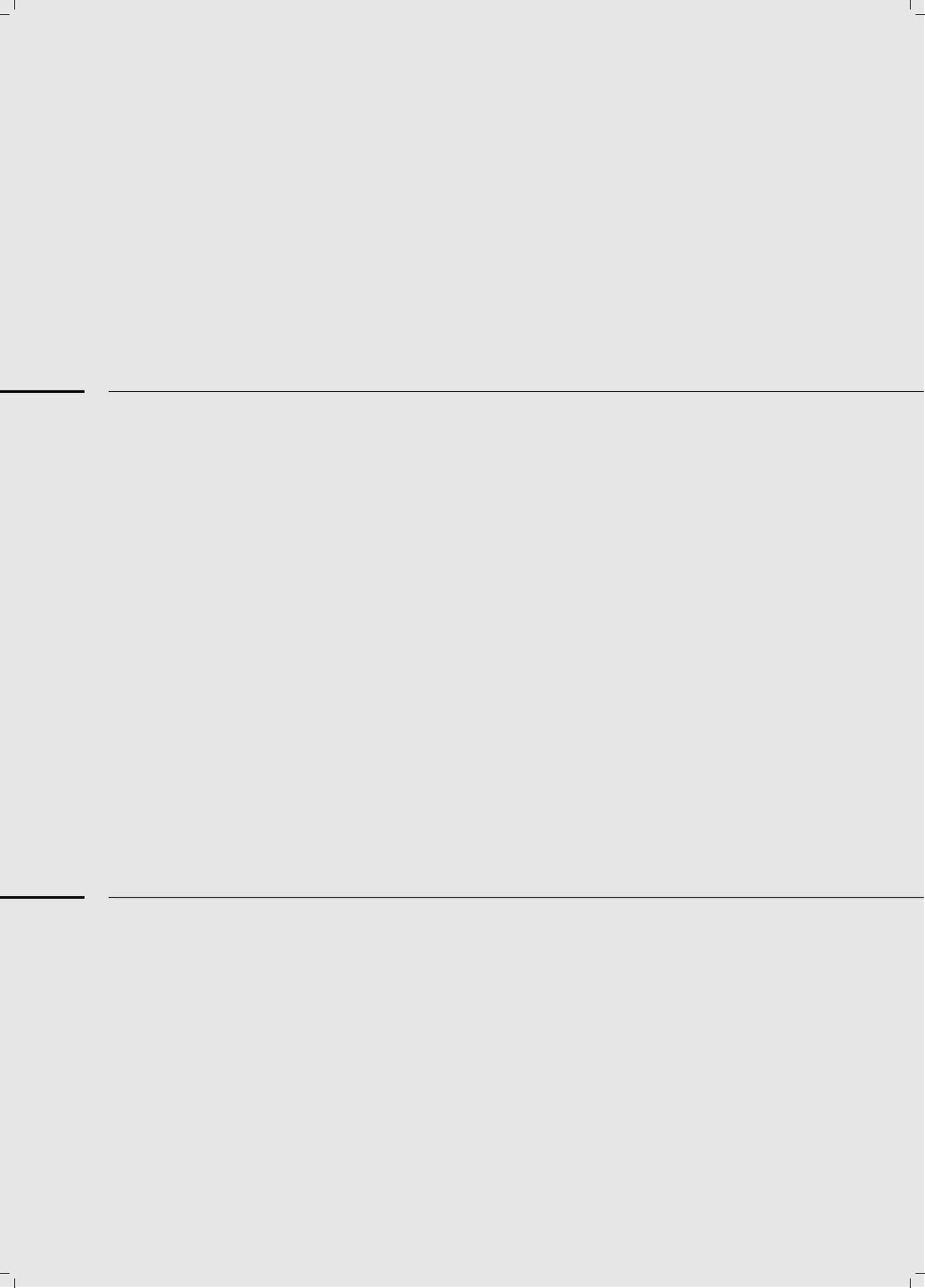
4. 적용방안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등편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 개정 및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 기술 가이드라인 제시 · NFC태그에 담긴 정보를 음성으로 출력하는 텍스트리딩 기능 어플리케이션 제작 · NFC 태그를 이용하여 매장 입구에서 매장 배치에 관한 정보 전달, 각 진열대에 대한 정보 제공, 매장에서 개별 의류에 대한 정보를 담은 NFC 옷에 부착해주는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서도 의류를 구별할 수 있도록 지원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 고객응대근로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의류 쇼핑 지원 및 응대 교육을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보다 원활한 의류 쇼핑을 할 수 있게 함 · 장애인등편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 개정 및 시행령에 따른 구체적 기술 가이드라인 제시 · 진열된 의류 옷걸이에 부착된 NFC 태그, 의무교육을 받은 매장 내 직원의 도움을 바탕으로 시각 장애인의 오프라인 의류 쇼핑 지원 · 의류 구매 시, NFC 스티커를 옷에 부착해줌으로써 일상생활에서도 의류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지원

5. 기대효과

계획	시각 장애인의 의생활에 있어서의 자율성 제고, 시각장애인의 오프라인 소비생활과 일상생활 전반 지원
결과	시각 장애인의 의생활에 있어서의 자율성 제고, 시각장애인의 오프라인 소비생활과 일상생활 전반 지원

발달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인증제도



2022년 장애인분야 정책아이디어 해커톤 대회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AAC 인증제도

반걸음 (김충현, 김채연, 염혜인, 이예진, 한상희)

CONTENTS

01

팀소개

- 팀소개
- 활동 동기
- 활동 사진 및 내용

0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AAC란?
- AAC에 대한 사회적 인식
- 국내외 사례
- AAC ZONE 모니터링

03

정책 제안 내용

- 국가 표준 인증 심볼 개발
- AAC 지원 및 인증
- 심볼 재인증 기간
- 기대효과

04

추진체계

- 관련법령
- 시행 및 협력기관
-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법

05

마무리

- 활동 소감
- 출처

01. 팀소개

팀소개

반걸음[♥]

혼자 걷는 한걸음보다, 함께 걷는 반걸음이 즐거운 세상

'혼자 걷는 한걸음보다, 함께 걷는 반걸음이 즐거운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모여 장애인 관련 공모전, 대외활동, 봉사활동, 서포터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장애인의 인식개선과 권익증진을 위해 적극 앞서는 대학생팀입니다.

01. 팀소개

활동 동기

-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적으로 고민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학문적인 활동
 -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실천적인 장애인 권익증진 활동
 - 전문가들의 만남을 통한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지식의 폭 확장
 - 지원금으로 인해 퀄리티 있는 활동 가능
 - 주최와 후원의 출처가 믿을 수 있고 활발한 사업을 진행중인 공익재단 및 공공기관
 - 좋은 성적을 거둘 시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적인 활동을 진행하여 정책 현실화
-

01. 팀소개

활동 사진 및 내용



활동 내용 및 일정

사업명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해커톤대회 지원 및 결과 발표	대면 만남					
오티 및 활동 시작	비대면 회의 및 대면 회의					
자문위원과의 만남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AAC ZONE 모니터링 사업	마포구, 금천구					
활동보고서 작성 및 PPT 제작	대면 만남 및 비대면 회의					

0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AAC란?

AAC란 보완대체 의사소통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의 약자로 입이나 글로 언어를 구사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말과 글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사용되는 의사소통

주 이용대상은 뇌성마비, 발달장애, 자폐 장애와 같은 선천적 장애를 포함한 루게릭병, 파킨슨 병과 같은 후천적 장애를 포함한 언어장애가 있는 광범위한 사람

그 중 삶의 전반에서 활동과 참여의 제약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보완대체 의사소통 지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

0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AAC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가천대학교>



<중앙대학교>

AAC에 대한 인식조사를
가천대학교, 중앙대학교에서 2차례 진행

참여인원 총 185명 중 AAC를
아는 인원 11명, 모르는 인원 174명으로
AAC를 아는 비율이 약 5.9%
AAC를 모르는 비율이 약 94.1%로 나타남

두 차례 진행한 AAC 인식조사를 통해
AAC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0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국내외 사례 (1)



미국

- 언어치료를 받는 학생 중 약 83%가 AAC 이용
- 미국 인구 중 약 1.4%가 생활하는데 AAC를 사용
- 장애인교육법, 미국장애인법에서 말하는 보조공학도구 및 언어 치료에 AAC가 포함되어 서비스 지원 가능
- 미국 교육부 산하에서 보완대체의사소통 - 재활공학센터를 설립하여 AAC 사업 연구 및 개발 진행



영국

- 약 6,200명의 아동 및 청소년과 약 19,170명의 성인이 사용 (전체 인구의 0.5% 이상 사용)
- 거주하는 지역내에서 개별적으로 AAC 서비스 제공
- 정부 수준, 지방 단위, 지역 수준의 체계적인 3단계로 나눠 서비스 제공
- AAC 훈련 및 서비스 개발팀, 기기관리팀, 코디네이터 등 세분화된 전문가 양성



캐나다

- 연령대에 따른 AAC 서비스 제공
(영유아 : 가정 내 서비스, 학령기 : 학교 현장)
- 정부와 전문가가 협력하여 AAC 서비스 사업 전문화 진행

0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국내외 사례 (2)



대한민국

- 학령기 AAC 잠재적 수요자 약 24,663명
- 장애인복지관 및 특수학교 등 AAC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교육 및 실질적인 사용 진행
- 특수교육법 및 4개 부처의 8개 법률이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하도록 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그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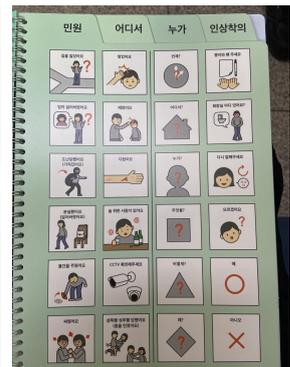
- 장애인의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서 AAC 서비스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미흡함 (AAC 기기만 제공)
- 보건복지부에서 201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보완대체의사소통 활용 중재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지방 자립단체를 모집했지만, 신청한 지역은 성남 한 곳
- AAC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 체계가 미흡

0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AAC ZONE 모니터링

· 금천구, 마포구 AAC ZONE

- '언어치료 AAC센터 사람과 소통'과 각 협력하여 그림, 글자판을 사용하여 각 시설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
- 금천구의 경우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축이 되어 사업 진행
- 장애인종합복지관,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카페, 경찰서, 식당 등 이용 빈도가 높은 이용시설 위주로 AAC 그림판 배치
- 각 이용시설 간 거리 200M 이내 위치
- 카페, 식당은 각 가게의 메뉴와 일치하는 그림판 제공 (공용 X)
- QR 코드를 통한 AAC 이미지 제공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 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음 -> 사후 관리 부족



국가 표준 인증 심볼 개발

문제점

여러 민간기관에서 AAC 심볼을 사용하고 있지만
심볼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지역 이동을 하게 되거나 여러 사회적 기구를 이용할 때
AAC 심볼이 다르다면, 각기 다른 AAC에 적응을 해야함으로 어려움이 있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동일한 AAC를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정해진 심볼이 없어 혼란을 일으킴

국가 표준
인증 심볼

AAC 지원단계

1차 사업



자주 이용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이용시설
경찰서,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등에 먼저 시행,
서울특별시 먼저 시행

2차 사업



1차 사업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및
장점 강화, 다른 지역에
홍보 진행

3차 사업



병원, 도서관, 여행지 등
다양한 이용 시설 및 지역으로
AAC ZONE 확대 시행,
예산 확장

03. 정책 내용

심볼 재인증 기간

기존 AAC ZONE 모니터링 시 QR이 제대로 작동하지않고, 서비스가 종료된
곳이 업로드 되지않는다는 등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었음



"국가표준인증심볼 재인증"

3년마다 국가표준인증심볼을 재인증하여 AAC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개선점과
수정해야할 항목에 대해 사후관리를 진행하여 AAC ZONE이 더욱 활발하고
도움이 되도록 관리 및 협력체계에 추가적인 이점 제공

03. 정책 내용

기대효과

-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지원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접근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사소통지원)에 명시된 접근성과 의사소통지원에 대한 권리 보장
-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당사자들의 사회참여 확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 AAC 인증제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혼합적 참여를 통한 AAC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초기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력이 향상됨

04. 추진체계

관련 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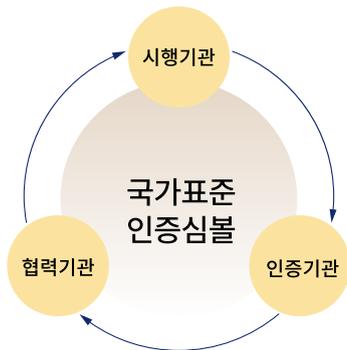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③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안·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04. 추진체계

시행 및 협력 기관



시행기관 : 보건복지부
- 예산 편성

협력기관 : 언어치료 AAC센터
- AAC 국가표준인증심볼 개발

인증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 예산집행,
- AAC 인증제도 담당 및 인증
- AAC 국가표준인증심볼 개발

의사소통권리 증진센터
- AAC 국가표준인증심볼 개발

서울공공기관,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 AAC 인증제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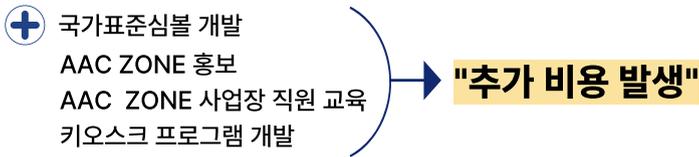
04. 추진체계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법

2020년 독산 1동 AAC ZONE 마을사업 비용 : 1,000만원

1차 사업 진행 : AAC ZONE 최초 실시 지역 마포구

마포구의 16개동 AAC ZONE 사업 진행 + AAC그림판 전자기기 보급비용
= 1억 6,000만원 + 3,000만원 = 1억 9,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지역별 복지 예산
시비 50%



04. 활동 소감

활동 소감

김중현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하며 보완대체 의사소통(AAC)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기존에 부족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체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면서, 자문위원과 팀원들과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인 논의들이 모여 장애인 정책이 진일보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김재연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AAC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서 나중에 학교 수업을 들을 때 더 잘 이해를 하며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염혜인

해커톤 대회를 통해 팀원들과 보완대체 의사소통(aac)뿐 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 분야에 대해 토의하며 장애인 복지에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앞으로도 장애인분들이 차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지역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이 발의 및 보완되면 좋겠다.

이예진

AAC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필수적인 서비스에 관한 정책이 없다는 것에 의아함을 느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정책을 제안해 볼 수 있어서 뜻깊었던 것 같다. 더 많은 당사자분들이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사회 참여 비율이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관련 정책이 꼭 발의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상희

해커톤을 참여하기 전까지는 장애인 복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만 인지를 하고 깊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AAC뿐 아닌 전반적인 장애인 권리 증진의 필요성을 더욱 인지하게 되었다. 더불어 팀원들과 함께 하나의 정책을 제안하기 위하여 논의하고 고민했던 과정들이 너무나 뜻깊었다.

출처

- 남세현, 박은혜, 김경양, 김영태(2015), AAC중재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연구,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 최석범, 장애인 의사소통 서비스사업 지자체 '외면', 에이블뉴스, 2018, 03. 02.
- 한국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 독산1동 자치계획수립을 위한 의제실행계획서, 금천구청
- 서울시재정포털 (<https://openfinance.seoul.go.kr/index>)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걸음 (김충현, 김채연, 염혜인, 이예진, 한상희)

발달 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인증제도

제안 5팀

〈제안 개요〉

본 정책은 민관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 심볼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에 보급함으로써 장애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인증함으로써 AAC 서비스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AAC 국가표준심볼을 개발한다. 여러 민간기관에서 AAC 심볼을 사용하고 있지만, 심볼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다.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동일한 AAC를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개발원, 언어치료 AAC센터,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가 협력하여 AAC 국가표준심볼 제작하도록 한다. 둘째, 서울시 복지시설, 편의점 등 우선 적용 후 확장한다. 발달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이용시설인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치료센터, 편의점에 먼저 시행하도록 한다. 셋째,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 입증 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서울특별시의 풍부한 재정과 AAC 존 사업 기반을 통해 AAC 인증 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본 정책을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혼합적 참여를 통한 AAC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초기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력 향상시키고,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당사자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I.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한국은 AAC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 체계가 미흡하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에서 AAC 서비스 제공 대한 법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위 법률에 의해 AAC 기기는 제공되지만, AAC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남세현, 박은혜, 김경양, 김영태, 2015). 복지부에서 2018년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보완대체 의사소통 활용 중재서비스 사업을 시행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했지만, 신청한 시·군·구는 성남 한 곳 뿐이었을 정도로 미흡한 실정이다.

두 차례 AAC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AAC 대한 인식이 매우 낮았다. 2022년 5월 26일, 가천대학교 AAC 인식개선 캠페인 중 AAC 인식조사 결과, 총 참여인원 88명 중 '알고 있다'가 5명(약 5.68%), '모른다'가 83명(약 94.32%)명으로 AAC 인식조사 참여자 총 88명 중 5명(약 5.68%)이 'AAC를 안다', 83명(약 94.32%)이 'AAC를 모른다'를 선택하였다.

2022년 9월 28일, 중앙대학교 인권문화제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중 AAC 인식조사 결과, 참여인원 총 97명 중 '알고 있다'가 6명(약 6.19%), '모른다'가 91명(약 93.81%)으로 2번째 AAC 인식조사 참여자 총 97명 중 6명(약 6.19%)이 'AAC를 안다', 91명(약 93.81%)이 'AAC를 모른다'를 선택하였다. 두 번의 AAC 인식조사를 통해 AAC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진 1〉 가천대학교 AAC 인식조사 결과



〈사진 2〉 중앙대학교 AAC 인식조사 결과

의사소통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지만 발달장애인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참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삶의 전반에서 활동과 참여의 제약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지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남세현 외 3명, 2015). 하지만 국내의 AAC 서비스 지원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마포구 AAC 존 사업의 경우,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AAC 존 모니터링 결과, QR 코드 인증 시 사이트 오류가 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민관 협력을 통해 국제 표준 심볼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 이용 시설에 보급함으로써 장애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며 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이 지나면 재인증함으로써 AAC 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II. 정책연구 방법

1. 국외 사례 조사 (남세현 외 3명, 2015)

1) 미국

미국에서는 언어치료를 받는 학생 중 약 83%가 AAC 이용하고 있다. 미국 인구 중 약 1.4%가 생활하는데 AAC를 사용하고 있다. 장애인교육법, 미국장애인법에서 말하는 보조공학도구 및 언어 치료에 포함되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다. 미국 교육부 산하에서 여러 대학들에 보완대체의사소통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재활공학센터를 설립하여 AAC 사업 연구 및 개발 진행하며 학생들의 의사소통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2) 영국

약 6,200명의 아동 및 청소년과 19,170명의 성인이 사용하고 있다 (전체 인구의 0.5% 이상이 사용).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AAC 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제공 받고 있으며 정부 수준, 지방 단위, 지역 수준의 체계적인 3단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AAC 훈련 및 서비스 개발팀, 기기 관리팀, 코디네이터 등 세분화 된 전문가 양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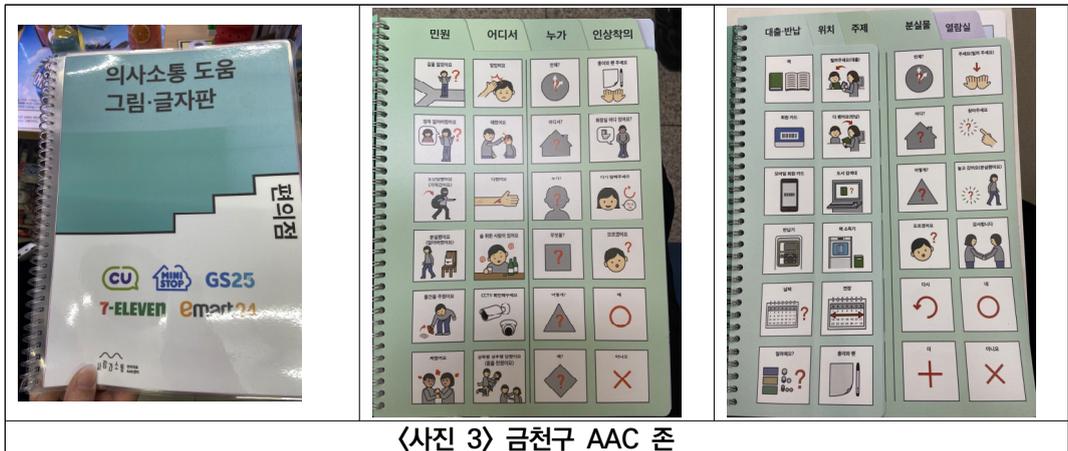
3) 캐나다

영유아는 가정 내 서비스, 학령기의 경우 학교현장에서 연령대에 따른 AAC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와 전문가가 협력하여 AAC 서비스 사업 전문화를 진행하고 있다.

2. 국내 사례 조사 (남세현 외 3명, 2015)

현재 학령기 AAC 잠재적 수요자는 24,663명이며 AAC의 경우 학령기 학생들에게 수요가 높다. 특수교육법, 및 4개 부처의 8개 법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이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관, 특수학교 등 AAC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는 교육 및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전문적인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AAC존 모니터링을 위해 금천구, 마포구를 방문하였다. 금천구 AAC존의 경우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이 주축이 되어 AAC존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중심으로 주변 경찰서, 카페, 행정복지센터, 편의점에서 ‘언어치료 AAC센터 사람과 소통’과 협력하여 AAC 그림판을 각각의 시설에 맞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마포구 AAC존의 경우 처음으로 AAC존 사업을 시행한 곳만큼 운영이 잘 되고 있었으며 금천구와 마찬가지로 카페, 경찰서, 복지관, 편의점에도 AAC그림판이 존재하였다. 특히 카페의 경우 모든 메뉴가 AAC 그림판으로 표현되었고, 도서관의 경우 한 건물 안에 모든 층, 열람실, 식당, 편의점에 모두 배치되어 있어서 발달장애인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다.

Ⅲ. 제안 정책 내용

1. 제안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인증제도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다른 장애의 유형에 비해 비장애인, 장애인과 의사소통이 가장 어려운 유형이 발달장애인임에 따라 그들의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해당 정책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 인증제도의 범위는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AAC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미흡한 상황이므로, AAC 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또한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그 효과성을 파악하고, 보완할 부분을 개선하여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2. 적용방안

AAC존 모니터링을 통해 AAC존 사업의 효과성은 이해할 수 있었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특히 QR 코드를 통한 AAC 이미지 제공 서비스는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었으며 그 이유를 아직 보완대체 의사소통 (AAC) 인증제도를 위한 법안 및 제도가 있지 않기 때문으로 보았다. 해당 내용에 대한 개선 및 보완에 대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AAC 국가표준심볼을 개발한다. 여러 민간기관에서 AAC 심볼을 사용하고 있지만, 심볼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지역 이동을 하게 되거나 여러 사회적 기구를 이용할 때 AAC 심볼이 다르다면, 각기 다른 AAC에 적응을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동일한 AAC를 편리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장애인개발원, 언어치료 AAC센터, 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가 협력하여 AAC 국가표준심볼 제작하도록 한다.

둘째, 서울시 복지시설, 편의점 등 우선 적용 후 확장한다. 발달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접근성이 좋은 지역사회 이용시설인 복지관, 행정복지센터, 치료센터, 편의점에 먼저 시행하도록 한다. 접근성이 좋은 이용시설에 우선 적용하고,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면

서 그 범위를 확장하도록 한다.

셋째, 서울특별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 입증 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가도록 한다. 서울특별시의 풍부한 재정과 AAC 존 사업 기반을 통해 AAC 인증 제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는 AAC 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더 큰 관심을 보일 수 있다.

3. 고려해야 할 사항

기존 제도와의 충돌 발생 가능성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마포구 AAC 존 사업의 경우, 언어치료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간 협력을 통해 AAC를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다. 위 사업의 경우, 전국 최초로 AAC 존을 운영했다는데 의의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이 AAC 지원이 가능한 시설을 알기 어려워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AAC) 기기활용중재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 의사소통 문제 조기 발견하여 AAC를 활용하여 의사소통 능력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이 또한 기준 중위소득 170%이하와 만 23세 이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용 가능하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 많아짐에 따라 비전자식뿐만 아니라 키오스크, 태블릿 PC 등 전자식 AAC 지원과 추가적으로 음성인식 시스템 도입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따라서 AAC 인증기관 어플을 개발하여 AAC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키오스크에도 AAC 지원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참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4.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법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총 지출액은 약 108조 9918억 원으로 장애인 분야는 연금 및 장애수당 인상, 일자리 확대는 소득보장 강화 형태와 활동지원, 긴급돌봄 등 돌봄 확대 형태가 있다. 2023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약 47조 원, 그중 사회복지 예산은 약 16조 원이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형태로 국비와 시비 5:5 로 예산 편성하도록 한다.

5. 관련 법령

관련법	관련법령	법령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사소통지원)	② 교육부장관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의사를 원활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도구를 개발하고 의사소통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발달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등을 통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③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높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표-1〉 한국법령정보센터 참조

6.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에 따르면 뇌병변, 지적장애인 등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활용 증대 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AAC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AAC 서비스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AAC 인증제도를 통해 지자체에 AAC의 필요성을 알리고,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원활하게 지역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의사소통 지원을 하고자 한다.

7. 시행 및 협력기관

본 정책은 보건복지부의 예산편성 후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예산집행, AAC 인증제도 담당 및 인증 진행, AAC 국가표준심볼 개발 등을 진행한다. 이에 서울시가 협력기관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언어치료 AAC 센터, 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에서 AAC 국가표준심볼 개발하고 서울시 공공기관, 복지시설, 다중 이용 시설 등에서 AAC 인증제도에 참여하도록 한다.

V. 기대효과

본 AAC 인증제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혼합적 참여를 통한 AAC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초기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력 향상시키고,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당사자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남세현, 박은혜, 김경양, 김영태(2015), AAC중재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을 위한 델파이 조사연구, 한국지체.중복.건강장애교육학회.

최석범, 장애인 의사소통 서비스사업 지자체 '외면', 에이블뉴스, 2018, 03. 02.

한국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LSW//main.html>)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계획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인증제도
결과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 증진을 위한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인증제도

2. 연구방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C 관련 문헌(보고서, 논문, 기사 등) 수집 및 고찰 - 마포구 AAC존 사업, 성남시 AAC 기기활용 중재서비스 등 기존 AAC 관련 사업의 효과성 분석 - 마포구 AAC존 사업 모니터링 및 벤치마킹 - 언어치료센터, 장애인복지시설,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하여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할 AAC 기기 및 도구 설계(안내판, 메뉴판, 키오스크 등) - AAC 인증시설 평가기준 마련 - AAC 인증기관 앱 개발 방향성 설계 - AAC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C 관련 문헌(보고서, 논문, 기사 등) 수집 및 고찰 - 마포구 AAC존 사업, 성남시 AAC 기기활용 중재서비스 등 기존 AAC 관련 사업의 효과성 분석

3. 정책내용

계획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완대체 의사소통(AAC)을 보급하고 인증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결과	민관 협력을 통해 AAC 국가표준심볼을 개발하여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보완대체 의사소통(AAC)을 보급하고 인증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고자 함

4. 적용방안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력을 통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적합한 AAC 기기 및 도구(안내판, 메뉴판, 키오스크 등) 개발 - 시범사업을 진행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하여 AAC 기기 및 도구 보급 - AAC 지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AAC 마크 인증 - AAC 지원이 가능한 시설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앱 개발 - 1년마다 평가를 통해 AAC 마크 유효성 검토 및 신규 AAC 인증시설 선정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 협력을 통해 AAC 국가 표준 심볼 개발 -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앱 개발 - 시범사업을 진행할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선정하여 AAC 기기 및 도구, 프로그램 보급 - 의사소통 지원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AAC 마크 인증 - 3년마다 평가를 통해 AAC 마크 유효성 검토 및 신규 AAC 인증시설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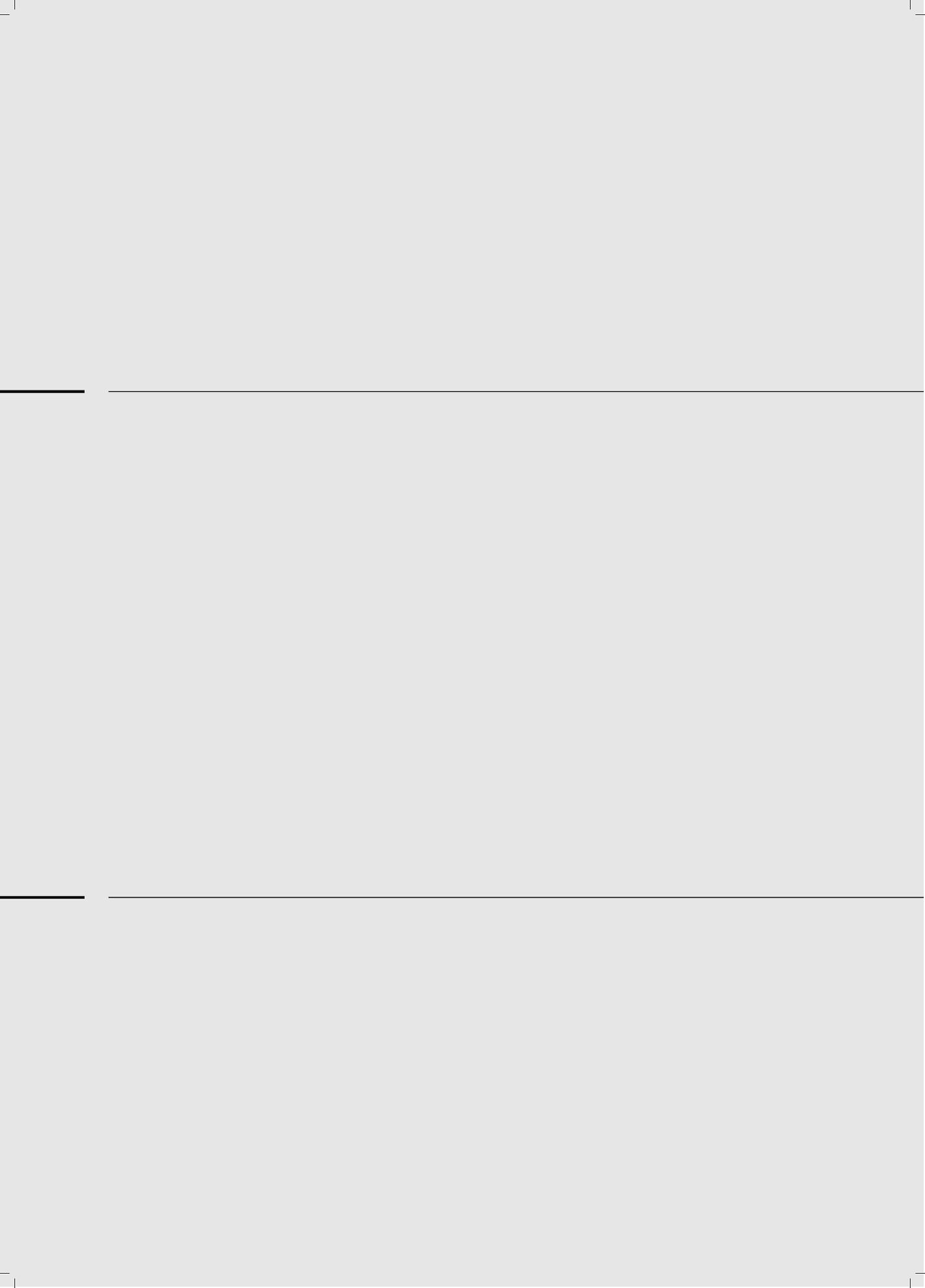
5. 기대효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완대체 의사소통(AAC) 지원을 통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접근성),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사소통지원)에 명시된 접근성과 의사소통지원에 대한 권리 보장 -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AC 인증제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의 혼합적 참여를 통한 AAC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초기 비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력 향상 -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어려운 당사자들의 사회참여 확대에 의한 지역경제 활성화

장애인 콜택시 통합 어플 개발

- Enable

제안 6팀



인에이블(Enable)

송명선, 류연재

2022년 장애인 분야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장애인 콜택시 정보 교류 통합 어플 개발 정책 제안 _ 인에이블팀

목차

01 ————— 팀소개

02 ————— 정책내용

03 ————— 소감

01. 팀소개

01. 팀소개

인에이블(Enable)

disable -> en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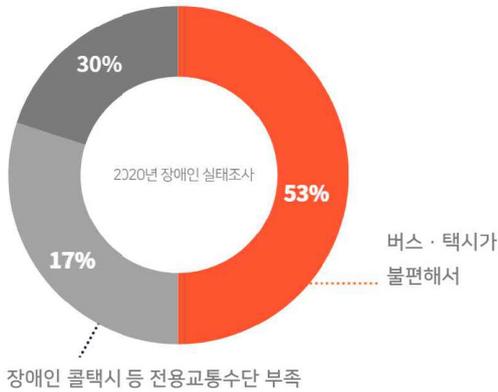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이동권 문제를 disable에서 enable의 영역으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콜택시 통합 어플: Enable

02. 정책 소개

1. 제안 배경



버스·택시가 불편해서 : 53.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 17.4%

등록절차, 공급량 부족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불만 ↑

등록절차 및 근본적인 문제 해결 필요한 상황

2. 제안 정책

1. 바우처 택시와의 통합 체계 구축
2. 필수 서류 목록 제공 및 어플 내 정보저장을 통한 비대면 서류 제출 서비스
3. 실시간 위치 제공 서비스
4. 챗봇 서비스를 통한 24시간 상담과 음성을 통한 예약 시스템
5. 기사 별점 제도 및 기준 미달 시 장애인 인식 교육 필수 이수

1. 바우처 택시와의 통합 체계 구축

○ 바우처 택시의 실효성 문제

바우처택시와 장애인콜택시의 가격 차이로 인한 장애인 콜택시 공급 문제
바우처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 ↑



- 한 어플 내에서 장애인 콜택시 및 바우처 택시 예약 가능
- >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던 비 휠체어 장애인의 바우처 택시 이용 유도
: 장애인 콜택시 공급 문제 해결 (가격통일 필요)
- 운영 및 인사관리 측면에서 유사한 기준 도입 -> 이용 편리성 ↑

2. 필수 서류 목록 제공 및 어플 내 정보 저장을 통한 비대면 서류 제출 서비스

제출서류 목록을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지역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사이트를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



- 제출서류 요건 제공
 - 통합 어플 내 정보 저장 기능 도입
- > 불필요한 문서 주의 철폐 + 복잡한 행정절차 제거 + 이용자 정보 접근성 ↑

3. 실시간 위치확인 서비스

- 차량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함 ↑
- 운전자가 이용자에게 미리 전화를 주지 않아 규정된 탑승 준비 시간을 놓치는 문제 발생



어플 내 실시간 위치확인 서비스 기능 도입으로
모든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보다 정확한 차량 도착 시간 예측 가능)

- 기다림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 X, 이용자의 편리함 ↑
- 준비시간 및 이용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 보장 (장애인 콜택시 놓치는 일 방지)

4. 챗봇 서비스

- 장애인 콜택시에 관한 문의 혹은 등록:
상담원과의 전화연결 또는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능 (지역마다 상이함)
-> 상담 시간 외에는 문의 및 등록 불가



- 24시간 무인 상담 센터 -> 자주 문의하던 내용에 대한 정보 제공
- 음성지원 서비스(ai tts) -> 시각장애인: 서비스 이용 편리함 ↑
- 인건비 절감

5. 기사 별점 제도 및 기준 미달 시 장애인 인식 교육 필수이수

< '인력서비스' 부분에서의 장애인 콜택시 불편 사항 :
50%가 운전자의 장애 인식 부족 >

- 민간 택시 어플에서 사용되고 있는 별점 제도 활용 -> 운전자에 대한 피드백 가능
- 최소 교육 지침 -> 모니터링, 다른 교육 기준으로 생기는 문제 ↓
- 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 기준보다 점수가 낮은 경우: 의무 장애 인식 교육 이수

3. 기대효과

1. 정보 접근성 증대

- 복잡하고 찾기 어려운 정보 제공 -> 이용의 정보 접근성 증대
- 챗봇 서비스 기능 -> 시각장애인에게 이용상 편리함 제공
-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음

2. 불필요한 문서주의 철폐

- 행정의 효율성 증대
- 불필요한 서류 제출로 인한 이용자의 부정적 감정 해소

3. 휠체어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용이성 증대

- 동일한 어플 내에서 이용 + 가격 통일 -> 비 휠체어 장애인의 바우처 택시 이용률 ↑

3. 기대효과

4. 한정된 예산에서 효과성 극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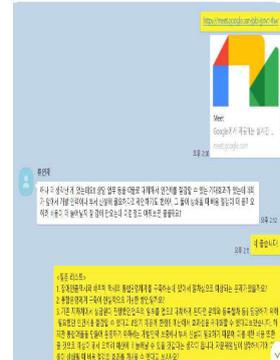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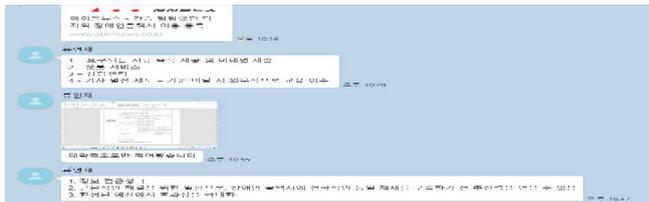
- 통합 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만으로 장애인 택시에 관한 정보 접근성 강화, 예약 절차 간소화 등의 효과 발생
- 기존 업무 일부가 어플로 대체되면서 문의와 등록 절차에 대한 인건비 감소

5.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발판

- 분산된 정보들을 모아주는 시스템 마련
- > 이 시스템이 분산된 기준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주는 시발점이 되어줄 수 있음
(환승 문제 등 장애인 콜택시 이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의 발판)

03. 소감

< 활동사진 >



< 참여소감 >

류연제

7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6개월의 시간 동안, 뜻을 함께하는 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더 넓은 식견을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활동을 통해 제계 정책과정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장애인 분야에 대한 지식도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학생의 입장에서 본 대회에서의 경험이 앞으로도 장애인 정책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배워나가는 계기이자 잊지 못할 경험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명선

장애인 콜택시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대회를 계기로 이동권에 관한 문제들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찾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동권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당연한 권리인 만큼 해커톤 대회처럼 많은 분들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이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장애인 분야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인에이블(Enable)팀

감사합니다.

장애인 콜택시 통합 어플 개발 - Enable

제안 6팀

〈제안 개요〉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절차 개선을 위해 전국 교통약자지원센터의 연락처, 필요 서류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어플을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어플은 'Enable', 즉 '할 수 있게 하다'라는 의미의 제목을 갖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이 일상생활의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를 극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철폐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제안자 일등은 해당 어플을 통해 장애인 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과 이동권 문제를 disable의 영역이 아닌 enable의 영역으로 탈바꿈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우처 택시와의 통합 체계 구축을 통한 장애인 콜택시 부족 문제 해결, 바우처 택시 서비스 개선 둘째, 필수 서류 목록 제공 및 어플 내 정보 저장을 통한 비대면 서류 제출 서비스를 통한 정보 접근성, 이용의 편의성 증대 셋째, 실시간 위치 제공 서비스를 통한 차량도착시간을 예측하여 이용상의 불편 해소 넷째, 챗봇 서비스를 통한 24시간 상담과 음성을 통한 예약 시스템을 통한 인건비 절감, 시각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용이 다섯째, 기사 별점 제도 및 기준 미달 시 장애인 인식 교육 필수 이수 제도를 통한 쌍방향 소통, 인권 침해 요소 완화라는 추진 전략을 세우도록 한다.

본 정책제안을 통해 정보접근성 증대, 불필요한 문서주의 철폐, 휠체어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용이성 증대, 예산 효과성 극대화라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I.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 빈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도 ‘외출’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등으로 나타났다.¹⁾

현재 장애인콜택시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지자체별로 등록 절차나 등록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거주형태, 국민기초생활 유무 등 장애가 있는 승객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본요금, 밤 미운행 시간대, 관외·광역까지 운행하는지 여부 등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다. 관외·광역 이동은 교통약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행정구역 내 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까지로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 사업은 휠체어 장애인까지 탑승 대상으로 포함하는 장애인 복지콜과 장애인 콜택시, 그리고 바우처 택시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택시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각 혹은 청각 장애인과 발달 장애인에 비해 한정되어 있다. 물론 비단 이런 문제가 휠체어 장애인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인 콜택시 차량의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더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 이렇듯 장애인 콜택시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기도 했지만, 장애인만을 위한 서비스에 비해 장애인 이해도가 높지 않다는 점, 장애인 콜택시에 비해 이용이 불편하고 비용이 비싸다는 점 때문에 불만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바우처 택시의 도입 시도 자체는 의미 있지만 운영 상의 문제로 정책목표를 이루기 힘든 상황이다.

2019년 국토교통부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여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기시간 증가 문제를 해소하고자 교통약자법을 개정하였다. 법정 운행대수 기준을 ‘1급 또는 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보행이 불편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인당 1대’로 변경했지만, 법정기준대수를 충족한 지역은 경기, 경남 단 두 곳뿐이다.²⁾

사단법인 해냄복지회, 굿잡자립생활센터의 김재익 소장은 현 문제 상황에 대해 ‘바우처

1)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2.

2) 박승원, “장콜 법정대수 ‘200명→150명당 1대’로 개정안 입법예고”, 비마이너, 2019.05.08.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비 휠체어 장애인이 그 중 가격이 더 저렴한 장애인 콜택시를 주로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장애인 콜택시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가격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장애인 택시 이용에서 가장 문제인 사항은 수요와 공급의 차이지만 막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며 비 휠체어 장애인이 민간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의 정책 제안이 기존에 존재하므로 차순위 문제인 등록 및 예약 절차에 집중하여 현 문제에 접근해보았다. 기존 장애인 콜택시 제도는 지자체 간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 간 이동이 대체로 불가능하다는 문제, 지역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지역마다 서류 제출을 하기 위해 긴 시간 이동을 하여 대면 제출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예약 번호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사이트도 지역마다 따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정보를 찾기 위한 탐색 시간이 길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겪는 불편사항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등록 절차'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으며 이와 더불어 장애인 콜택시 공급량 부족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함께 제시하는 것을 제2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Enable팀은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전국적인 시스템 통합을 대신하여 통합 정보 제공 및 예약 어플을 구축하여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II. 제안 정책 내용

1. 해결방법 및 개선방안

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애인 콜택시 제도가 전국적으로 통합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역 간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오랜 시간 동안 현 체제로 운영이 되어 온 만큼 예산 문제와 더불어 차량의 소유권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마찰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도시 광역이동센터 설치 의무화 등의 방안도 고려할 수 있지만 모두 예산상의 문제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현재 절차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장애인 콜택시 정보 교류 통합 어플 - Enable'을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어플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위한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수 서류 목록 제공하고 통합 비대면 제출을 가능케 한다. 'enable'은 지역마다 다른 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는 서류의 목록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제공한다. 현재, 제출 서류 목록은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인 정보임에도 이용자가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역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이트를 통해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실정이다. 심지어 사이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혹은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라는 모호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도 존재하였다(파주시). 제출 서류에 관한 기준이 법적으로 확립되고 이를 통합 어플에 반영한다면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제거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어플 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을 도입하여 최초 가입, 정보 변경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서류를 제출하게끔 하고, 일반적인 때에는 저장된 정보를 이용하게 하여 예약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출발 지역과 도착 지역이 다른 경우에 여러 번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실시간 위치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콜택시의 문제 중 하나는 긴 대기시간이다. 현재 대기자 수와 도착 예정시간을 제공하는 지자체가 많지만, 여전히 차량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한다. 또한, 운전기사가 이용자에게 미리 전화를 주지 않아 규정된 탑승준비시간을 놓쳐 오래 기다린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를 어플 내에 만들게 된다면, 실시간으로 차량도착시간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겪는 기다림으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덜어줄 수 있고 준비시간 및 이용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을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장애인 콜택시를 놓치는 일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실시간 위치확인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불편함을 없애주고 동시에 시간 예측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상사를 막고자 한다.

셋째, 챗봇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문의를 하거나 등록을 할 때 상담원과 전화 연결하거나, 지자체 별로 제공되는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 통해 해야 했다. 이는 상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는 문의 및 등록을 하지 못한다는 불편함을 일으키며, 정보가 지자체별로 통합되어 있지 않아 방문할 다른 지역에 등록을 할 때 불편함이 존재했다. 따라서 어플 기능에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에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이 자주 문의하던 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한다. 또한 음성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들도 어플 사용을 용이하게 한다.

이처럼 절차적인 개선방안 외에도 더 근본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장애인 콜택시의 차량 대수 부족 문제, 운전기사의 이용자 인권침해 등 여러 문제가 남아 있다. 본 팀은 전자의 해결 방안으로 바우처 택시와의 운영 체계 통합 및 가격 통일을 제시하고, 후자의 해결 방안으로 운전자의 장애 인식 교육 이수를 제시한다.

추가적으로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우처 택시와 통합을 도모한다. 본 팀은 단순히 장애인 콜택시 체계에 바우처 택시를 도입하는 것을 넘어 서서 'enable' 어플을 기반으로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통합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첫 번째로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예약을 한 어플에서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던 비 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 번째로는 운영 및 인사관리 측면에서도 최대한 유사한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장애인 콜택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의 장애인식 문제는 바우처 택시에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의 소관 부서를 택시정책과로 일치시켜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다.

본 팀은 이를 모티브로 삼아 한 발짝 더 나아가 두 체계를 통합시켜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새로운 체계와 어플을 구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바우처 택시와 장애인 콜택시의 가격을 통일하는 것을 추가적인 과제로 삼는다. 앞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와 같이 비 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대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휠체어 장애인의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가로막는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는 장애인 콜택시보다 바우처 택시의 가격이 비싸 두 선택지 중 장애인 콜택시의 선호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휠체어 장애인을

바우처 택시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두 교통수단의 가격을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

둘째, 기사 별점 제도를 만들어 기준 미달 시 의무적으로 장애 인식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한다. 장애인 콜택시 불편 사항 중 '인력서비스'부분에서 50%의 비율을 차지하는 항목이 바로 운전자의 장애인식 부족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3조 2항에'특별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방법과 내용은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교육 수준이 다른 상황이며 교육 시간과 내용도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연 4시간만을 필수 교육 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여전히 운전자로 인한 인권침해 민원이 속출하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교육에 대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 상황처럼 운전자 교육이 미비할 경우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이용자가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운전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운전자로 인해 불편함을 겪었을 경우, 민간 택시 어플에서 사용되고 있는 별점 제도를 활용하여 운전자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한다. 점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기준보다 점수가 낮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식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인식 교육뿐만 아니라 성범죄 예방 교육, 휠체어 체결 방법 교육 등 추가적인 교육도 이에 포함해 장애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운전기사 자격 요건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 표 1 〉 기존 정책과의 차별성

	기존 정책	제안 정책
바우처택시와의 통합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를 이용하려면 각각의 사이트 혹은 어플에 접속하여 서비스이용을 위한 신청을 해야 됨. 또한, 운영 및 인사관리 기준이 다르다는 문제 있음.	통합운영체제를 구축하여 한 어플 내에서 예약이 가능하도록 함. 또한 운영 및 인사관리 기준을 유사하게 만들어 이용자의 택시이용을 용이하게 만들고자 함.
요구되는 서류 목록 제공 및 비대면 제출	지자체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고 대면/비대면 제출 여부도 상이하며, 이용 지역이 다를 경우 각 지역에 여러번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지역별 서류 제출 요건을 여러 사이트가 아닌 하나의 어플에서 살펴볼 수 있게 함. 또한 통합 어플 내 정보를 저장하여 이용자 기본 정보와 서류를 손쉽게 제출할 수 있음.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	서울시만 실시간위치확인서비스를 제공	모든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정확하게 차량도착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함.
챗봇 서비스	현 정책 상으로는 상담원과 전화연결, 지역별 어플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 지역마다 다른 방식으로 예약 가능	자주 하는 질문을 챗봇이 제공하여 24시간 무인 상담 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통해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ai tts(text to speech)를 이용해 음성으로도 정보 입력할 수 있게 하여 시각 장애인도 용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기사 별점 제도	기존 지원자격에는 장애 인식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택시 운전기사에 의한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가 논란이 됨. 1. 1종보통 이상의 운전면허 2. 서울시 택시운전 자격증 3.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운전적성정밀검사 '적합' 판정 4.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무사고 경력 (출처: 서울시설공단)	서비스 이용 후 별점을 매길 수 있도록 하여 운영기관 측에서 이용객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취합할 수 있게 되어 쌍방향 소통을 가능케 함. 또한 기사의 별점이 기준 미달인 경우 의무적으로 장애 관련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3. 추진 전략 및 방법

본 정책 추진을 위한 전략은 첫째, 어플 개발 및 유지를 위한 부서를 신설한다. 각 지역별로 제공되는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어플로 통합하는 것은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어플을 개발하고 적절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 또한, 정보가 방대한 만큼 어플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을 담당하는 개발자 및 상담원 등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 체계적으로 어플을 관리하여 이용자들이 어플을 사용할 때 혼란을 겪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

둘째, 서류 제출에 관한 법적 제도를 개선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3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 제5호에 따라 장애인 콜택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류 제출 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법규인 조례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이동권 증진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로서 장애인 콜택시 통합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상위법규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복지법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³⁾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경우(제4호 및 제4호의2의 경우에는 유상운송으로 한정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⁴⁾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로서 장애인 등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셋째, 챗봇 서비스와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보완을 이룬다. 부서를 신설하지 않더라도 챗봇 서비스,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 등을 위한 개발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을 원활하게 하는 핵심적인 정책내용인 만큼 지속적인 유지 및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넷째, 현 운전기사 교육 제도를 보충한다. 현재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를 시행하고 있어 운전기사 교육의 기준이 모호하다. 따라서 최소교육지침을 만들어 운전기사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모니터링을 하고 지자체마다 교육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점을 없애야 한다. 최소한의 기준이 확보된 교육 매뉴얼은 운전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장 제23조(편의시설).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키는 동시에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초 교육을 한 후 이용자가 매긴 별점 기준에 미치지 못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추가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V. 기대효과

본 정책을 통한 기대효과로 첫째, 정보 접근성이 증대된다.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두리발, 나드리콜 등 지역별 고유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심화시킨다. 실제로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들은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하는 방식 때문에 곤란함을 겪고 있다. 따라서 'enable'라는 통합 어플을 만들어 복잡하고 찾기 어려운 정보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해준다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챗봇 서비스의 음성지원 기능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가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느낀 점 혹은 개선방향 등 건의하고자 하는 부분을 운영기관에 전달해준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다.

둘째, 불필요한 문서주의(red tape) 철폐하여 불필요한 문서를 검토하여 심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장애인 콜택시에서 요구하는 서류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택시 이용과 무관한 것들이 있다. 이는 이용자에게 수치심과 굴욕감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만들며 가난을 입증해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나아갈 수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문서주의를 철폐해 이용자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소시키고 이용자가 '혜택'이 아닌 '권리'로서 이용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휠체어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용이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정보 이용과 관련된 절차상 문제점 외에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시되었던 장애인 콜택시 공급량 부족 문제는 정작 휠체어 장애인이 그들을 위한 제도로 고안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은 장애인 콜택시만이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이용을 동일한 어플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 두 방안의 가격까지 통일시킨다면 비 휠체어 장애인이 바우처 택시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되어 확보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어 갈등 없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정된 예산에서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통합 정보 제공 사이트 구축만으로도 장애인 택시에 관한 정보 접근성 강화, 예약 절차의 간소화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기존 지자체에서 상담원이 진행했던 업무 일부를 어플로 대체하여 문의와 등록절차를 담당하는데 필요했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다섯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발판으로, 장애인 콜택시에 전국적인 통일 체제를 구축하기 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등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를 마련했지만, 여전히 이용 시간과 신청 방법 등은 여전히 각 지자체에 맡겨 놓아 이용자들이 곳곳에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위의 각기 다른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주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추후 분산된 기준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환승 문제 등 장애인 콜택시 이용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발판이 되어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2.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357&page=1

박승원, “장콜 법정대수 ‘200명→150명당 1대’로 개정안 입법예고”, 비마이너, 2019.05.08.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9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장 제23조(편의시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장 제103조(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등의 허가요건).

서원선, 장애인콜택시 전국 통합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20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계획	장애인 콜택시 통합 어플 개발 - Enable
결과	장애인 콜택시 통합 어플 개발 - Enable

2. 연구방법

계획	자문 모임,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장애인콜택시 사업과 관련된 이용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을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 검토
결과	장애인 콜택시 사업과 관련된 이용자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수집 및 자문 모임이라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함. 또한, 장애인단체에 연락하여 장애인 이동권 관련 논문을 받아 정책연구를 진행

3. 정책내용

계획	정보 접근성 증진과 이동권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바우처 택시와의 통합 체계 구축 등을 통한 장애인 콜택시 부족 문제 해결 등)
결과	절차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시

4. 적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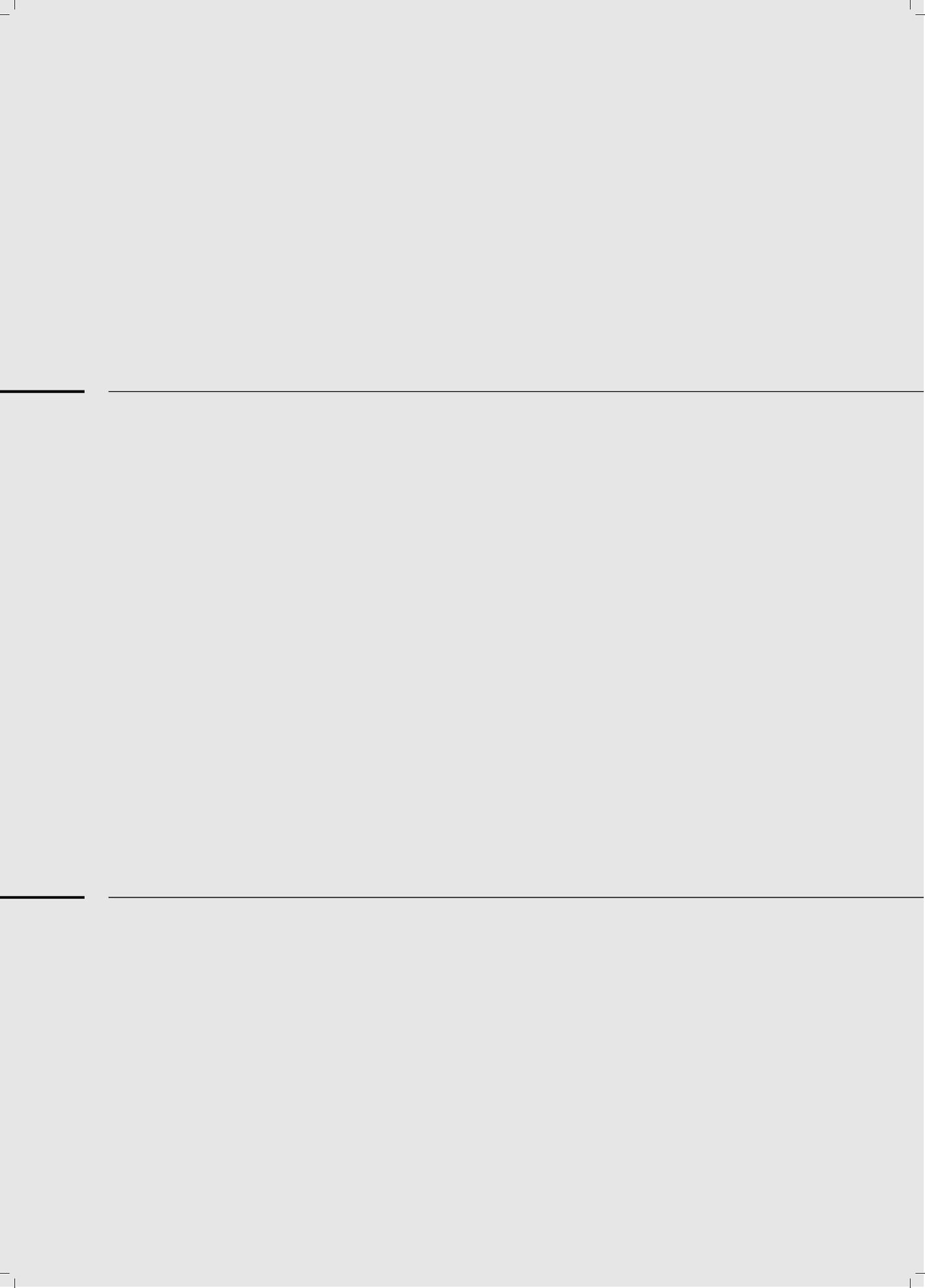
계획	현실성 있는 적용방안 아이디어 도출
결과	어플 개발 및 유지를 위한 부서 신설 등

5. 기대효과

계획	정보 접근성 증대, 불필요한 문서주의 철폐, 한정된 예산에서 효과성 극대화, 장애인콜택시에 전국적인 통일 체제를 구축하기 전 추진력 획득에 관한 기대효과
결과	정보 접근성 증대, 불필요한 문서주의 철폐, 한정된 예산에서 효과성 극대화. 휠체어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용이성 증대, 장애인콜택시에 전국적인 통일 체제를 구축하기 전 추진력 획득에 관한 기대효과

시각/청각 장애인 통신장비 이용 보조기기 지원사업

제안 7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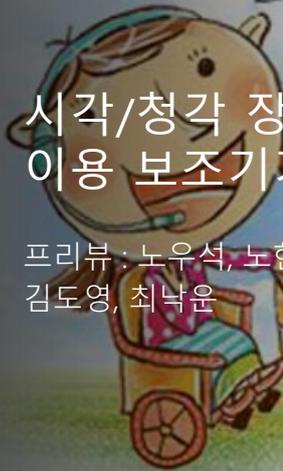


정보통신 보조기기로

디지털세상을 즐기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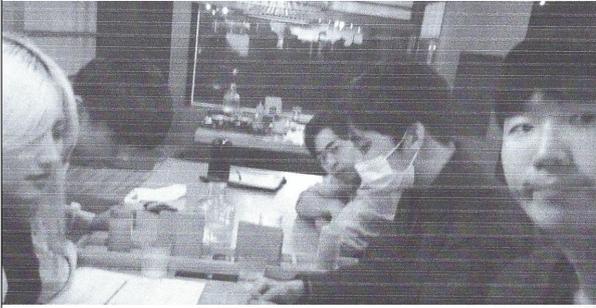
시각/청각 장애인 통신장비 이용 보조기기 지원사업

프리뷰 : 노우석, 노현화, 강하은,
김도영, 최낙윤



목차

1. 팀소개
2. 활동 내용
3. 참여소감



- 미래의 기술을 미래를 리드하는 미래 미리보기
- 사회복무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느낀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함
- 미래의 기술발전과 더불어 사회적 격차 해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free_view

팀소개

팀소개 - 문제점

진정한 배리어 프리가 가능해질까?... 디지털 취약자 소외 없는 키오스크

📍 대학가거리 | 🕒 2022.09.10 | 📷 5명



[대학자널 김하늘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여러 불편 점차 커지고 있다.

극초기스타트업과 선배 창업자이해 관계자 한자리에... '인적 자원 연결로 고민 해결

📍 대학가거리 | 🕒 2022.10.28 10:45 | 📷 7명



서울 신당구 대림동스타트업이전했다가 있는 행복 뉴타운의 'Work to the next growth' 인

최신뉴스

- 포퓰리즘이 아닌 혁신, 500억의 후원 금액은 어떤 의미가...
- 스타트업의 성공, 창업자만이 아닌 사회적 책임이 중요하다
- 스타트업의 성공은 창업자의 역량과 팀의 역량에 달려 있다
- 새로운 시작을 위한 스타트업 창업자의 주의 사항
- 창업자로서의 성공을 위한, 이사회와 협력하는 '크로스...

포토뉴스





활동내용

1차 자문회의 : 해당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정책제안에 대한 측면에서 정책 조사와 함께 접근을 해야한다는 의견
-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게 된다면 여러 우려사항이 있어 여러 측면에서 접해야 함



활동내용

3D 프린팅 메이커 양성교육

- 실제 베리어프리 IoT 장치 디자인 및 3D 프린팅 설계
- 기존 타 제품과의 차별성 파악과 더불어 당 아이টেম에 대한 멘토링



활동내용 - 기존 제품들



• dot :: |



활동내용 - 네트워크



행정안전부



광주광역시시각장애인연합회



광주광역시
청년위원회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행정개혁시민연합
Citizens' Coalition for Better Government

참여소감

01

팀장과 팀원이 공익근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직접보고 느낀 상황에 대해 이를 정책화를 위해 다양한 법률을 검토해볼 수 있던 것이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02

현존하는 다양한 제품들과 제조사를 알 수가 있었으나 다만, 장애보조기기를 더욱 활발히 개발할 수 있는 환경 (ex : 기술 오픈 및 기술공유 방안)이 좀 더 확장되었으면 한다.

03

지원사업들과 나라장터 등 수주사업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좀 더 강화되어 감사가 되었으면 한다.

시각/청각 장애인 통신장비 이용 보조기기 지원사업

제안 7팀

〈제안 개요〉

아직 우리나라의 보조기기 지원사업 정책은 기기를 공급하는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음이라고 비춰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장애부분에 한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을 공공화하여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많은 개선되고 고품질의 저비용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가 지속해서 개발이 되어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 높은 접근성이 제공하고자 한다.

본 정책의 대상은 시각, 청각 장애인이며 다양한 장애인 단체와 협력을 맺어 사회복지 분야에 한해 제품 개발 및 관련 코드들에 대한 OSS화 정책을 마련하고 산학 연계 R&D 및 개발과제 운영, 관련단체 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 공모전 및 지원사업 진행 등을 본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제시한다.

본 정책을 통해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보조기기 개발 지원사업 및 OSS화 정책화를 통한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문제 해소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OSS와 아두이노 및 IoT 프로젝트의 공개를 통해 여러 개발도상국들 및 ODA로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보조기기 및 사회복지분야 IT 인재 양성 및 육성, 장애보조기기 관련 교육분야 및 활용 관련 콘텐츠 제작 및 교육서비스화를 통한 사회복지사의 과대한 공급량에 대한 수요량 제공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I.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라는 용어는 그동안 사람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행위인 ‘보고,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문제를 오늘날에는 컴퓨터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용어가 되었다. 이 세상에 AI가 등장한 현재 초기 개념 증명단계를 지나 이제는 누가 더 성숙한 AI를 만드는지를 두고 전세계 학자들이 경쟁하고 있지만, 시각이나 청각 등 신체 기관 일부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직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 AI는 아쉽게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컴퓨터가 ‘보고, 듣는’ 문제를 정말로 해결했다면 왜 시각이나 청각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아직도 더 넓은 직업 선택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

제도적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사람만을 지원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취해있음에도 장애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지원제도의 존재유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또한 보조기기 지원사업 대상의 종류와 2차 판매처 간의 연계의 불확실성의 문제도 존재한다 (ex 실제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금액을 받으면 2차 유통업체의 마진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보조공학기기의 보조금을 다중수령하거나 이용인과 암묵적으로 현금을 주고 받기도 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며 정보에 밝지 못한 시각장애인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보조금의 비율을 비이상적으로 수정하는 예시도 나타남).

보조기기 구입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취지는 좋으나 금액적 지원 이외에도 구입 후 사후 관리의 중요성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을 통해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했으나 시각적으로 사용의 어려움을 느껴 금세 사용을 포기하거나 사용법을 익히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많으며 고장 시에도 수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현재 장애보조기기 지원사업은 12년간 대상자 2%만 지급되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사업 수혜를 받은 장애인이 0.1%에 불과하며 지난 12년간 누적 수혜자도 전체 대상자의 2%로 사실상 수혜대상자들이 거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과기부에서 받은 ‘연도별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급 사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신청대상자인 238만2410명의 장애인 중 3369

명(0.1%)만이 해당 사업을 통해 보조기기를 보급 받았으며 2010년부터 누적된 수혜자는 총 5만1703명(2.1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했으며 한해 예산액 15억7000만 원으로 17개 광역 지자체와 협력해 시각·지체·뇌병변·청각·언어 등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80%를 지원하고 있다.

< 최근 ('10~'22)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지원현황('22년 9월 현재) >

구분	연도별 지원현황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예산 (백만원)						1,970	1,970	1,576	1,576	1,576	1,576	1,576	3,000*
신청수 (건수)	8,277	7,849	8,155	9,808	9,742	9,830	9,924	9,980	8,400	10,116	11,555	13,027	14,010
신청인원 (명)	4,421	4,236	4,148	4,472	4,214	4,269	4,256	3,483	3,295	3,351	3,450	3,369	4,739

관련 제품을 실제로 개발을 하려고 하였으나 아래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뉴얼 및 정책에 대한 내용만 있고, 활용을 할 수 있는 코드들이 OSS화(Open Source Software : 소스 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가 되어있지 않아 개발 및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코드 적용방법

문법	설명
import android.view.accessibility.AccessibilityManager;	AccessibilityManager 클래스를 가져옵니다.
AccessibilityManager am = (AccessibilityManager) getSystemService(ACCESSIBILITY_SERVICE);	가져온 AccessibilityManager class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접근성 서비스 리스트를 대상으로 객체를 만듭니다. 여기서 am은 임의로 설정한 객체 이름이며 am은 이제 접근성 서비스 리스트를 가지게 됩니다.
boolean isAccessibilityEnabled = am.isEnabled(); boolean isExploreByTouchEnabled = am.isTouchExplorationEnabled();	AccessibilityManager class의 메소드 중에서 접근성 서비스 혹은 TalkBack이 실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므로 조금 전 am이라는 임의의 이름으로 만든 객체에 조건문으로 사용할 메소드를 가지고 옵니다. 코드의 네이밍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앞의 TouchExplorationEnabled는 TalkBack이 실행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메소드이며 뒤의 AccessibilityEnabled는 어떠한 접근성 서비스든 실행되고 있을 때를 조건문으로 사용하기 위한 메소드입니다.
이제 조건문을 통해 TalkBack 혹은 접근성 서비스 중 그 무엇이라도 하나 이상이 실행되고 있을 때 이리저리하게 변경하라는 조건문을 추가하면 됩니다. if (isExploreByTouchEnabled) {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 문장. 예: 숨겨진 다음 버튼을 표시해 주세요. 롤링 되고 있는 배너를 멈추세요. }	

< 그림 1 > 코드 적용방법

기존의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있으나 이용자들에게

실효성이 높은 정책은 과거의 90년도에 행해지던 삐삐 지원사업 외에는 전무하다. 개발자와 제조사의 입장에서 장애 접근성과 관련된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기밀유지 사항에 두고 있고, 정책화가 권고사항에서 끝나 이를 실효성이 높은 정보활용 기기로의 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한, 현재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 (본인부담금 20%), 기초생활 수급자/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50% 지원으로 최대 총 90%지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각 시도에 위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근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49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대응센터의 교육·관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에 해당한다.

결과적으로 관련법령 역시 보조공학기기 지급에만 한하는 것이 안전 관리부터 교육까지의 전 부분을 통괄해야 함 인데 아직 우리나라의 보조기기 지원사업 정책은 기기를 공급하는 부분에만 치우쳐져 있음이라고 비춰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장애부분에 한해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을 공공화하여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많은 개선되고 고품질의 저비용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공학기기가 지속해서 개발이 되어 사회문제 해결 분야에 높은 접근성이 제공하고자 한다.

II. 제안 정책 내용

본 제안 정책의 대상은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으로, 시행 및 협력기관 목록은 아래< 표 1>와 같다.

〈 표 1 〉 시행 및 협력기관

시행 및 협력기관	
단체명	로고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곰두리봉사회	
도서관협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p>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p>	 <p>사단법인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p>
<p>그 외 다수</p>	

사회복지 분야에 한해 제품 개발 및 관련 코드들에 대한 OSS화 정책을 마련하고 산학 연계 R&D 및 개발과제 운영, 관련단체 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 공모전 및 지원사업 진행 등을 본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광운대 산학협력단 상담안내
02.940.5635,6
Fax. 02.942.1697

[상담신청](#)

사업공고

광운대학교 변화의 시작 산학협력단에서 출발합니다.



교의공고 2021년도 제1차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1-01-14

관리자 조회수 93

4. [작성요령] 2021년도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전신입력 사항 포함) (1).pdf, 5. [서식] 연구개발계획서(본문) 및 첨부서류 서식 (1).zip,

첨부 파일 '5'

- [공고문] 2021년도 제1차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문.pdf,
- [공고안내서] 2021년도 제1차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안내서.pdf,
- [제안요청서] 2021년도 제1차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제안요청서(RFP).pdf

구분	내용
부처명	보건복지부
날짜	2021-01-14

〈 그림 2 〉 2021년도 제1차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홈 > 뉴스

도,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지원에 적극 나선다

올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중점 사업' 발표

e-장애인신문 | paranews@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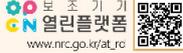


승인 2020.07.14 16:18:58



경기도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에 도움을 줄 보조기기 개발을 위한 올해 '연구지원센터 중점 사업' 을 10일 발표했다.

〈그림 3〉 장애인 보조기기 개발 지원 관련 신문기사




2022 보조기기 성과교류회

보조기기 개발에서 서비스까지

2022. 11. 07 (월) 13:00~18:00
엠베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볼룸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2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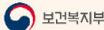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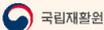
내용 노인·장애인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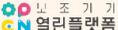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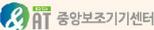
- 보조기기 메이커 페어(보조기기 개발성과 전시회)
- 중앙보조기기센터(보조기기서비스전달체계)
- 2022년 보조기기 지원사업 통합성과대회

공동 행사(세미나실)	
13:00~13:10	내빈소개 사회자
13:10~13:15	개회사 국립재활원장
13:15~13:20	인사말 중앙보조기기센터장
13:20~13:25	축사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13:25~13:30	축사 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의료기기·화장품산업 TF 팀장
13:30~13:40	보조기가지원사업 유공자장관표창 및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 우수상 시상
13:40~13:50	보조기기연구개발사업단 소개
13:50~14:00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소개

세미나실	전시실
14:15~16:00 보조기기 지원사업 통합성과대회 (중앙 및 지역보조기기센터)	13:00~18:00 보조기기 메이커 페어 (보조기기 개발성과, 보조기기센터 등)
~18:00 폐회	

문의 국립재활원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 02-901-1386 ▶E-mail : swjang226@korea.kr
 공공재활의료지원과 02-901-1959 ▶E-mail : jjm0207@korea.kr



〈 그림 4 〉 2022 보조기기 성과교류회

본 정책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보조기기의 지원 등

제12조(보조기기업체의 의무)

- ① 보조기기를 생산·판매·유통·대여·수입·수리하는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취급함에 있어 장애인등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② 보조기기업체는 보조기기를 판매·유통·대여·수리하는 경우 장애인등에게 사용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보조기기업체는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유통되어 장애인등이 사용 중인 보조기기에 대한 고장수리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장 보조기기 관련 전문인력

제15조(보조공학사 자격증 교부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의 상담·사용법 교육·정보제공 또는 생산·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하 “보조공학사”라 한다)에게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의 자격요건·종류·취득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다.
- ③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신청에 따라 자격증을 재교부한다.
- ④ 보조공학사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조기기 연구개발 및 활성화

제21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연구지원 등)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생산하는 업체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연구개발의 장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 지정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조기기 연구개발의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기기에 관한 연구개발활동 및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 정책 시행 시 아래에 대한 법률을 고려해야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9.>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신설 2011. 3. 29., 2021. 8. 17.>

③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 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비밀 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④ 원사업자는 취득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부당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하도급계약 체결 전 행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4. 17., 2021. 8. 17., 2022. 1. 11.>

1.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비밀유지계약 체결에 표준이 되는 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기업 및 상거래법상에서 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기밀유지 및 보안사항에 대한 권한보호 관련 법률이 존재하며 사회복지 분야 중 장애분야에서 장애인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기업들과 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한 기밀유지 법률 및 특허 등 지식재산권과 무형재산권을 통해 기업들의 장애보조기기 개발관련 정보들이 비공개화 되어 있어 이를 장애보조기기 개발사에서 개발하고자 하면 고액의 비용을 제공을 하거나 지원사업으로도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한다.

본 정책은 사회복지분야 예산(2023년 사회복지분야 예산 226.6조원)으로하며 산학연 연계지원사업을 통한 공동개발(ex, 시각장애인 장애보조기기 공동개발 (점자패드 : 닷)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조달하고자 한다.

닷 패드

모두를 위한 디지털 정보 접근성,
세계 최초의 실시간 반응형 촉각 디스플레이

[더 알아보기](#)

[개발자 사이트](#)



〈 그림 5 〉 닷 패드

V. 기대효과

본 정책을 통해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보조기기 개발 지원사업 및 OSS화 정책화를 통한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정보격차 문제 해소할 수 있고, 보다 다양한 OSS와 아두이노 및 IoT 프로젝트의 공개를 통해 여러 개발도상국들 및 ODA로 정보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장애보조기기 및 사회복지분야 IT 인재 양성 및 육성, 장애보조기기 관련 교육분야 및 활용 관련 콘텐츠 제작 및 교육서비스화를 통한 사회복지사의 과대한 공급량에 대한 수요량 제공을 통한 사회복지사의 채용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참고문헌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12년간 대상자 2%만 지급, 기사 출처 : 미디어오늘 -

<http://www.mediatoday.co.kr>

장애보조기능 - 앱 접근성 적용 관련

<https://nuli.navercorp.com/community/article/1133076>

<https://klausbreaktime.blogspot.com/2017/09/accessibility.html>

<https://developer.android.com/guide/topics/ui/accessibility/testing?hl=ko>

사회복지분야 예산.

<https://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908553#goList>

닷패드 개발사. <https://www.dotincorp.com/kr/>

장애보조기기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과제. <https://iacf.kw.ac.kr/iBizNotice/90630>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계획	시청각 장애인 통신장비 이용 보조기기 지원사업
결과	시각/청각 장애인 정보통신기기 교육 및 개선된 지업사업

2. 연구방법

계획	실험 및 테스트를 통한 정책 발굴
결과	보다 상세한 정책조사와 함께 정보보조기기 제작 체험

3. 정책내용

계획	직접 시청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불편사항들에 대해 이를 해 소시킬 수 있는 IoT기기를 제작하고, 사회복지요원으로 군복무를 하는 노우석 팀장과 김도영 팀원이 복무를 하면서 시청각장애인들에게 시범운영을 하거나 시청 각장애인들에게 직접 고충을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스마트폰 등을 사용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점을 해소시키도록 하는 활동을 하고자 함
결과	<p>장애등급 판정 및 주기적으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등급별 및 복지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장애 등급 초기판정 시에는 유관 국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복지예산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를 여러 번 공시하여 사회복지사가 서면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추가로 다양한 보조공학기기의 설명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배분을 제도적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어보임 (ex 초기 1시간 + 매년 1시간)</p> <p>보조 공학기기 보조금의 부분에서 구매 시 보조금을 주는 것에서 한정되는 것이 아닌 제조사와 공 무적 측면에서의 협약을 통해 구매이후에도 구매자가 충분히 이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사후교육 과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사업체에 교육비를 바우처 예산으로 편입하여 사용가 능하도록 보조하고 보조 공학기기 구매자에게 필수적으로 교육이 진행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할 필요를 요함</p> <p>보조 공학기기를 2차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기관들의 주기적인 감사와 해당 감사 시 불법적인 전항 들이 나타나는 경우 판매에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함</p> <p>기존의 기술개발 시 기술공개에 대한 관련 사항이 권고사항으로만 취급이 되었으나 이를 제도적으</p>

	로 공개기술로써 법률로 규정으로 하여 장애분야에 대한 배리어프리 기술들의 OSS화를 통해 많은 기술들을 공공화하여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구매에 대한 금전적 측면과 개발자 및 기업들의 OSS화를 통한 자유로운 기술개발/공유와 더불어 정부는 이에 대한 예산 절감으로 이어져 더 적절한 국정운영에 활용 가능 및 부적절한 예산 오남용을 방지
--	---

4. 적용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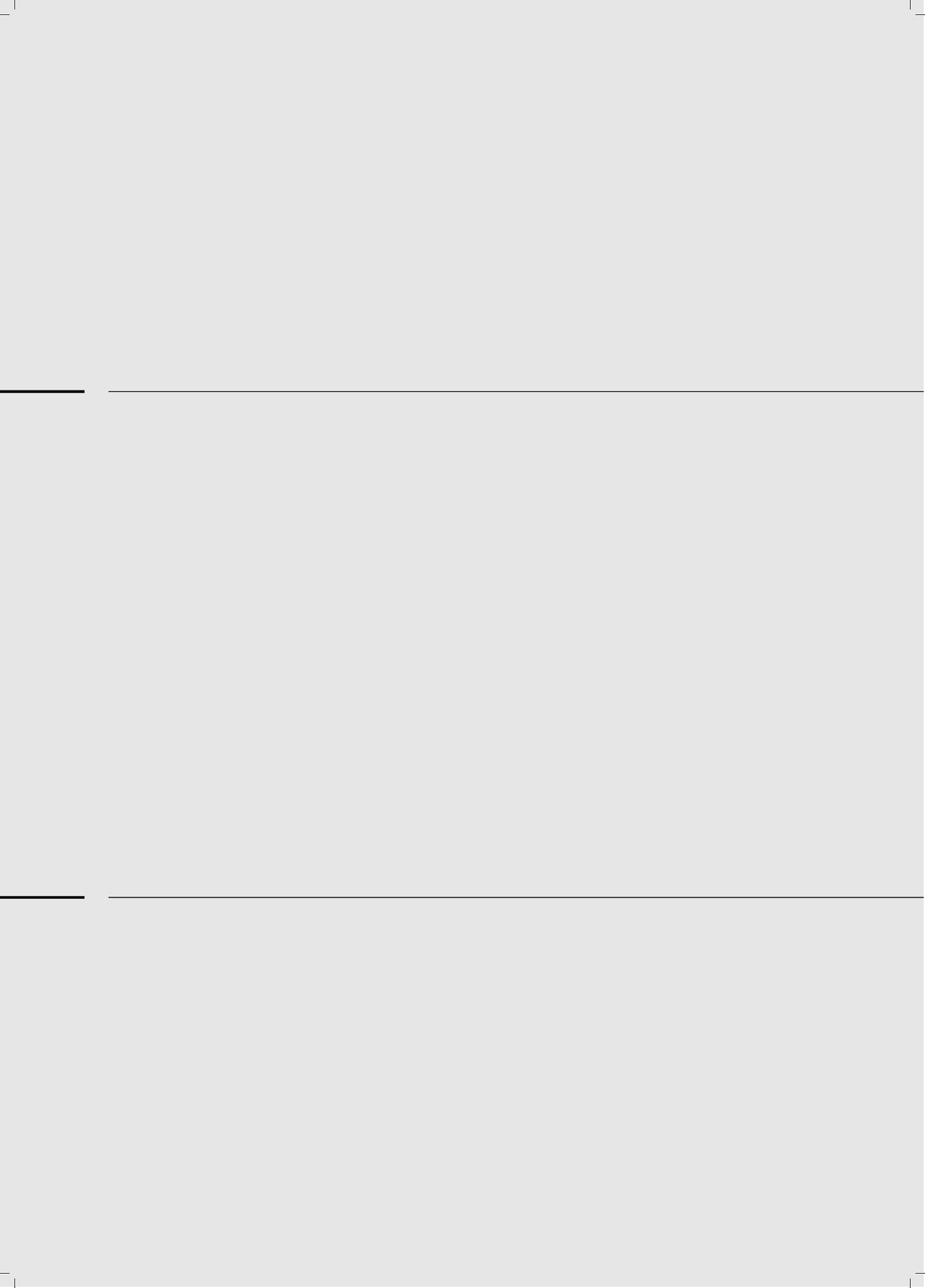
계획	실험 및 체험을 통한 사업화
결과	정책 조사를 기반으로 장애보조기기에 대한 제작 체험과 더불어 권고사항에 대한 법 제도화 적용 방안 검토

5. 기대효과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리어프리로 인한 기존의 시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 해소 -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장애보조기기 보다 낮은 가격성과 더불어 연락처 기반의 알림제공을 통해 보다 높은 신뢰성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유연한 접근성 보장 - 노안 및 고령화로 겪는 문제점 해소 - 자연어 기반 및 음성 인식 등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언어분야의 AI 기능 제공을 통해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은 정보 제공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기술개발에 대한 공개화와 OSS의 권고사항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된다면 장애보조기기를 통한 보다 높은 정보 접근성 제공과 더불어 이를 UN 및 글로벌적으로 법적 의무화를 시켜 장애보조기기에 대한 높은 개발 및 생산성 향상과 S/W 및 H/W 개발을 통해 한정된 기기생산에서 보다 자율적인 생산 및 개발로 이어짐 - 기존의 관련기관들의 한정된 인력과 자원 및 예산 오남용 사건사고들에 대한 하나의 개선으로써의 적용 - 배리어프리로 인한 기존의 시각/청각 장애인들의 어려움 해소 -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는 기존의 장애보조기기 보다 낮은 가격성과 더불어 연락처 기반의 알림제공을 통해 보다 높은 신뢰성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을 통해 유연한 접근성 보장 - 노안 및 고령화로 겪는 문제점 해소 - 자연어 기반 및 음성 인식 등 보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 언어분야의 AI 기능 제공을 통해 신뢰성과 정확성이 높은 정보 제공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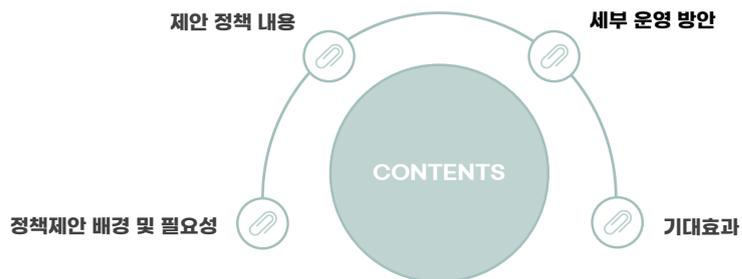
제안 8팀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탐 시대사북

INDEX



1.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안 배경

금융계 혁신

핀테크의 탄생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금융 업무 처리 가능
편리해질수록,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소외는 증대

기본권 영역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금전 관리’ 항목 요구
장애인도 차별없이 편리하게
사용가능한 핀테크는
하나의 기본권 영역에 진입

사후 책임

‘4차 산업형 장애인 인재
및 육성 고용 확대 추진’ 중
장애인 고용에서만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
즉 금전 관리에 대한 보장 필요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문제점 분석

1.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의 어려움

- ▶ 핀테크의 발전은 대중의 금융 편의를 증진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장애인들도 있음
 - 시각 장애인 : 스마트폰 사용의 불편함으로, 핀테크 이용에 있어 까다로운 본인인증 절차를 통과하기 어렵고, 간단한 금융 업무도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음 그러나 ARS 서비스도 완벽하지 않은 상황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문제점 분석

2. 최근 금융 업계의 추세

- ▶ 핀테크의 발전에 따라 효율적 경영을 위해 점포 축소
 -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은행 영업점수는 2016년 7,086개에서 2020년 6월 기준 6,526개로 집계
 - 반면에, 이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거래는 꾸준히 증가**
 -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자금융업계가 제공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 및 선급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각각 28.0%, 42.2%씩 증가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문제점 분석

3. 장애 경제인구의 증가

- 고용 문제는 해결했을지라도, 그 사후적인 소득 관리에 대한 대안 부족
- 2015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인원은 201,805명에서 2020년 기준으로 245,184명으로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2.62%에서 2.92%로 증가
- 금융업계가 제공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에 **소외를 느낄 수 있는 장애인 인구도 증가**
- 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을 보호자나 관계인이 가로채는 문제 발생 가능**
 - 발달장애인 A씨의 동의 없이 부모가 스마트폰 이체 가능

2. 정책 제안 내용

제안 정책 내용

정책 제안

“장애인 소외 방지를 위한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보호 제도”

- 장애인의 핀테크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
- 핀테크의 발달에 맞춰 금융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제시

제안 정책 내용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1.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스크린 리더 기능 호환 의무화

- 금융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스크린 리더 기능을 활용하더라도 제한이 생기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제20조에 따른 전자정보 접근 차별행위에 해당
- 현재 서비스들은 스크린 리더 기능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완벽하게 호환되지는 않음
- 따라서 스크린 리더 기능만을 이용하더라도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금융 서비스 개발 시 호환이 100% 가능하도록 의무화**

제안 정책 내용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2.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간소화 모드 도입 장려 및 인센티브 부여

- 기존의 복잡하고 밀집된 화면은 스크린 리더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혼란 초래
- 필수적인 정보들로만 구성된 **간소화 UI 화면 도입**
- 검색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다른 작업 처리에도 용이하도록 구성
- 이를 도입하는 기업 대상으로 인센티브 부여

제안 정책 내용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3. 장애인 개인의 자금 안정성 확보 및 침해 방지

- 장애인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에 목표
- 관련 범죄의 **처벌 강화**
 - 1) 본인이 아닌 타인(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회유, 설득, 무력 등에 의한 강제 송금 행위
 - 2) 본인이 아닌 타인(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회유, 설득, 무력 등에 의한 카드 결제 및 자금 사용
 - 3) 본인이 아닌 타인(가족 및 기타 관계인)의 이득을 위한 동의 없는 장애인 사적 재산 이용

제안 정책 내용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4. 장애인 지원 서비스 및 보조 기기 산업의 정부 육성

- 점자정보 단말기 등의 보조기기 산업 및 장애인 콜택시 등의 지원 서비스 산업에 대해 **세제 혜택 및 연구 지원금을 제공**
- 보조기기 산업의 경우, 수요가 적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쉽게 진입하지 않는 분야
 - 세제 혜택 및 지원금으로 진입 유인을 촉진
 - 공공 기관들의 기술 공조를 통해 낮은 가격에 더 높은 품질의 지원 가능

제안 정책 내용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5. 지역별 일정 은행 점포 수 유지를 위한 공동점포 장려

- 한 사무실에 여러 은행 점포가 입점하고 임대료를 나눠 내기에 **효율적 경영** 가능
- 비용 최소화와 오프라인 채널 접근성 개선
- 지자체별 장애 인구 분석을 통해 지자체, 동주민센터 등에 설립 추진
- 공동점포 증가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제안 정책 내용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6. 모바일 금융서비스 인증 강화

- 장애인 대상 추가 인증 절차 마련
- 인증 절차는 더 많아지지만, 인증 통과는 더 쉬워지도록
ARS, 스크린리더 기능 호환을 중점적으로 개발
- 자동으로 은행 고객센터 우선 연결을 통한 인증

3. 세부 운영 방안

세부 운영 방안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1.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스크린 리더 기능 호환 의무화

-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서비스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접근성 관련 교육의 의무 제공 및 이수**
- 재단 산하 **모니터링단**을 신설하여 스크린 리더 기능의 호환성을 감시감독
- 적발 횟수에 따라 경고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실질적 시행 확고히 유지

세부 운영 방안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2.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간소화 모드 도입 장려 및 인센티브 부여

- 간소화 모드 도입 장려 및 홍보
- '**간소화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후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장애인들이 직접 평가 및 피드백
- 우수 서비스 기업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세부 운영 방안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3. 장애인 개인의 자금 안정성 확보 및 침해 방지

- 장애인 개인 소득에 대한 **법적 장치 마련 확대 및 독립성 강화**
- 장애인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허락 없이는 부모 및 관계인이 영향력 행사 불가
 - 부양가족만을 의지하는 장애인이 어쩔 수 없이 자금을 공유하는 경우 방지
- 민사를 넘어 **형사 수준으로의 법적 처벌 강화**

세부 운영 방안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4. 장애인 지원 서비스 및 보조 기기 산업의 정부 육성

- 세제 혜택 및 연구 지원금 제공
- 관련 기술 보유한 **공공 기관과의 기술 공조 연계** 장려
- 제조 원가가 낮아지기에 지원금을 주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용 효율적**

세부 운영 방안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5. 지역별 일정 은행 점포 수 유지를 위한 공동점포 장려

- 시중 은행들의 점포 감축 계획 공유 및 공동점포 입주 계획 토의
- 공동점포 부지와 규모 설정 및 운영방안 기획
- 기존의 편의점에서 확충했던 **공동점포 장소를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
 - 동주민센터, 복지관, 구청 등으로의 확장을 위해 장애인들의 수요 조사 필요
- 공동점포를 공공기관 내에 유치 시 임대료 할인 및 세제 혜택 제공

세부 운영 방안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6. 모바일 금융서비스 인증 강화

- 기존의 비밀번호 입력, 특히 숫자 배열이 랜덤 배치되는 비밀번호 입력란은 시각 장애인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
- **장애인 본인 혼자서도 가능한 본인 인증 체계 도입**
- **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본인만이 가능한 인증 체계 필요**

4. 기대효과

기대효과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1. 경제 성장 및 활성화

- 현재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장애인들의 경제 활동과 더불어 금융 서비스로의 접근 또한 같이 늘어나면, 그만큼 **금융 시장의 규모가 증대**
- 장애인 개인 자금에 대한 안전망 강화로, **거시적인 재산 축적 및 자금 관리 증가 기대**
- 더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장려책의 기능

기대효과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2. 관련 산업 발전에 활력

- 장애인 전용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가 개발된다면,
금융 외에도 본인 인증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널리 활용 가능
- 보조 기기 산업의 활력은 하위 제조업체 산업에서의 원동력 제공
- 전반적인 시장 성장으로 인한 원가 절감과 공급의 증가

기대효과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3. 사각지대 발굴 및 선진복지국가의 기를 마련

- ESG 패러다임이 확산하는 현 상황 속,
장애인들이 소외를 느낄 수 있는 사각지대인 금융 영역을 발견
- 장애인들의 요구에 의한 제도화가 아닌, 선제적 정책 제안이라는 의의
-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부양인의 자금 이용에 대한 문제 제기

기대효과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4. 사후관리로서의 정책적 의의

- ▶ 장애인 고용 증가는 장애인 경제 활동 참가율을 증진
- ▶ 장애인 경제 활동 참가율 증가는 장애인 소득을 증가시키기에,
장애인의 금전 관리 영역도 함께 발전해야 함
- ▶ 장애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여타 정책의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정책으로서의 의의

기대효과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5.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으로서의 의의

- ▶ 최근 이슈인 전장연 지하철 시위 등은 장애인 기본권 보장에 대한 질문
- ▶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역시 생활 필수 요소인 ‘돈’과 관련된 기본권의 범주
- ▶ 접근성 개선을 통해 장애인 권리 개선의 질을 향상

기대효과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6. 세계 최초 핀테크 관련 정책으로서의 의의

- 핀테크 관련 법의 기반도 다져지지 않은 국가들이 대부분
- 이를 장애인의 권리와 연관지어 정책화 시킨 국가는 없는 실정
- 세계 최초로 관련 정책 제안을 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기반을 확립

감사합니다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

제안 8팀

〈제안 개요〉

장애인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접근성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핀테크의 발달에 맞춰 장애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를 제안한다.

제안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스크린 리더 호환을 의무화한다. 둘째,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간소화 모드 도입 장려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셋째, 장애인 개인의 자금 안정성 확보 및 침해 방지 넷째, 장애인 지원 서비스 및 보조 기기 산업의 정부 지원 육성 및 정부 지원금 보장 다섯째, 지역별 일정 은행 점포 수 유지를 위한 공동점포를 장려한다. 여섯째, 모바일 금융서비스 인증을 강화한다.

본 정책을 통해 장애 인구의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경제 성장 및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여러 산업 발전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개발은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외에, 다양한 산업의 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 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 조치로 인한 선진복지국가의 틀 마련할 수 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투명해진 사회는 마침내 포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후관리로서의 정책적,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이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I. 정책제안 배경 및 필요성

지난 몇 년 사이에 핀테크의 탄생으로 금융계 혁신이 일어났다. 스마트폰 하나를 통해 입출금, 투자, 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정 유형의 장애인은 이러한 핀테크 기술사회에서 소외를 느낄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금융은 마치 공기와 같다. 돈이 없다면 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에 금전 관리는 필수적이다. 그렇기에, 핀테크 사회에서의 소외는 곧 기본권 영역의 침해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ESG 경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지금 시대에 맞게, 새 정부도 “4차 산업혁명 장애인 인재 육성 및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고용 확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사후적 금전 관리에 대한 영역에도 책임이 필요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서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필요성은 다음을 시사한다. 청소, 교통수단, 식사, 빨래 등 기초생활 다음으로 ‘금전 관리’ 항목이 요구되었다. 코로나 19의 여파와 전례 없는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 속에서 ‘금전 관리’에 대한 목소리는 한층 더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먼저, 특정 유형의 장애인은 핀테크 사용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핀테크가 발전이 많은 사람의 금융 편의를 도운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 역시 굳이 은행, 증권사 점포에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금융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이 불편한 특정 유형 장애인에게는 반감지 않은 소식일 수 있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떠올릴 수 있겠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정보에 대한 제한으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 까다로운 본인인증 절차는 물론, 간단한 금융 업무도 시각적 정보로 표시되기 때문에 음성 인식이 가능한 ARS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러한 ARS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노령 장애인, 1인 가구 장애인의 경우 고령화에 따른 스마트폰 사용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1인 가구 장애인의 경우, 가족의 부재로 도움 요청에도 제약이 클 수 있다.

기타 스마트폰 사용에 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예를 들어, 신체 부위 중 팔과 손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스마트폰 사용 자체에 제약이 발생한다.

제한을 겪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가 제안하는 해당 정책 제안서에서는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 유형을 ‘시각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제안한다. 시각장애인을 제외한 다른 장애 유형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어려움을 정략적

으로 데이터화 할 수 없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다. 또한, 불편함을 겪는 다른 장애 유형의 범주를 선정하는 데에서도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이차적 이유이다.

핀테크 기술이 활성화되면서, 최근 금융업계는 효율적 경영을 위해 점포축소를 빠르게 이어가고 있다. 오프라인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은행 영업점수는 2016년 7,086개에서 2020년 6월 기준 6,526개로 집계되었다. 반면에, 이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거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중 전자지급서비스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자금융업계가 제공하는 전자지급 결제대행 및 선급 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실적은 전년 대비 각각 28.0%, 42.2%씩 증가했다. 앞서 언급한 문제로 대면 금융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해당 소식이 달갑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장애인 노동권 이슈, 장애인의무 고용제도와 같은 정부의 고용 정책 등으로 인해 장애인 경제 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인원은 201,805명에서 2020년 기준으로 245,184명으로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2.62%에서 2.92%로 증가했다. 새 정부에서도 장애 인구 고용 확대를 정책으로 내세웠으므로, 장애 경제인구는 증가추세는 유지거나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 해당 서비스에 유입되면서, 금융업계가 제공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이용에 소외를 느낄 수 있는 장애 인구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어려움이 클 시각 장애 비율은 전체 장애 인구 263만 명 대비 시각 장애 비율은 10.1%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고령화 장애 인구는 전체 장애 인구의 50%를 차지할 정도에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장애인의 경제 활동을 통한 소득을 보호자나 관계인이 가로채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발달장애인 A씨의 계좌로 입금된 월급을 A씨의 부모가 A씨의 동의 없이 스마트폰 이체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면식이 아니라, 비대 면식의 핀테크 인증방식은 장애인의 의사결정 반영 없이 '신분증 사진', '지문 등'으로 간편하게 인증될 수 있다.

장애인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접근성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을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핀테크의 발달에 맞춰 장애인들이 금융 분야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 접근성 보호 제도'를 제안한다.

II. 제안 정책 내용

자세한 제안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스크린 리더 호환을 의무화한다. 스크린 리더를 활용하여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제한이 생기는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제20조에 따른 전자정보 접근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동법 제 49조에 따라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행위로 취급되거나 악의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에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매우 드물다. 따라서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 시 스크린 리더 호환을 의무화하여 스크린 리더 기능만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막히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감시·감독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신고를 장려함으로써 적발 시에는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 및 개선 전까지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본 정책을 통한 스크린 리더의 개발은 사회 복지적 영역이므로 민간 개발과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사회 복지의 소프트웨어 개발은 개발, 배포의 세부적인 단계에서부터 클라이언트 지향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간소화 모드 도입 장려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제활동 참여 장애인이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원활하게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잡하고 많은 정보가 밀집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화면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고 스크린 리더를 이용할 시 원하는 정보에 더욱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비스 내의 UI 및 화면 구성을 간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모바일 금융 서비스 내에서 기존과 별개의 모드를 추가적으로 제공하여 이 모드를 선택할 경우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큰 글씨와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간소화된 UI 및 화면 구성을 지닌 화면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애인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참여율을 높인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을 제공한다.

셋째, 장애인 개인의 자금 안정성 확보 및 침해 방지하도록 한다. 장애인의 개인 재산(경제 활동, 국가 지원금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에 대한 효과는 장애인의 사적 재산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1) 장애인인 자신이 아닌 타인(가족 등을 포함하여 기타 관계인)의 회유, 설득, 무력 등을 통한 장애인의 강제 송금 행위

2) 장애인인 자신이 아닌 타인 (가족 등을 포함하여 기타 관계인)의 회유, 설득, 무력 등을 통한 장애인 명의의 카드 결제 및 기타 장애인 개인 자금 사용

3) 장애인인 자신이 아닌 타인 (가족 등을 포함하여 기타 관계인)의 무분별한 장애인 사적 재산 사용 등

위와 같은 내용 관련하여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넷째, 장애인 지원 서비스 및 보조 기기 산업의 정부 지원 육성 및 정부 지원금 보장

점자정보 단말기 등의 보조기기 산업 및 장애인 콜택시 등의 지원 서비스 산업에 세제 혜택 및 연구 지원금을 제공하여 금융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한다. 특히 보조기기 산업은 수요가 적기에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쉽게 진입하지 않는 분야로, 세제 혜택 및 지원금이 진입 유인을 촉진할 수 있으며 공공 기관들의 기술 공조를 통해 낮은 가격에 더 높은 품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섯째, 지역별 일정 은행 점포 수 유지를 위한 공동점포를 장려한다. 시중 은행 점포 수가 줄면서, 금융 취약 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이슈가 대두되었다. 시중 은행과 달리, 지역별 점포 수가 유지되고 있는 우체국 지점에서 은행의 입출금, 송금 등 단순 업무를 대행하는 방향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단순 업무만을 취급하는 것은 보호 계층에 차별적 대우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은행 간 공동점포를 장려하거나 의무화한다. 한 사무실에 여러 은행 점포가 입점하고 임대료를 나누어 낼 수 있기에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점포 운영에 대한 비용 최소화와 오프라인 채널 접근성 개선을 위한 시중 은행의 전략과 부합한다. 정부는 지역별, 인구별 요소를 고려하여 시중 은행들의 공동점포 유치를 장려함으로써, 디지털 소외 계층인 장애인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한다.

지자체별로 등록된 장애 인구를 분석하여 지자체, 동주민센터 등의 공동점포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편의점 내, 은행 점포의 한계를 공공 기관 내 은행 점포로 포용한다. 은행의 수익성 관련하여, 해당 정책으로 수익성 악화 시, 정부는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여섯째, 모바일 금융서비스 인증을 강화한다. 현재 핀테크라고 불리는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계좌 송금, 결제, 투자 등의 권한이 다소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이행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하는 기타 장애인의 관계인들로부터 안정성 및 보호망 구축을 강화한다. 초기 모바일 금융서비스 가입을 할 때,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영역 체크 표시란을 만든다. (따라서, 이들이 후에 위와 같은 송금, 결제, 투자 등의 활동을 할 때 아래와 같은 추가 인증 절차 중 하나를 밟는다)

절차 1: 텍스트로 된 추가 동의 표시

절차 2: 은행 영업시간에 해당 활동 표시시, 고객센터를 통한 전화

절차 3: 장애인이 직접 은행에 방문하는 것

관련법령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책을 위한 세부운영방안으로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스크린 리더 호환 의무화를 위해 모든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서 스크린 리더가 정상적으로 호환될 것을 의무화하고,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들은 서비스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접근성 관련 교육을 의무 제공 및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인고용재단 산하에 모니터링단을 신설하여 모바일 금융 서비스 내의 본인 인증, 간편 송금 등의 기능들이 모두 스크린 리더를 통해서 진행 가능한지 감시감독하도록 한다. 적발 시 횡수에 따라 경고, 개선 전까지 서비스 중단, 처벌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제도의 실질적인 시행을 확고히 한다.

다음으로 모바일 금융 서비스에 전용모드 도입 시 인센티브 부여의 경우 간소화 모드 도입 장려 및 홍보하고, 간소화된 모바일 금융 서비스 후기 공모전을 개최하여 소비자들이 다양한 간소화 모드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피드백과 이를 통해 증가한 장애인의 모바일 금융 서비스 참여율을 바탕으로 우수 서비스 기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장애인 개인의 자금 안정성 확보 및 침해 방지를 위해 장애인 개인의 자금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개인의 소득 (일련의 소득활동, 경제 활동, 연금 등)에 대한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장애인 개인의 의사가 반영된 확고한 허락 없이는 직계, 직속을 포함한 타인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존재할 수 있다. ‘부양가족만을 의지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개인의 자금을 공유하지 않을 시, 부양가족으로부터 차별 및 협박 등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경제 활동 소득을 파악하여, 해당 가구에 대한 사후 조사를 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의 합당한 허락이 없이, 타인이 자금을 이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강화한다.
(형사 처벌까지 고려)

장애인 지원 서비스 및 보조 기기 산업의 정부 지원 육성 및 정부 지원금 보장은 점자정보 단말기 사업에 세제 혜택 및 연구 지원금을 제공하며 지원하며 기업 및 공공 기관 간 기술 공조를 위한 연계를 장려한다. 제조 원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기업에 제공하는 지원금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무상 지원 및 할인 지원을 기존보다 확대하여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비용 효율적이다.

지역별 일정 은행 점포 수 유지를 위한 공동점포를 장려하기 위해 시중 은행들의 점포 감축 계획 공유 및 공동점포 입주 계획을 토의하도록 하고 공동점포 부지와 규모 설정 및 운영방안을 기획한다. 은행들은 개별 점포 수 감축으로 고정비를 줄이면서도 공동점포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대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기존, 편의점에서 확충했던 공동점포 장소를 공공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예컨대, 동주민센터, 복지관, 구청 등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한, 장애인의 수요 조사가 필요하다. 공동점포를 공공 기관 내에 유치하면 입점 은행에 임대료 할인,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모바일 금융서비스 인증 강화를 위해서는 현재 핀테크로 불리는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안은 지문, 패턴,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설정되며, 해당 보안절차는 타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침해될 수 있다. 예컨대, 부양인이 장애인의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 혹은 장애인에게 보안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장애 고객의 송금, 출금 관련 활동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추가로 해당 활동에 대해 관련 사항 고지를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을 장려화 한다.

V. 기대효과

본 정책을 통해 장애 인구의 적극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으로 인한 경제 성장 및 활성화할 수 있다. 현재 장애 인구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장애 인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금융 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된다면, 그만큼 금융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의 적극적인 예적금뿐만 아니라 투자 등 금융 활동을 통해 움츠러든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 추가로 위의 정책을 통한 장애인 개인 자금에 대한 안전망이 강화되어, 개인의 재산 축적 및 자금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이 더 많은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장려책이 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여러 산업 발전에 활력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금융 서비스의 개발은 장애인의 금융 접근성 외에, 다양한 산업의 발전도 촉진할 수 있다. 이를테면, 장애 전용 모바일 본인인증 서비스가 개발되면, 금융 외에도 여타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영역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다. 점자정보 단말기 산업의 육성이 활발해질 경우, 하위 제조업체들의 산업에도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시장의 성장은 곧 원가 절감과 공급의 증가를 의미하며, 장애인의 편의를 돕는다.

사각지대 발굴 및 선제 조치로 인한 선진복지국가의 틀 마련할 수 있다. 기술이 고도화되고 투명한 사회는 마침내 포용을 요구한다. 세계적으로 ESG의 패러다임이 확산하는 흐름에서 장애인이 소외를 느낄 수 있는 사각지대인 금융영역을 발견한다. 장애인의 요구에 따른 제도화가 아닌, 선제적 정책 제안은 새로운 복지 영역의 창출과 선진복지 주도를 이끌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개인 자금 사용과 관련된 부양인의 간섭, 헐박 등은 사각지대 중 사각지대로 여겨진다. 장애인의 유일한 부양인의 자금 관련 압박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제안에서 확실한 답을 제공할 수 없었던 것은, 그만큼 복잡한 사안이며 신중성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련 이를 물꼬로 앞으로의 여기에 기반을 둔 정책제안 및 법 제정 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사후관리로서의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장애인고용의 증가는 장애인의 경제 활동 참가율을 증진했다. 그러나, 장애인의 소득증가에 따른 금전 관리영역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 돈은 벌었으나, 돈을 관리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면 장애인고용 정책의 허점으로 남을 수 있다. 해당 정책은, 장애인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여타 정책의 사후관리를 도움으로써 의의가 있다.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최근 이슈되는 전장연 지하철 시위 등은 장애인 기본권에 대한 충분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발생하고 있다. 이동권 등 어떤 대상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 인권사회에서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역시 생활 필수 요소인 '돈'과 관련되어 있으며, 기본권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접근성을 높여줌으로써, 장애 권리 개선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세계 최초 핀테크 관련 정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아직 핀테크에 관한 법의 기반도 확실히 세워지지 않은 국가들이 많으며, 이미 세워진 국가에서도 이를 장애인과 연관 지어 만든 법령이나 정책제안을 찾아볼 수 없었다. 세계 최초로 관련 정책제안을 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기반을 확립할 수 있다.

참고문헌

https://fintech.or.kr/web/intropage/intropageShow.do?page_id=30581a02b19a43be8fe80900053d0b53,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포털]

<https://www.law.go.kr/LSW/lSRvsRsnListP.do?lsId=013235&chrClsCd=010202&lsRvsGubun=all>,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https://blog.toss.im/article/tinyquestions-disability-1>, “핀테크는 장애인의 금융 생활도 편하게 바꿨을까?”, toss feed

[장애인의 금융이용 제약 해소 방안], 금융위원회, 2014. 4

<http://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05>, “시각장애인 우리도 돈 뽑고 싶어요”, 대한금융신문

정책연구 진행경과 대조표

1. 정책명

계획	장애인 소외 방지를 위한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보호 제도
결과	장애인 소외 방지를 위한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 보호 제도

2. 연구방법

계획	자료조사 및 인터뷰&설문조사
결과	자료조사 및 인터뷰&설문조사

3. 정책내용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크린리더 호환 의무화 2. 간소화 모드 도입 장려 및 인센티브 부여 3. 점자정보 단말기 산업 육성 4. 공동점포 장려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크린리더 호환 의무화 2. 간소화 모드 도입 장려 및 인센티브 부여 3. 장애 개인의 자금 안정성 확보 및 침해 방지 4. 장애인 지원 서비스 및 보조 기기 산업의 정부 지원 육성 5. 공동점포 장려 6. 모바일 금융서비스 인증 강화

4. 적용방안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니터링단 신설 및 스크린 리더 기능 적용 평가 2. 간소화 모드의 도입 및 체험단을 통해 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 3. 세제 혜택 및 연구 지원금 제공과 더불어 기술 공조 장려 4. 공동점포 입주 및 운영으로 오프라인 비용 감축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니터링단 신설 및 스크린 리더 기능 적용 평가 2. 간소화 모드의 도입 및 체험단을 통해 평가 후 인센티브 부여 3. 장애인 개인의 자금 안정성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4. 점자정보 단말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조기기 산업들에 세제 혜택 및 연구 지원금 제공과 더불어 기술 공조 장려 5. 공동점포 입주 및 운영으로 오프라인 비용 감축 6. 본인 이외 부양인 등 타인의 경우에는 추가 인증 절차 필요

5. 기대효과

계획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 성장 및 활성화 2. 여러 기초 산업 발전 3. 사각지대 발굴 및 선진복지 주도 4. 사후관리로서의 정책적 의의
결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경제 성장 및 활성화 2. 여러 기초 산업 발전 3. 사각지대 발굴 및 선진복지 주도 4. 사후관리로서의 정책적 의의 5. 사회경제적 권리의 보장 6. 세계 최초 핀테크 관련 정책으로서의 의의

2022
장애인 분야 정책
아이디어 해커톤대회
정책제안 발표회 자료

발 간 한국장애인재단
발간월 2022년 12월
주 소 서울시 중구 통일로 86
한국장애인재단 홈페이지 www.herbnanum.org
전 화 02-6399-6235